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2022년 3월 31일(목) 09:10~17:2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주최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자료집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8:40~09:10	등록 및 접수
09:10~09:5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김태동 차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p> <p>[개회식] 개 회 사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 환 영 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대독 및 인사말)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p>
09:50~10:00	휴식
10:00~10:3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p> <p>[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p>
10:30~10:40	휴식
10:40~12:40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p> <p>『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공통주제 발표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 이경목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p> <p>[토론] 임 진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p>
12:40~14:00	오찬

시 간	내 용
14:00~16:00	<p>사회 :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p> <p>[학회별 주제 발표]</p> <p>“통합과 공존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p>“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p>“초광역권 협력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교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 -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 정동섭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p>“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p>[토론]</p> <p>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16:00~16:20	휴식
16:20~17:00	<p>사회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p> <p>[종합토론]</p> <p>한국정치학회 회 장 임성학 한국경제학회 회 장 이종화 한국경영학회 회 장 한상만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이호영</p>
17:00~17:20	<p>사회 : 이호영 한국사회학회 부회장</p> <p>[초청연설]</p> <p>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p>

Contents

[개회식]	1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
[공통주제 발표]	
◆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53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71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81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	97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학회별 주제 발표]	
◆ 통합과 공존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	115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 기본방향	139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초광역권 협력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153
(신진교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섭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	165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종합토론]	185
[초청연설]	186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개회사 I 한상만

- 한국경영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하나투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전)한국마케팅학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복잡계학회 회장



환영사 I 정해구

-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전)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축사 I 권영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사 대독)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회의원(4선)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축사 I 박병석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 제21대 국회의원 (16~21대 국회의원 / 6선, 대전 서구(갑))
- 1999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축사 I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부회장
- 최종현 학술원 이사장
- SK(주) 대표이사 회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경영학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이윤철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전)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 (전)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및 원장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경제학회 이사
- (전)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전)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현)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 (현)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 (전)한국이민학회 회장



강우창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호주국립대 전임강사



김성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국립싱가포르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학·경제학·사회학·경영학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한국경영학회: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정치):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외교·안보): 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조사의 개요

□ 연구팀의 구성

-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의 네 학회 회장들이 모여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합의
- 각 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5인이 모여서, 설문 문항 개발,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공동으로 준비(연구팀장: 설동훈 교수)

□ 문항 개발

- 4대 학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문항과 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문항으로 구분. 공통문항은 5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 협의를 거쳐서 확정
- 공통문항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 분야)인데,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약,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등 경험적 자료는 물론이고, 각 학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쟁점을 반영

□ 실사

- 실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 조사방식: 웹조사(web survey)
- 대통령선거 종료 이틀 후인 3월 11일(금) 오후 5시부터 17일(목) 오후 6시까지 6일간 시행
-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각 학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명부를 한국갤럽에 제공 → 한국갤럽에서는 문자와 이메일로 응답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동일인 중복 응답 차단) → 학회별 목표 표본 300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응답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단, 3월 14일(일)까지 응답은 모두 허용) → 학회별 최소 표본을 당초 250명으로 하였으나, 응답자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된 3월 17일 오후 6시 조사 종료
- 최종 응답자 수: 총 1086명(한국경영학회 308명, 한국경제학회 210명, 한국사회학회 268명, 한국정치학회 300명)

□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1086)	100.0	최종학위 취득 연도		
학회 소속			1980년대 이전	(124)	11.4
한국경영학회	(308)	28.4	1990년대	(253)	23.3
한국경제학회	(210)	19.3	2000년대	(297)	27.3
한국사회학회	(268)	24.7	2010년대	(357)	32.9
한국정치학회	(300)	27.6	2020년대	(55)	5.1
성별			직장 형태		
남성	(824)	75.9	대학	(810)	74.6
여성	(262)	24.1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99)	9.1
연령			기업 및 기타 민간 연구소	(56)	5.2
30대 이하	(112)	10.3	정부·지방자치단체	(29)	2.7
40대	(288)	26.5	기업	(50)	4.6
50대	(341)	31.4	기타	(23)	2.1
60대	(249)	22.9	없음	(19)	1.7
70대 이상	(96)	8.8	직장 소재지역		
교육수준			수도권(강원포함)	(685)	63.1
대학원 석사 이하	(38)	3.5	충청권	(149)	13.7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1048)	96.5	경상권	(165)	15.2
			전라권(제주포함)	(79)	7.3
			외국	(8)	0.7

II. 정책현안 조사 결과

□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표 2>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섯 분야 모두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우위

- 현실의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자들의 비판적 평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 여섯 분야 간 상대적 비교

- 기업 분야 > 문화·교육 분야 > 외교·안보 분야 > 경제 분야 > 사회 분야 > 정치 분야

<표 2> 여섯 개 정책 분야별 ‘현재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단위: %, %p, 점수; N=1086)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 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 지 않다	계	긍정 ①+②	부정 ③+④	긍정·부정	(평균)
정치 분야	1.6	15.9	49.5	33.0	100.0	17.5	82.5	-65.0	(1.86)
외교·안보 분야	4.1	34.1	44.0	17.8	100.0	38.2	61.8	-23.6	(2.25)
경제 분야	2.4	30.3	47.8	19.5	100.0	32.7	67.3	-34.6	(2.16)
기업 분야	2.9	38.7	43.6	14.9	100.0	41.5	58.5	-16.9	(2.29)
사회 분야	1.4	28.3	54.0	16.4	100.0	29.7	70.3	-40.7	(2.15)
문화·교육 분야	3.9	35.5	46.3	14.4	100.0	39.3	60.7	-21.4	(2.29)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 51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성 평가

- <표 3-1> “다음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중요도 지수 1’(표 3-1)과 ‘중요도 지수 2’(표 3-2)로 평가: 전자는 중요 - 보통 - 중요하지 않음의 분포에 주목; 후자는 중요한 정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 산출

○ <표 3-2> 중요도 지수 1. 상위 13개 정책과제

-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6 공교육 내실화
-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 11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1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 1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 <표 3-3> 중요도 지수 2. 상위 13개 정책과제

- 1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2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 3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4 공교육 내실화
-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6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 7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 9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10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 11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12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 1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 개별 정책과제의 순위에 주목하는 두 지수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상위 정책과제와 하위 정책과제의 집단을 묶으면 두 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음

〈표 3-1〉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성 평가

정책과제	분야	① 매우 중요하 다	② 중요 하다	③ 대체 로 중요 한 편이 다	④ 어느 쪽도 아 니다	⑤ 별로 중요하 지 않은 편이다	⑥ 중요 하지 않 다	⑦ 전혀 중요하 지 않다	계	긍정 ① +②+③	부정 ⑤ +⑥+⑦	긍정- 부정	순위	(평균)	순위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086)													
1.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3. 경제 안정을 위한 기재부채 관리 4.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5.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6.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7.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8.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9. 소득 불평등 축소 10. 공교육 내실화 11.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2. 대학 서열체계 해소 13. 노동시장 유연화 14.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5.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16.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7.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18.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19. 중소·벤처기업 지원 20.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21.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2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23.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5. 사회적 경제 활성화 26.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경제	21.9	30.3	29.6	6.0	7.0	3.9	1.4	100.0	81.8	12.2	69.5	41	(5.37)	40
	경제	30.8	36.3	23.3	4.3	3.9	1.2	0.2	100.0	90.4	5.2	85.2	23	(5.82)	22
	경제	33.2	40.4	22.7	1.7	1.7	0.2	0.1	100.0	96.4	1.9	94.5	3	(6.01)	7
	경제/기업	24.0	38.2	26.6	6.1	3.6	1.0	0.5	100.0	88.9	5.1	83.8	26	(5.68)	30
	경제/기업	27.7	33.2	27.7	5.4	3.9	1.2	0.8	100.0	88.7	5.9	82.8	28	(5.69)	29
	기업	34.9	33.5	25.1	3.9	1.8	0.4	0.4	100.0	93.6	2.6	91.0	11	(5.93)	12
	사회	23.7	38.1	28.9	5.5	2.4	0.9	0.5	100.0	90.7	3.8	86.9	17	(5.71)	28
	사회	34.6	33.1	22.7	4.9	2.9	1.1	0.7	100.0	90.4	4.7	85.7	22	(5.86)	19
	경제	35.7	31.8	23.1	5.1	2.7	1.3	0.4	100.0	90.6	4.3	86.3	18	(5.87)	17
	문화·교육	42.8	37.5	14.5	3.3	1.3	0.4	0.3	100.0	94.8	1.9	92.8	6	(6.15)	4
	경제/문화·교육	35.5	33.4	19.2	6.7	3.7	0.6	0.8	100.0	88.1	5.2	83.0	27	(5.85)	21
	문화·교육	20.6	20.9	22.9	11.7	11.2	7.2	5.4	100.0	64.5	23.8	40.6	51	(4.85)	51
	경제/기업	21.9	29.0	20.1	8.9	7.7	7.9	4.4	100.0	71.0	20.1	50.9	49	(5.07)	50
	경제/기업	48.9	36.6	11.8	1.7	0.7	0.3	0.0	100.0	97.3	1.0	96.3	1	(6.30)	2
	기업	22.2	26.9	23.8	11.2	7.3	5.1	3.6	100.0	72.8	15.9	56.9	47	(5.16)	46
	경제/사회	23.1	36.4	28.2	6.6	3.9	1.2	0.6	100.0	87.7	5.7	82.0	31	(5.62)	33
	경제	33.2	37.6	21.9	4.2	1.8	0.4	0.8	100.0	92.7	3.0	89.7	14	(5.92)	13
	기업	31.3	41.3	19.5	4.4	2.1	0.9	0.4	100.0	92.2	3.4	88.8	16	(5.91)	15
	기업	19.5	40.2	30.2	6.4	2.7	0.6	0.4	100.0	90.0	3.7	86.3	19	(5.64)	32
	기업	27.2	38.2	23.4	5.2	4.4	1.0	0.6	100.0	88.8	6.0	82.8	29	(5.73)	27
	기업	26.5	32.1	23.7	9.3	5.1	2.0	1.3	100.0	82.3	8.4	73.9	38	(5.55)	37
	기업	26.2	43.9	23.2	4.1	2.3	0.1	0.3	100.0	93.3	2.7	90.6	12	(5.86)	18
	기업	26.0	31.8	26.8	7.9	5.9	0.9	0.7	100.0	84.5	7.6	77.0	35	(5.58)	35
	기업	31.8	32.8	23.1	6.9	3.5	1.3	0.6	100.0	87.7	5.4	82.2	30	(5.76)	26
	기업	19.2	30.3	27.6	9.5	7.0	4.4	2.0	100.0	77.1	13.4	63.6	44	(5.24)	44
	기업	10.3	32.7	32.0	14.3	7.1	1.9	1.7	100.0	75.0	10.8	64.2	43	(5.12)	48

(단위: %, %op, 순위, 점수, 순위; N=1086)

정책과제	분야	① 매우 중요하 다	② 중요 하다	③ 대체 로 중요 한 편이 다	④ 어느 쪽도 아 니다	⑤ 별로 중요하 지 않은 편이다	⑥ 중요 하지 않 다	⑦ 전혀 중요하 지 않다	계	공정 ① 부정 +②+③ +⑥+⑦	순위 (평균)	순위			
27.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28.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29.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30. 국회 개혁(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31.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32.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33. 선거제도 개혁 34.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35. 국방력 강화 36.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37. 한일관계 개선 38.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39.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40.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41. 이민정책 체계화 42.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43.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44.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45.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46.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47.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48.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49.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50.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51.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경제/사회	33.7	32.4	21.5	5.6	4.3	1.5	1.0	100.0	87.6	6.8	80.8	33	(5.77)	25
	정치	23.0	25.0	22.2	9.9	10.4	5.2	4.2	100.0	70.3	19.8	50.5	50	(5.08)	49
	정치	23.8	25.8	20.2	12.0	9.8	5.1	3.4	100.0	69.8	18.2	51.6	48	(5.13)	47
	정치	42.4	27.1	17.4	7.1	3.9	1.6	0.6	100.0	86.8	6.1	80.8	34	(5.90)	16
	정치	32.9	30.8	18.9	9.4	5.6	1.7	0.7	100.0	82.5	8.1	74.4	37	(5.68)	31
	정치	34.3	21.1	18.0	11.5	7.5	4.6	3.0	100.0	73.4	15.1	58.3	46	(5.37)	41
	정치	30.8	27.9	22.4	10.7	5.2	2.1	1.0	100.0	81.0	8.3	72.7	40	(5.58)	36
	정치	38.3	34.2	17.1	6.0	2.9	0.8	0.6	100.0	89.6	4.4	85.2	24	(5.94)	10
	외교·안보	33.2	34.9	22.1	5.6	2.2	1.1	0.8	100.0	90.2	4.1	86.1	21	(5.85)	20
	외교·안보	33.9	36.7	21.4	4.9	1.7	0.8	0.6	100.0	92.0	3.1	88.9	15	(5.91)	14
	외교·안보	19.6	30.1	29.1	10.5	6.7	2.5	1.5	100.0	78.8	10.7	68.1	42	(5.32)	42
	외교·안보	46.9	36.9	12.9	2.5	0.4	0.4	0.1	100.0	96.7	0.8	95.9	2	(6.26)	3
	외교·안보	29.9	43.0	20.9	3.8	2.0	0.2	0.2	100.0	93.8	2.4	91.4	8	(5.94)	9
	경제/사회	64.9	22.4	8.6	1.5	1.7	0.4	0.6	100.0	95.9	2.7	93.2	5	(6.44)	1
	사회	15.9	31.4	36.2	9.7	4.8	1.4	0.6	100.0	83.5	6.8	76.7	36	(5.37)	39

주: 평균은 역코딩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표 3-2〉 51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 순위: 지수 1

(단위: %p; N=1086)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1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1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경제/기업	96.3	27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경제/문화·교육	83.0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외교·안보	95.9	28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경제/기업	82.8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경제	94.5	29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기업	82.8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	93.6	30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	82.2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경제/사회	93.2	31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경제/사회	82.0
6	공교육 내실화	문화·교육	92.8	32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교육	81.2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사회	91.8	33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	80.8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외교·안보	91.4	34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	80.8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사회	91.4	35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77.0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문화·교육	91.1	36	이민정책 체계화	사회	76.7
11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기업	91.0	37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정치	74.4
1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기업	90.6	38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기업	73.9
1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사회	90.0	39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문화·교육	72.8
14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경제	89.7	40	선거제도 개혁	정치	72.7
15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외교·안보	88.9	41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경제	69.5
16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기업	88.8	42	한일관계 개선	외교·안보	68.1
17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	86.9	43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기업	64.2
18	소득 불평등 축소	경제	86.3	44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	63.6
19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업	86.3	45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사회	61.7
20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	86.2	46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정치	58.3
21	국방력 강화	외교·안보	86.1	47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기업	56.9
22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회	85.7	48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정치	51.6
23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경제	85.2	49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기업	50.9
24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정치	85.2	50	지법분권 강화(지법지치,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	50.5
25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사회	84.9	51	대학 서열체계 해소	문화·교육	40.6
26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경제/기업	83.8				

주: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표 3-3> 51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 순위: 지수 2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2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2
1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경제/사회	(6.44)	27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기업	(5.73)
2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경제/기업	(6.30)	28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	(5.71)
3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외교·안보	(6.26)	29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경제/기업	(5.69)
4	공교육 내실화	문화·교육	(6.15)	30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경제/기업	(5.68)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	(6.06)	31	사범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정치	(5.68)
6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문화·교육	(6.05)	32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업	(5.64)
7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경제	(6.01)	33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경제/사회	(5.62)
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사회	(5.94)	34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사회	(5.59)
9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외교·안보	(5.94)	35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5.58)
10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정치	(5.94)	36	선거제도 개혁	정치	(5.58)
11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사회	(5.93)	37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기업	(5.55)
12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기업	(5.93)	38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교육	(5.46)
1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경제	(5.92)	39	이민정책 체계화	사회	(5.37)
14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외교·안보	(5.91)	40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경제	(5.37)
15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기업	(5.91)	41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정치	(5.37)
16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	(5.90)	42	한일관계 개선	외교·안보	(5.32)
17	소득 불평등 축소	경제	(5.87)	43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문화·교육	(5.29)
18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기업	(5.86)	44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	(5.24)
19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회	(5.86)	45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사회	(5.19)
20	국방력 강화	외교·안보	(5.85)	46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기업	(5.16)
21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경제/문화·교육	(5.85)	47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정치	(5.13)
2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경제	(5.82)	48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기업	(5.12)
2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사회	(5.79)	49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	(5.08)
24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	(5.78)	50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기업	(5.07)
25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	(5.77)	51	대학 서열체계 해소	문화·교육	(4.85)
26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	(5.76)				

주: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정치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1>. “정치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85.2%p,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80.8%p,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74.4%p, 선거제도 개혁 72.7%p,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58.3%p,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51.6%p,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50.5%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없다 38.7%,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23.8%,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19.3%,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15.9%,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14.7%,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13.7%, 선거제도 개혁 12.2%,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11.8% 순
- 정치학자: 없다 39.8%,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23.1%,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18.4%, 선거제도 개혁 15.4%,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14.4%,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13.4%,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12.4%,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11.0% 순
- ‘잘할 것’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기대하는 응답자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음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선거제도 개혁’을 지적인 비율이 약간 높음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47.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30.4%,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23.8%,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22.1%,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18.0%,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15.3%, 없다 12.2%, 선거제도 개혁 10.9% 순
- 정치학자: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50.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30.1%,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19.4%,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18.1%,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17.7%,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17.4%, 없다 14.7%, 선거제도 개혁 10.0% 순
- ‘잘못할 것’으로 ‘검찰 개혁’을 고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기대하는 응답자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음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23.8% < 잘못할 것 30.4%
- 정치학자: 잘할 것 23.1% < 잘못할 것 30.1%

〈표 4-1〉 정치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단위: %, 점수, %)

정치 분야 정책과제	정책의 중요도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지수 1	지수 2	전체(N=1086)				전체(N=1086)			
	(%)	(점수)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행정수도 이전 등)	50.5	(5.08)	7.6	4.1	11.8	7.4	5.0	12.4	7.4	7.9
권력구조 개편(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51.6	(5.13)	12.2	7.1	19.3	12.4	6.0	18.4	10.6	11.5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80.8	(5.90)	6.2	7.6	13.7	5.7	5.4	11.0	11.4	12.4
사법 개혁(대배심제 도입 등)	74.4	(5.68)	6.6	8.1	14.7	5.7	8.7	14.4	6.4	11.6
검찰 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58.3	(5.37)	7.7	8.2	15.9	8.0	5.4	13.4	32.8	14.7
선거제도 개혁	72.7	(5.58)	5.1	7.2	12.2	6.0	9.4	15.4	3.9	7.0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85.2	(5.94)	13.8	9.9	23.8	13.4	9.7	23.1	14.7	15.7
기타	-	-	2.0	1.4	3.4	1.7	2.7	4.3	0.7	0.5
없다	-	-	38.7	38.7	77.3	39.8	39.8	79.6	12.2	12.2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	-	7.7	7.7	-	8.0	8.0	-	6.5
계	-	-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2>.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95.9%p,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91.4%p,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88.9%p, 국방력 강화 86.1%p, 한일관계 개선 68.1%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한일관계 개선 44.1%, 국방력 강화 41.7%,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33.6%,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18.6%, 없다 17.5%,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12.5% 순
- 정치학자: 한일관계 개선 48.2%, 국방력 강화 45.8%,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28.8%,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19.7%, 없다 15.7%,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10.4% 순
- ‘한일관계 개선’과 ‘국방력 강화’에 기대를 거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인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을 지적인 비율은 4순위로 처짐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56.9%,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42.1%,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26.1%, 없다 19.1%, 한일관계 개선 17.1%, 국방력 강화 9.7% 순
- 정치학자: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57.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45.5%,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26.1%, 없다 17.4%, 한일관계 개선 17.1%, 국방력 강화 9.0% 순
- ‘잘못할 것’으로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을 고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33.6% < 잘못할 것 42.1%
- 정치학자: 잘할 것 28.8% < 잘못할 것 45.5%
- 전체 응답자보다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격차가 더 큼

〈표 4-2〉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경제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3>. “경제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6.3%p,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94.5%p,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3.2%p,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89.7%p, 소득 불평등 축소 86.3%p,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85.2%p,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83.8%p,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83.0%p,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82.8%p,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82.0%p,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80.8%p,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69.5%p, 노동시장 유연화 50.9%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노동시장 유연화 39.0%,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21.7%,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3.8%, 없다 12.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0.2%,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7.6%,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7.2%,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3.9%,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3.3%,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2.3%, 소득 불평등 축소 2.0%,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3% 순
- 경제학자: 노동시장 유연화 39.3%,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36.0%,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30.3%,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25.1%,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15.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0.9%,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9.0%, 없다 6.2%,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5.2%,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4.3%,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2.8%,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4%, 소득 불평등 축소 0.9%,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0.0% 순
-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잘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이 두 과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임. 3위는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임
- 전체 응답자와 경제학자의 차이 크지 않음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소득 불평등 축소 49.0%,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6.8%,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7.9%,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17.2%,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3.4%,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5%, 노동시장 유연화 9.3%, 없다 7.9%,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7.8%,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7.5%,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7.3%,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6.7%,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6.6%,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1.2% 순
- 경제학자: 소득 불평등 축소 37.0%,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5.6%,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9.0%,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19.0%,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5.2%, 없다 13.7%,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13.7%,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9.5%, 노동시장 유연화 8.1%,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7.6%,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5.7%,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5.2%,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3.8%,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0.5% 순

- ‘잘못할 것’으로 ‘소득 불평등 축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꼽은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와 경제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잘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음. 그러나 그 비율이 높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13.8% > 잘못할 것 9.5%
 - 경제학자: 잘할 것 25.1% > 잘못할 것 5.7%
 - 전체 응답자보다 경제학자들이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에 대해 더 많이 기대

〈표 4-3〉 경제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단위: %, 점수, %)

경제 분야 정책과제	정책의 중요도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지수 1	지수 2	전체(N=1086)		한국경제학회(N=210)		전체(N=1086)		한국경제학회(N=210)	
	(%)	(점수)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69.5	(5.37)	23.0	7.2	30.2	26.5	9.5	36.0	4.6	2.0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85.2	(5.82)	12.0	12.3	24.3	17.5	12.8	30.3	5.7	2.1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94.5	(6.01)	3.4	3.8	7.2	2.4	2.8	5.2	3.2	4.1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83.8	(5.68)	9.9	11.8	21.7	8.5	7.1	15.6	0.5	0.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82.8	(5.69)	1.1	2.2	3.3	0.5	1.9	2.4	17.6	9.2
소득 불평등 축소	86.3	(5.87)	0.7	1.3	2.0	0.0	0.9	0.9	33.6	15.4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83.0	(5.85)	4.1	6.2	10.2	5.2	5.7	10.9	2.8	4.0
노동시장 유연화	50.9	(5.07)	23.1	15.8	39.0	18.5	20.9	39.3	3.8	5.5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6.3	(6.30)	6.2	7.6	13.8	11.8	13.3	25.1	3.1	6.4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82.0	(5.62)	0.1	1.2	1.3	0.0	0.0	0.0	3.7	9.8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89.7	(5.92)	1.6	6.0	7.6	0.9	8.1	9.0	2.0	5.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80.8	(5.77)	0.8	1.5	2.3	0.9	1.9	2.8	3.8	13.4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3.2	(6.44)	0.9	2.9	3.9	0.5	3.8	4.3	7.6	10.3
기타	-	-	0.5	0.7	1.2	0.5	0.9	1.4	.2	0.3
없다	-	-	12.6	12.6	25.2	6.2	6.2	12.4	7.9	7.9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	-	6.8	6.8	-	4.2	4.2	-	3.5
계	-	-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기업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4>. “기업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6.3%p,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91.0%p,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90.6%p,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8.8%p, 중소·벤처기업 지원 86.3%p,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83.8%p,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82.8%p,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82.8%p,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82.2%p,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77.0%p,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73.9%p,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64.2%p, 사회적 경제 활성화 63.6%p,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56.9%p, 노동시장 유연화 50.9%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노동시장 유연화 40.3%,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29.9%,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29.2%,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19.9%,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13.3%,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1.8%, 없다 10.8%, 중소·벤처기업 지원 6.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4.3%,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3.9%,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2.8%,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1.7%,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1.7% 순
- 경영학자: 노동시장 유연화 38.1%,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31.3%,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28.1%,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18.7%,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4.2%,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9.7%, 중소·벤처기업 지원 9.7%, 없다 8.1%,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5.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4.5%,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3.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3.5%,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3.2%,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9%, 사회적 경제 활성화 2.6%,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1.9% 순
- ‘노동시장 유연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를 잘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에 비해 경영학자는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36.2%,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7.1%,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23.4%,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16.1%, 사회적 경제 활성화 13.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11.8%, 노동시장 유연화 10.4%,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0.0%, 없다 8.6%,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7.3%,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5.7%,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5.3%, 중소·벤처기업 지원 3.8%,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2.9%,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2.9%,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2.4% 순
- 경영학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31.6%,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24.8%, 안전한 일

- 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19.4%,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17.7%, 노동시장 유연화 15.8%, 사회적 경제 활성화 13.5%,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0.0%, 없다 8.7%,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8.7%,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7.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6.8%,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6.1%,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4.8%,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4.2%,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3.5%, 중소·벤처기업 지원 3.2% 순
- ‘잘못할 것’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을 꼽은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와 경영학자의 차이 거의 없음

○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잘할 것이라는 응답율이 훨씬 높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29.2% > 잘못할 것 2.9%
- 경영학자: 잘할 것 31.3% > 잘못할 것 4.8%
- 전체 응답자보다 경영학자들이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해 더 많이 기대

〈표 4-4〉 기업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단위: %, 점수, %)

기업 분야 정책과제	정책의 중요도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전체(N=1086)		한국경영학회(N=308)		전체(N=1086)		한국경영학회(N=308)	
	지수 1 (%)	지수 2 (점수)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	83.8	(5.68)	11.2	8.7	19.9	11.3	7.4	18.7	1.7	2.4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82.8	(5.69)	1.3	1.0	2.3	1.6	1.3	2.9	19.2	7.8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91.0	(5.93)	1.0	0.7	1.7	1.3	1.9	3.2	4.1	3.1
노동시장 유연화	50.9	(5.07)	31.1	9.2	40.3	31.0	7.1	38.1	7.2	3.2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6.3	(6.30)	5.6	6.2	11.8	5.8	8.4	14.2	5.9	4.1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56.9	(5.16)	1.7	1.0	2.8	1.9	1.6	3.5	12.7	10.7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8.8	(5.91)	14.5	14.6	29.2	16.1	15.2	31.3	1.3	1.7
중소·벤처기업 지원	86.3	(5.64)	2.1	4.1	6.2	3.5	6.1	9.7	1.7	2.1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82.8	(5.73)	12.2	17.7	29.9	11.6	16.5	28.1	2.1	3.6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73.9	(5.55)	4.1	9.2	13.3	2.6	7.1	9.7	0.9	1.9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90.6	(5.86)	1.7	2.7	4.3	1.3	3.2	4.5	6.9	9.2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77.0	(5.58)	0.6	1.1	1.7	1.0	1.0	1.9	17.7	18.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82.2	(5.76)	0.6	1.7	2.3	.6	2.9	3.5	2.9	8.9
사회적 경제 활성화	63.6	(5.24)	0.5	1.6	2.0	1.3	1.3	2.6	5.1	8.7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64.2	(5.12)	0.8	3.0	3.9	1.0	4.2	5.2	1.8	3.5
기타	-	-	0.1	0.2	0.3	0.0	0.3	0.3	0.3	0.0
없다	-	-	10.8	10.8	21.6	8.1	8.1	16.2	8.6	8.6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	-	6.6	6.6	-	6.4	6.4	-	3.5
계	-	-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사회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5>. “사회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3.2%p,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91.8%p,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91.4%p,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90.0%p,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86.9%p,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86.2%p,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85.7%p,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84.9%p,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82.0%p,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80.8%p, 이민정책 체계화 76.7%p,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61.7%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39.9%,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33.6%,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31.1%, 없다 20.2%,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8.0%,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7.7%,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6.6%,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6.0%,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4.1%,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3.8%, 이민정책 체계화 3.8%,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2.9%,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2.6%,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1.6% 순
- 사회학자: 없다 37.6%,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33.8%,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33.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20.7%,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6.4%,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5.3%,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4.1%,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3.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3.0%, 이민정책 체계화 3.0%,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1%,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0.8%,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0.8%,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0.4% 순
-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을 잘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그렇지만 ‘잘할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4위
- 전체 응답자에 비해 사회학자는 ‘잘할 것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31.0%,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27.3%,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8.2%,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18.2%,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17.5%,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16.7%, 이민정책 체계화 13.5%,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2.2%,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10.3%, 없다 9.0%,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5.0%,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5.0%,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2.8%,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1.0% 순
- 사회학자: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47.7%,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46.2%,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19.5%,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18.4%,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2.0%,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11.7%,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10.5%, 이민정책 체계화 9.4%,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5.3%,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4.5%, 없다 4.1%,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1.9%,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1.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0.8% 순

- ‘잘못할 것’으로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꼽은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는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을 1순위로 지적하지만, 사회학자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1순위로 지적

○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훨씬 높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8.0% < 잘못할 것 18.2%
- 사회학자: 잘할 것 5.3% < 잘못할 것 12.0%
- 전체 응답자보다 사회학자들이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낮음

〈표 4-5〉 사회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단위: %, 점수, %)

사회 분야 정책과제	정책의 중요도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지수 1	지수 2	전체(N=1086)				전체(N=1086)			
	(%)	(점수)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86.9	(5.71)	28.5	11.3	39.9	23.3	10.5	33.8	2.1	0.6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 안정 지원	85.7	(5.86)	16.9	14.3	31.1	11.3	9.4	20.7	11.4	6.1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82.0	(5.62)	0.9	2.0	2.9	0.4	0.8	1.1	8.1	4.1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80.8	(5.77)	2.1	3.9	6.0	0.8	2.3	3.0	9.2	7.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3.2	(6.44)	4.2	3.8	8.0	3.0	2.3	5.3	11.2	7.0
이민정책 체계화	76.7	(5.37)	1.8	1.9	3.8	1.5	1.5	3.0	6.5	7.0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90.0	(5.79)	2.8	3.9	6.6	2.6	3.8	6.4	2.2	2.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91.8	(5.94)	2.8	5.0	7.7	1.9	2.3	4.1	1.5	3.5
시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84.9	(5.59)	0.6	1.0	1.6	0.4	0.4	0.8	3.0	7.3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86.2	(5.78)	1.5	2.3	3.8	1.9	1.5	3.4	17.6	9.8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91.4	(5.93)	0.8	3.2	4.1	0.0	0.8	0.8	12.0	19.1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61.7	(5.19)	1.3	1.3	2.6	0.0	0.4	0.4	5.7	1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93.6	(6.06)	15.7	18.0	33.6	15.4	17.7	33.1	0.3	0.7
기타	-	-	0.0	0.0	0.0	0.0	0.0	0.0	0.1	0.0
없다	-	-	20.2	20.2	40.4	37.6	37.6	75.2	9.0	9.0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	-	8.0	8.0	-	9.0	9.0	-	3.2
계	-	-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문화·교육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 <표 4-6>. “문화·교육 분야 정책 중 새 정부가 ‘잘할 것’(또는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시고, 없으면 ‘없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과제의 중요도(지수 1 기준)

- 공교육 내실화 92.8%p,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91.1%p,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83.0%p,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81.2%p,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72.8%p, 대학 서열 체계 해소 40.6%p 순

○ 잘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42.3%,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30.2%, 없다 27.9%,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23.8%, 공교육 내실화 18.0%,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14.0%, 대학 서열체계 해소 4.5% 순
- 사회학자: 없다 45.9%,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31.2%,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22.6%,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17.7%,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10.2%, 공교육 내실화 9.4%, 대학 서열체계 해소 3.4% 순
-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와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잘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그렇지만 ‘잘할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3위
- 전체 응답자에 비해 사회학자는 ‘잘할 것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단연 높음

○ 잘못할 것(백분율은 2개 복수응답 기준)

- 전체 응답자: 대학 서열체계 해소 48.4%,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40.7%, 공교육 내실화 33.9%,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19.0%,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6.9%,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11.6%, 없다 11.6% 순
- 사회학자: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54.5%, 대학 서열체계 해소 53.4%, 공교육 내실화 34.2%,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22.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0.2%,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9.8%, 없다 5.3% 순
- ‘잘못할 것’으로 ‘대학 서열체계 해소’,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공교육 내실화’를 꼽은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는 ‘대학 서열체계 해소’을 1순위로 지적하지만, 사회학자는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1순위로 지적

○ ‘공교육 내실화’: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훨씬 높음

- 전체 응답자: 잘할 것 18.0% < 잘못할 것 33.9%
- 사회학자: 잘할 것 9.4% < 잘못할 것 34.2%
- 전체 응답자보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격차가 더 큼

〈표 4-6〉 문화·교육 분야 정책과제 중 새 정부가 ‘잘할 것’과 ‘잘못할 것’ 평가

(단위: %, 점수, %)

문화·교육 분야 정책과제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지수 2 (%) (점수)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전체(N=1086)		전체(N=1086)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공교육 내실화	92.8 (6.15)	8.3	9.7	18.0	5.6	17.8	16.1	33.9	17.3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83.0 (5.85)	32.5	9.8	42.3	25.6	8.2	8.7	16.9	4.5
대학 서열체계 해소	40.6 (4.85)	1.7	2.9	4.5	1.5	27.9	20.5	48.4	32.0
세계인과 어울려 살기 위한 문화 다양성 증진	81.2 (5.46)	5.0	9.0	14.0	4.5	7.4	11.6	19.0	7.9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72.8 (5.29)	10.6	13.3	23.8	10.2	4.8	6.8	11.6	5.3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91.1 (6.05)	14.0	16.2	30.2	6.8	22.4	18.3	40.7	27.8
기타	-	0.1	0.6	0.6	0.0	0.0	0.0	0.0	0.0
없다	-	27.9	27.9	55.8	45.9	11.6	11.6	23.2	5.3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	10.8	10.8	-	-	6.3	6.3	-
계	-	100.0	100.0	200.0	100.0	100.0	100.0	200.0	100.0

주: 1) 정책의 중요도 지수 1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정책의 중요도 지수 2 = ‘매우 중요하다’ 7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부여한 값의 평균.

□ 새 정부의 기관 신뢰도

- <표 5>. “귀하는 새 정부에서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으로 믿습니까?”

○ 신뢰도 지수 1: 의료기관(76.2%p) > 교육기관(34.3%p) > 군대(33.0%p) > 대기업(26.7%p) > 중앙정부 부처(20.8%p) > 금융기관(10.3%p) > 대통령(6.3%p) > 지방자치단체(-0.4%p) > 청와대(-3.9%p) > 법원(-15.5%p) > 공기업(-21.2%p) > 시민단체(-26.2%p) > 경찰(-27.1%p) > 종교기관(-28.4%p) > 검찰(-28.5%p) > 신문사(-48.3%p) > 노동조합(-51.6%p) > TV방송사(-54.0%p) > 국회(-62.4%p) > 정당(-69.4%p)

○ 신뢰도 지수 2: 의료기관(3.11점) > 군대(2.73점) > 교육기관(2.69점) > 대기업(2.65점) > 중앙정부 부처(2.62점) > 대통령(2.55점) > 금융기관(2.51점) > 지방자치단체(2.42점) > 청와대(2.40점) > 법원(2.29점) > 공기업(2.29점) > 경찰(2.26점) > 종교기관(2.17점) > 시민단체(2.11점) > 검찰(2.07점) > TV방송사(2.00점) > 신문사(1.99점) > 노동조합(1.90점) > 국회(1.88점) > 정당(1.84점)

○ 두 지수는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산출. : 의료기관, 교육기관, 군대, 대기업이 상위에; 신문사, 노동조합, TV방송사, 국회, 정당은 하위에 위치

-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 청와대, 법원 등은 대통령보다 신뢰도가 낮음

<표 5> 새 정부의 기관 신뢰도

(단위: %, %p, 점수; N=1086)

기관	① 전혀 믿지 않는다	② 별로 믿지 않는다	③ 약간 믿는다	④ 매우 믿는다	계	부정 ①+②	긍정 ③+④	긍정-부정	(평균)
대통령	22.4	24.5	29.3	23.8	100.0	46.9	53.1	6.3	(2.55)
청와대	21.5	30.4	34.5	13.5	100.0	51.9	48.1	-3.9	(2.40)
중앙정부 부처	6.3	33.3	52.2	8.2	100.0	39.6	60.4	20.8	(2.62)
국회	31.1	50.1	18.4	0.4	100.0	81.2	18.8	-62.4	(1.88)
정당	31.4	53.3	14.9	0.4	100.0	84.7	15.3	-69.4	(1.84)
법원	17.0	40.7	38.2	4.1	100.0	57.7	42.3	-15.5	(2.29)
검찰	34.3	29.9	29.7	6.0	100.0	64.3	35.7	-28.5	(2.07)
경찰	13.0	50.6	34.2	2.3	100.0	63.5	36.5	-27.1	(2.26)
지방자치단체	10.1	40.1	47.6	2.2	100.0	50.2	49.8	-0.4	(2.42)
공기업	12.2	48.4	37.8	1.7	100.0	60.6	39.4	-21.2	(2.29)
군대	5.9	27.6	53.7	12.8	100.0	33.5	66.5	33.0	(2.73)
노동조합	35.3	40.5	23.0	1.2	100.0	75.8	24.2	-51.6	(1.90)
시민단체	29.2	33.9	33.5	3.4	100.0	63.1	36.9	-26.2	(2.11)
TV방송사	23.7	53.3	22.4	0.6	100.0	77.0	23.0	-54.0	(2.00)
신문사	27.5	46.6	25.0	0.8	100.0	74.1	25.9	-48.3	(1.99)
교육기관	4.2	28.6	61.0	6.2	100.0	32.9	67.1	34.3	(2.69)
의료기관	1.2	10.7	63.8	24.3	100.0	11.9	88.1	76.2	(3.11)
대기업	9.0	27.6	52.8	10.6	100.0	36.6	63.4	26.7	(2.65)
종교기관	23.1	41.1	31.4	4.4	100.0	64.2	35.8	-28.4	(2.17)
금융기관	8.4	36.5	50.7	4.4	100.0	44.8	55.2	10.3	(2.51)

주: 평균은 ‘전혀 믿지 않는다’ 1점~‘매우 믿는다’ 4점의 값을 주어 계산.

□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표 6> “귀하는 5년 후에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여섯 분야 모두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위

- <표 2>의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매우 부정적 평가’와는 대조

○ 여섯 분야 간 상대적 비교

- 기업 분야 > 경제 분야 > 외교·안보 분야 > 문화·교육 분야 > 정치 분야 > 사회 분야

- 기업 분야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단연 우세, 경제 분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사회 분야와 정치 분야는 현재 상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약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

<표 6> 여섯 개 정책 분야별 ‘5년 후 변화’ 전망

(단위: %, %p, 점수; N=1086)

구분	① 크게 좋아 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 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 빠질 것 이다	⑤ 크게 나 빠질 것 이다	계	긍정 ①+②	부정 ④+⑤	긍정·부정	(평균)
정치 분야	6.3	28.8	31.2	16.1	17.6	100.0	35.1	33.7	1.4	(1.90)
외교·안보 분야	16.2	32.3	18.3	19.9	13.3	100.0	48.5	33.1	15.4	(2.18)
경제 분야	9.1	41.4	27.3	14.9	7.2	100.0	50.6	22.1	28.5	(2.30)
기업 분야	12.1	46.1	28.5	8.7	4.6	100.0	58.2	13.3	44.9	(2.52)
사회 분야	3.9	31.1	30.8	19.9	14.3	100.0	35.0	34.2	0.8	(1.90)
문화·교육 분야	4.6	32.9	37.9	16.9	7.7	100.0	37.5	24.6	12.9	(2.10)

주: 평균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 5점~‘크게 나빠질 것이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III. 한국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조사 결과

□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분배의 공정성 수준 평가

- <표 7>. “귀하는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 ‘보통이다/중간이다’ 5점, ‘매우 공정하다’ 10점 등 0~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공정성 지수 1: -47.4%p

○ 공정성 지수 2: 3.65점 (10점 만점)

-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음

<표 7>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분배의 공정성 수준

(단위: %, %p, 점수; N=1086)

공정성 수준	백분율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7.5
②	7.6
③	15.0
④	19.7
⑤ 보통이다/ 중간이다	13.7
⑥	20.5
⑦	6.0
⑧	6.7
⑨	2.3
⑩ 매우 공정하다	0.5
계	0.6
공정하지 않음 ①~④	100.0
공정함 ⑥~⑩	63.4
공정-부정	16.0
(평균)	-47.4
	(3.65)

주: 평균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매우 공정하다’ 1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 사회 분야의 공정성 수준 평가

- <표 8>.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음 사항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기회 > 취업 기회 > 법의 집행 > 언론 또는 대중매체의 내용

- 경제(소득과 재산의 분배)뿐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의 공정성 평가도 부정적

<표 8> 사회 분야의 공정성 평가

(단위: %, %p, 점수; N=1086)

구분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⑤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계	공정 ①+②	부정 ④+⑤	공정-부정	(평균)
교육 기회	3.9	31.7	24.0	33.4	7.0	100.0	35.5	40.4	-4.9	(2.92)
취업 기회	1.3	24.3	31.1	37.3	6.0	100.0	25.6	43.3	-17.7	(2.78)
법의 집행	0.3	15.6	27.2	38.2	18.8	100.0	15.8	57.0	-41.2	(2.40)
언론 또는 대중매체의 내용	0.0	5.3	21.5	43.1	30.1	100.0	5.3	73.2	-67.9	(2.02)

주: 평균은 ‘매우 공정하다’ 5점~‘전혀 공정하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 사회집단 간 ‘사회적 격차’에 존재하는 불공정성: 사회학자의 평가

- <표 9>.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음 집단들 간 ‘사회적 격차’에 불공정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불공정이 큰 집단 간 격차: 재산을 기준으로 한 부자와 빈자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 프랜차이즈 모기업과 가맹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임원(경영자)과 직원(근로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 수도권과 비수도권 >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순
-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등의 사회적 격차에도 불공정성이 크게 존재
- 불공정이 거의 없는 집단 간 격차: 종교인과 비종교인

<표 9> 사회집단 간 ‘사회적 격차’에 존재하는 불공정성: 사회학자의 평가

(단위: %, %p, 점수; N=268)

구분	① 매우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없는 편이다	④ 거의 없다	계	부정 ①+②	긍정 ③+④	긍정- 부정	(평균)
재산을 기준으로 한 부자와 빈자	78.0	19.4	2.6	0.0	100.0	97.4	2.6	-94.8	(3.75)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72.0	25.0	2.6	0.4	100.0	97.0	3.0	-94.0	(3.69)
프랜차이즈 모기업과 가맹점	64.6	32.1	3.4	0.0	100.0	96.6	3.4	-93.3	(3.61)
대기업과 중소기업	74.6	21.6	3.7	0.0	100.0	96.3	3.7	-92.5	(3.71)
임원(경영자)과 직원(근로자)	73.9	22.4	2.6	1.1	100.0	96.3	3.7	-92.5	(3.69)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76.5	19.4	3.0	1.1	100.0	95.9	4.1	-91.8	(3.71)
수도권과 비수도권	68.7	26.9	4.1	0.4	100.0	95.5	4.5	-91.0	(3.64)
장애인과 비장애인	63.8	31.3	4.1	0.7	100.0	95.1	4.9	-90.3	(3.58)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59.7	34.7	5.2	0.4	100.0	94.4	5.6	-88.8	(3.54)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60.4	34.0	4.1	1.5	100.0	94.4	5.6	-88.8	(3.53)
취업자와 실업자	64.9	28.4	6.3	0.4	100.0	93.3	6.7	-86.6	(3.58)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57.8	35.4	6.3	0.4	100.0	93.3	6.7	-86.6	(3.51)
명문대와 비명문대 출신자	59.7	33.6	5.6	1.1	100.0	93.3	6.7	-86.6	(3.52)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66.0	26.5	5.6	1.9	100.0	92.5	7.5	-85.1	(3.57)
남성과 여성	51.5	41.0	6.0	1.5	100.0	92.5	7.5	-85.1	(3.43)
엘리트와 일반인	41.8	49.3	7.8	1.1	100.0	91.0	9.0	-82.1	(3.32)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61.2	29.5	7.5	1.9	100.0	90.7	9.3	-81.3	(3.50)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34.0	53.7	10.4	1.9	100.0	87.7	12.3	-75.4	(3.20)
한국인과 외국인	32.1	54.5	13.1	0.4	100.0	86.6	13.4	-73.1	(3.18)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26.1	57.1	14.6	2.2	100.0	83.2	16.8	-66.4	(3.07)
전문가와 일반인	18.3	56.7	20.9	4.1	100.0	75.0	25.0	-50.0	(2.89)
기혼자와 미혼자	15.7	56.7	25.0	2.6	100.0	72.4	27.6	-44.8	(2.85)
보수와 진보	26.5	38.8	24.6	10.1	100.0	65.3	34.7	-30.6	(2.82)
종교인과 비종교인	5.2	23.1	48.1	23.5	100.0	28.4	71.6	43.3	(2.10)

주: 평균은 ‘매우 많이 있다’ 4점~‘거의 없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표 10> 한국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각성: 사회학자의 평가

(단위: %, 점수; N=268)

구분	백분율
불공정과 불평등 둘 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불공정·불평등 ≪ OECD평균)	5.6
불공정은 심각하고 불평등은 보통이다 (불공정 > 불평등 ≒ OECD평균)	14.6
불평등은 심각하고 불공정은 보통이다 (불평등 > 불공정 ≒ OECD평균)	24.6
불공정과 불평등 둘 다 매우 심각하다 (불공정·불평등 ≫ OECD평균)	55.2
계	100.0

□ 한국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각성: 사회학자의 평가

- <표 10>. “선진국들(OECD평균)과 비교할 때,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불공정과 불평등 둘 다 매우 심각하다(55.2%) > 불평등은 심각하고 불공정은 보통이다(24.6%) > 불공정은 심각하고 불평등은 보통이다(14.6%) > 불공정과 불평등 둘 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5.6%)
- ‘불공정과 불평등 둘 다 심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각성을 분해해보면, 불공정 <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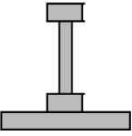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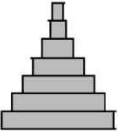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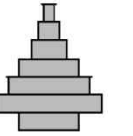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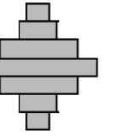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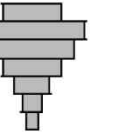
□ 한국사회의 불평등 유형(계층구조): 사회학자의 평가

- <표 11>.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가 어떤 유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국사회가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유형 C (48.9%) > 유형 A (23.1%) > 유형 B (19.4%) > 유형 D (5.2%) > 유형 E (2.2%)
- 바람직: 유형 D (78.4%) > 유형 E (15.3%) > 유형 C (2.2%) > 유형 B (1.5%) > 유형 A (1.1%)
- 현재는 피라미드 형태 또는 양극화가 진행된 형태로 진단하는 비율이 높지만, 바람직한 유형은 중간층 또는 중상층이 두터운 형태로 의견이 집약됨

<표 11> 한국사회의 불평등 유형(계층구조): 사회학자의 평가

(단위: %, N=268)

구분	현재 유형	바람직한 유형
유형 A	23.1	1.1
유형 B	19.4	1.5
유형 C	48.9	2.2
유형 D	5.2	78.4
유형 E	2.2	15.3
모르겠다	1.1	1.5
계	100.0	100.0

 <p>상층 ↓ 하층</p> <p>유형 A 소수의 상층 엘리트와 극소수의 중간층, 그리고 대다수의 최하층</p>	 <p>상층 ↓ 하층</p> <p>유형 B 피라미드 형태로 소수의 상층 엘리트, 더 많은 중간층과 가장 많은 하층</p>	 <p>상층 ↓ 하층</p> <p>유형 C 피라미드 형태이나 최하층이 비교적 적음</p>	 <p>상층 ↓ 하층</p> <p>유형 D 중간층이 가장 많은 사회</p>	 <p>상층 ↓ 하층</p> <p>유형 E 다수의 상층과 점점 적어지는 하층</p>
--	---	---	---	--

□ 사회제도/사회주체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표 12>. “귀하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다음 사회제도 또는 사회주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0점, ‘보통이다/중간이다’ 5점, ‘매우 기여한다’ 10점 등 0~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기업 > 학계 ≫ 시민단체 > 정치

- 기업, 학계는 긍정 평가가 우세; 정치, 시민단체는 부정 평가가 우세 ※ 정치는 부정 평가가 단연 두드러짐

<표 12> 사회제도/사회주체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단위: %, %p, 점수; N=1086)

구분	정치	기업	시민단체	학계
①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13.4	1.5	13.1	2.6
②	14.6	3.1	9.7	2.6
③	16.7	6.2	10.0	6.5
④	16.9	7.5	12.2	8.0
⑤ 보통이다/ 중간이다	12.1	6.6	7.7	7.4
⑥	15.8	18.4	18.7	28.7
⑦	5.2	14.6	12.1	17.5
⑧	3.4	19.2	10.5	15.5
⑨	1.4	11.9	3.9	8.1
⑩ 매우 많이 기여한다	0.2	5.2	1.0	1.4
계	100.0	100.0	100.0	100.0
기여하지 못함 ①~④	73.7	24.9	52.7	27.1
기여함 ⑥~⑩	10.5	56.7	28.6	44.2
긍정-부정	-63.2	31.9	-24.0	17.1
(평균)	(2.97)	(5.78)	(3.88)	(5.21)

주: 평균은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0점~‘매우 많이 기여한다’ 1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표 13> 한국사회의 신뢰도 수준

(단위: %, %p, 점수; N=1086)

신뢰도 수준	백분율
①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회다	1.0
②	2.7
③	5.2
④	10.5
⑤ 보통이다/ 중간이다	8.0
⑥	33.1
⑦	17.1
⑧	14.8
⑨	6.4
⑩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다	1.0
계	100.0
믿을 수 없음 ①~④	27.4
믿을 수 있음 ⑥~⑩	39.5
긍정-부정	12.1
(평균)	(5.10)

주: 평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회다’ 0점~‘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다’ 1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 한국사회의 신뢰도 수준

- <표 13>. “귀하는 한국사회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사회다’ 0점,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다’ 10점 등 0~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신뢰성 지수 1: 12.1%p / 신뢰성 지수 2: 5.10점 (10점 만점)

-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신뢰사회)라는 응답이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응답보다 약간 많음 → 신뢰가 불신보다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나,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라 평가하기에는 무리

III. 한국 정치와 외교·안보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

□ 현행 대통령제의 작동 상태에 대한 평가

○ “귀하는 현행 대통령제가 얼마나 잘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N=1086)

매우 잘 작동한다	1.6%
대체로 잘 작동하는 편이다	40.2%
별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편이다	49.8%
전혀 잘 작동하지 못한다	8.4%

- 잘 작동한다는 응답이 41.8%,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8.2%로, 부정적 평가가 우위

○ 부정적 평가를 한 까닭 (N=632)

- “귀하는 왜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려워서	32.0%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해서	26.4%
대통령제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데 적절치 못해서	19.9%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야당의 반발 때문에	19.1%
기타	2.5%

□ 바람직한 권력구조

- “귀하는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가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N=1086)

4년 연임 대통령제	54.7%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17.7%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15.1%
의원내각제	11.1%
기타	1.4%

□ 검찰 개혁의 방향

- “귀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86)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등 수사와 기소 분리 강화	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이전으로 복귀	28.0%
현행 제도(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속 등) 유지	17.8%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삭제	12.7%
기타	1.4%

□ 외교적 과제

- <표 14>. “귀하는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 한미 동맹 강화 > 북한 비핵화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중관계 발전 > 한일관계 개선 > 아세안 협력 강화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 간의 태도 차이 없음

<표 14> 새 정부가 중시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

(단위: %)

구분	전체(N=1086)			한국정치학회(N=300)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한미 동맹 강화	48.0	12.2	60.2	48.2	15.1	63.2
북한 비핵화	18.9	19.1	37.9	20.4	24.1	44.5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12.5	15.7	28.3	13.4	12.7	26.1
아세안 협력 강화	6.1	8.2	14.3	4.0	3.7	7.7
한중관계 발전	6.4	15.2	21.6	4.0	15.7	19.7
한일관계 개선	3.9	14.7	18.6	4.3	12.4	16.7
기타	4.2	1.2	5.4	5.7	0.7	6.4
두 번째 선택지 미선택	-	13.6	13.6	-	15.7	15.7
계	100.0	100.0	200.0	100.0	100.0	200.0

-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위치

- <표 15>. “귀하는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과의 관계 강화 > 균형적 태도 유지 ≫ 중국과의 관계 강화

<표 15>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위치

(단위: %, %p; N=1086)

한국의 위치	백분율
① 중국과의 관계 강화	0.0
①	0.3
②	0.1
③	0.8
④	1.3
⑤ 균형적 태도 유지	45.1
⑥	10.5
⑦	14.6
⑧	9.6
⑨	4.8
⑩ 미국과의 관계 강화	12.9
계	100.0
중국과의 관계 강화 ①~④	2.5
균형적 태도 유지 ⑤	45.1
미국과의 관계 강화 ⑥~⑩	52.4
미국-중국 (%p)	49.9

IV. 경영학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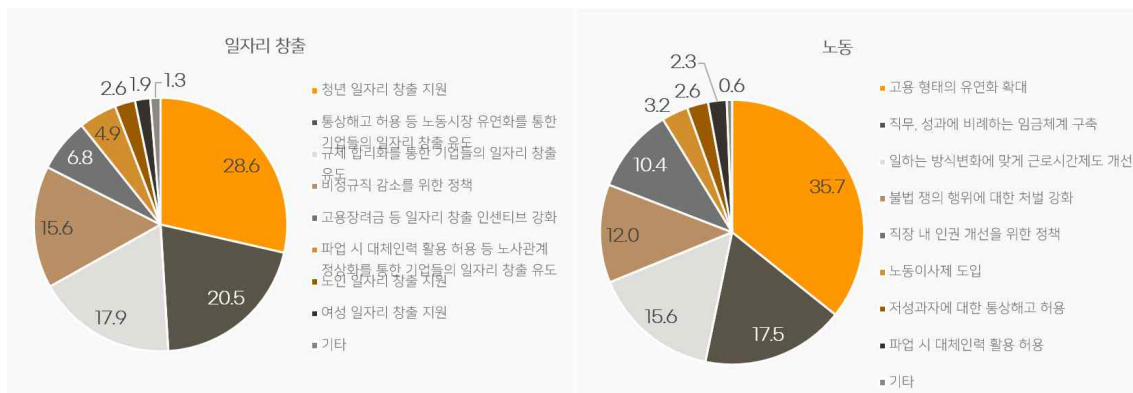
□ 기업지원 정책

- 경영학자들은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신사업에 필요한 인재양성(30.5%)과 낡거나 과도한 규제정비(26.6%)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음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31.8%)과 벤처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31.5%)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음
- 산업지원 및 기업지원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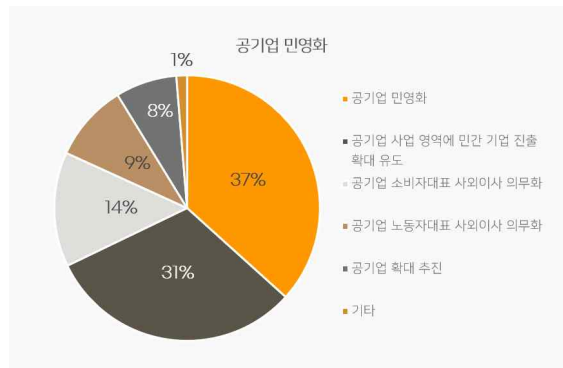
□ 일자리 및 노동

- 정부의 일자리 과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통상 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20.5%) 및 규제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17.9%)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비정규직 감소 정책(15.6%)과 같은 일자리의 평등성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노동관련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에서도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와 직무, 성과에 비례하는 임금체계 구축(17.5%)을 가장 높게 응답함
- 일자리와 노동 모두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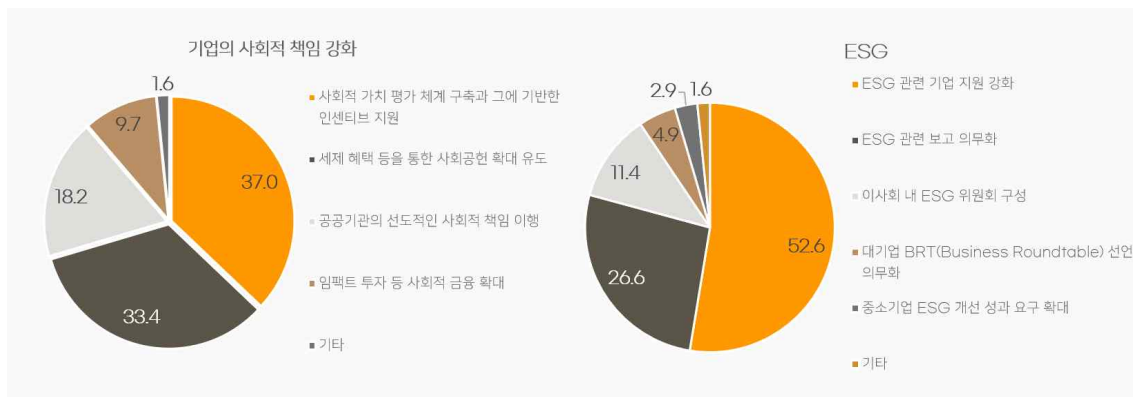
□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관련 정책에 있어 경영학자들은 공기업 민영화(37%)와 공기업 사업 영역에 민간 기업 진출 확대를 유도(31%)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음
-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거나, 공기업 사업영역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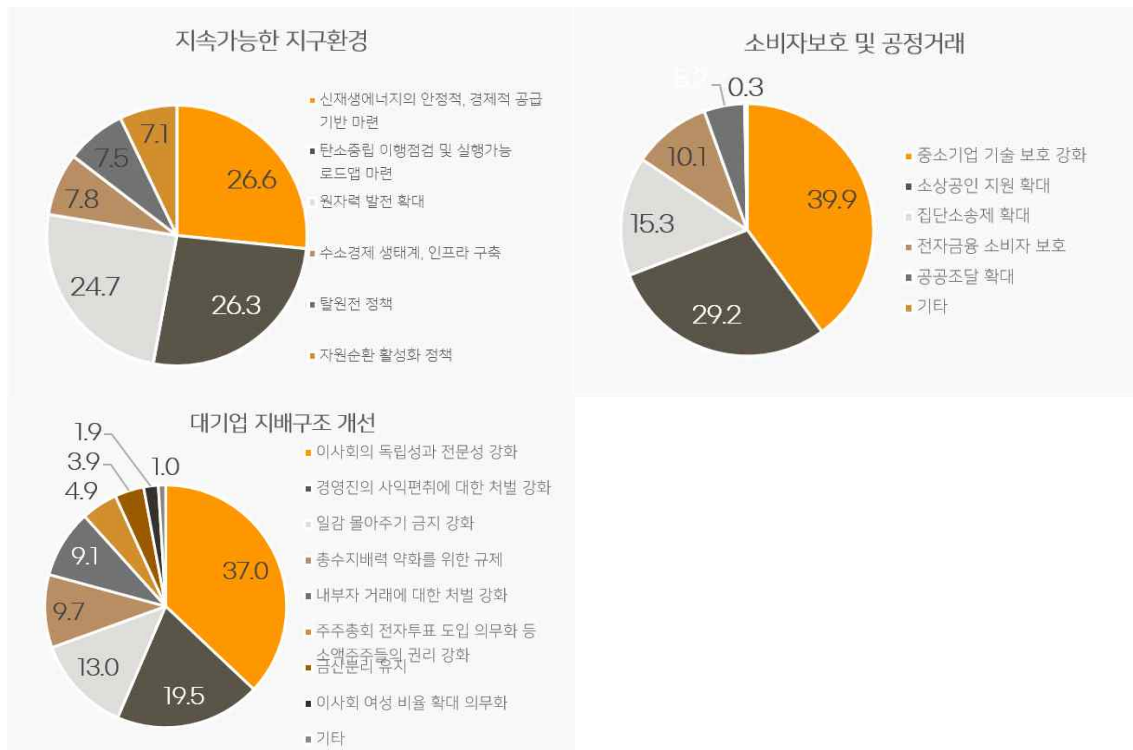
□ 사회적 책임과 ESG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구축과 그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원(37.0%)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 유도(33.4%)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음
- ESG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다수(52.6%)가 ESC 관련 기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ESG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됨



□ ESG 실행

- 지속가능 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 기반 마련(26.6%)과 탄소 중립 이행점검 및 실행가능 로드맵 마련(26.3%)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함
-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39.9%)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29.2%)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함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37.0%)와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대한 처벌 강화(19.5%)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함



V. 경제학자 조사 결과

□ 경제성장

-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
 - (1)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31%)
 -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 (3)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
 - (4)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12%)
 - (5)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12%)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
 - (1)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30%)
 - (2)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 (3)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16%)
 - (4)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11%)
- 성장과 분배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압도적인 다수(63%)가 성장을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

□ 노동유연성/사회보장확대

-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85%의 경제학자가 동의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다음 사항을 촉구
 - (1)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60%)
 - (2) 근로자당 노동시간의 신축성(28%)
 - (3) 근로자 고용의 용이(10%)
- 노동유연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부족
-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다수인 51%의 경제학자들이 동의

□ 국가채무/가계부채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근접한 수준
-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으로 다음을 지칭
 - (1)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49%)
 - (2) 정부 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 가능성(20%)
 - (3)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18%)

- (4) 국민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8%)
- 다수의 경제학자가 재정준칙 등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
- 현재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38%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55%의 경제학자는 “높은 수준”이라고 대답
- 향후 안정적인 가계 부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 (1) 부동산 시장 안정(55%),
 - (2) 지속적인 경제성장(24%)
 - (3) 금리정책과 유동성 관리(9%)
 - (4) 적절한 금융감독(4%)

□ 교육

- 한국은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이 OECD 평균(2016년 46%)의 1/3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학 진학률은 70%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
- 압도적인 다수(61%)는 개인이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고 대답
- 51%의 경제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
- 61%의 압도적 다수는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

□ 탄소중립

-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두 가지 A안(화석연료 전면폐지), B안(LNG 일부 잔존)을 발표
-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계획에 다음을 우려
 - (1)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34%)
 - (2) 탄소 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26%)
 - (3)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14%)
 - (4)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13%)
- 경제학자들은 탄소중립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
 - (1) 탄소세 도입(43%),
 - (2)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39%)

VI. 사회학자 조사 결과

□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 수준

- <표 16>.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부족(매우 부족+부족) 76.9%, 적정 17.5%, 과도(과도+매우 과도) 5.6%
-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표 16>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 수준

(단위: %, N=268)

성평등 노력 수준	백분율
매우 부족하다	26.1
부족한 편이다	50.7
적정 수준이다	17.5
과도한 편이다	4.9
매우 과도하다	0.7
계	100.0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이유로 한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

- <표 17>. “귀하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정 65.3%, 과도 26.1%, 과소 8.6% ※ 적정하였다는 평가가 압도적 다수

<표 17>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이유로 한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

(단위: %, N=268)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	백분율
덜 제한하였다	8.6
적정하였다	65.3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26.1
계	100.0

□ 한국사회에서 언론기관이 누리는 언론 자유의 수준

- <표 18>.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언론기관이 누리는 언론 자유의 수준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표 18> 한국사회에서 언론기관이 누리는 언론 자유의 수준

(단위: %, N=268)

언론 자유의 수준	백분율
매우 적다 (극도로 제약받고 있다)	1.5
적은 편이다 (제약받고 있는 편이다)	13.8
적정 수준이다	22.4
많은 편이다 (넉치는 편이다)	37.3
매우 많다 (많이 넘친다)	25.0
계	100.0

- 많다(넉친다) 62.3%, 적정 22.4%, 적다(제약받는다) 15.3% ※ 언론 자유가 많다는 평가가 다수

□ 사회개혁 정책의 필요성

- <표 19>. “영국은 2018년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대책담당실’(内閣官房 孤独·孤立対策担当室)을 설치했습니다. 귀하는 한국에서도 ‘고독·고립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보고 ‘고독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음 사항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독처 신설: 필요 69.8%, 불필요 30.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필요 87.7%, 불필요 12.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시행: 필요 88.8%, 불필요 11.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 세대간 기회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임금체계를 ‘연공급제’(年貢給制)에서 다른 방식으로 개편: 필요 81.7%, 불필요 18.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 대학간 서열을 없애는 방향의 교육개혁: 필요 79.1%, 불필요 20.9%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표 19> 사회개혁 정책의 필요성

(단위: %, N=268)

구분	고독처 신설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 제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시행	세대간 기회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임금체계를 ‘연공급제’(年貢給制)에서 다른 방식으로 개편	대학간 서열을 없애는 방향의 교육개혁
매우 필요하다	15.3	46.6	46.6	24.3	38.8
필요한 편이다	54.5	41.0	42.2	57.5	40.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4.6	8.6	7.8	15.7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5.6	3.7	3.4	2.6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0> 이주민 정책과 국가 목표로서의 행복 추구

(단위: %, N=268)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한국사회의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출신 이주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9.3	38.1	26.1	19.4	7.1	100.0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무와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난민 신청자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5.7	44.8	23.9	11.9	3.7	100.0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9.0	54.1	12.7	10.4	3.7	100.0
“한국사회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행복’을 국가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51.9	39.6	7.1	1.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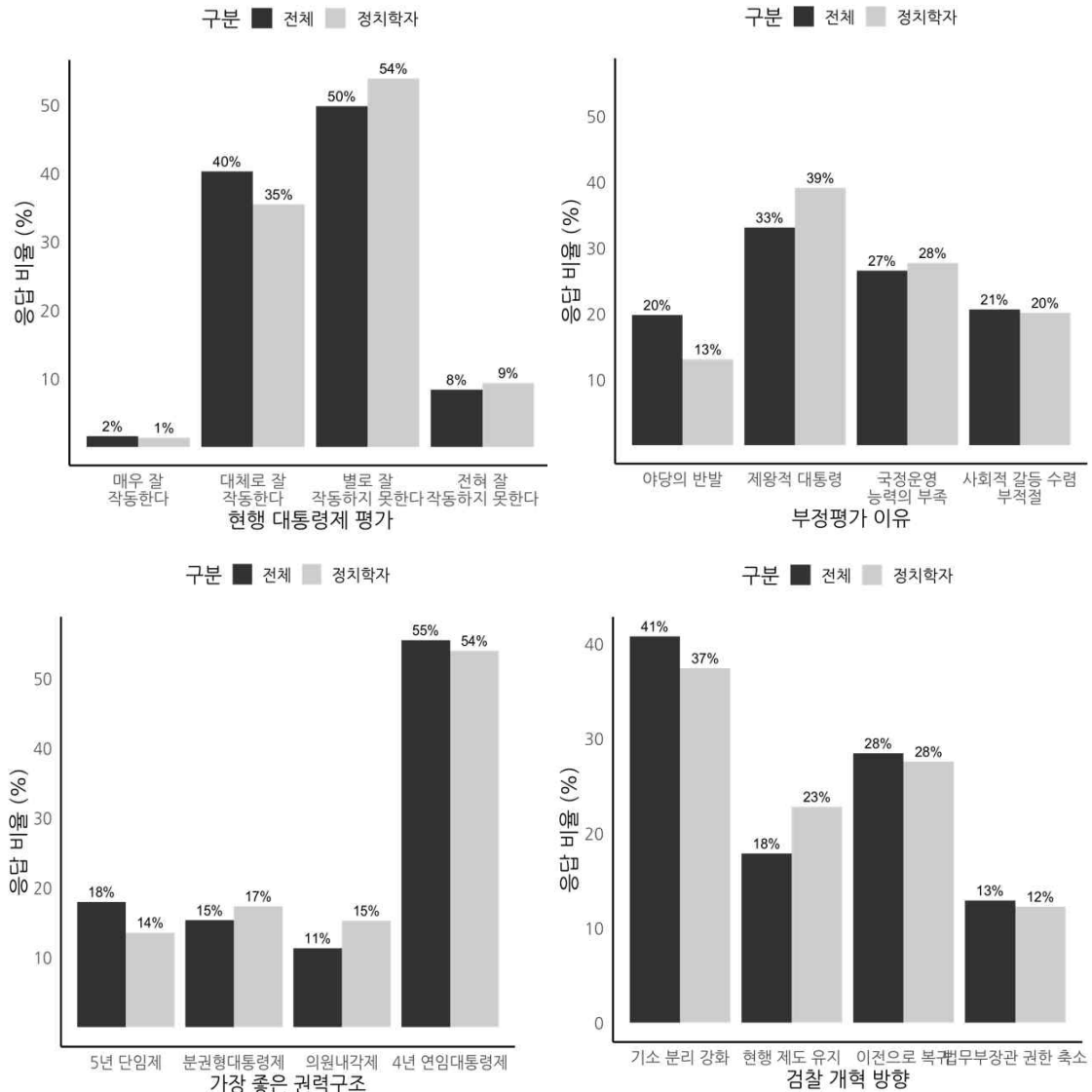
□ 이주민 정책과 국가 목표로서의 행복 추구

- <표 20>. “귀하는 다음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수용 확대: 동의 47.4%, 보통 26.1%, 부동의 26.5%
 - ※ 이주민 수용은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
- 난민 신청자 적극적 수용: 동의 60.4%, 보통 23.9%, 부동의 15.7%
-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동일한 권리 보장: 동의 73.1%, 보통 12.7%, 부동의 14.2%
- ‘행복’을 국가 목표로 추구: 동의 91.4%, 보통 7.1%, 부동의 1.5%

VII. 정치학자 조사 결과

□ 권력구조 개편

-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 정치학자의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 부정적 평가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선택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33%, 정치학자 기준으로는 39%였음. 정치학자 중에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야당의 반발을 선택한 응답자는 13%였음.
- 가장 좋은 권력구조로는 전체응답자의 55%, 정치학자의 54%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선택함



□ 검찰개혁

-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1%, 정치학자의 37%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등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속 등을 포함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8%, 정치학자 중 23%임

- 전체 응답자와 정치학자 중 28%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등 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3%, 정치학자 중 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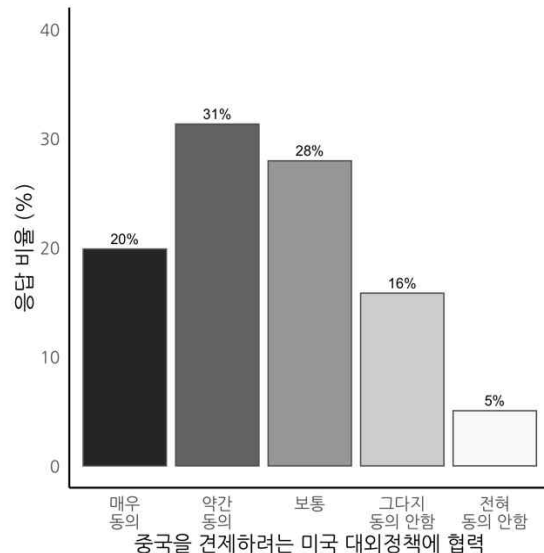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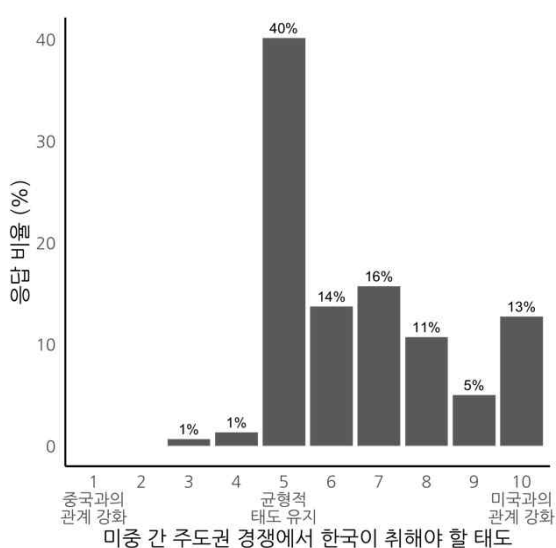
□ 외교·안보 분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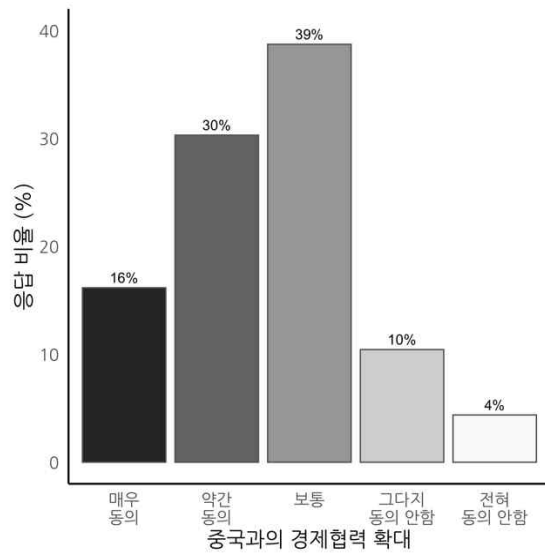
- 정치학자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중 미중 경쟁 시대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대북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음
- 가장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국방력 강화(40%)와 한일관계 개선(29%)을 뽑음
- 가장 잘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로 대북정책(53%)과 미중 경쟁 시대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23%)을 뽑음

	중요도 (1-7)	가장 '잘 할 것' 이다	가장 '잘못할 것'이다
국방력 강화	6.0	39.6%	5.7%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6.1	10.8%	53.3%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6.4	17.6%	23.0%
한일관계 개선	5.6	28.8%	6.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6.0	3.2%	11.5%

□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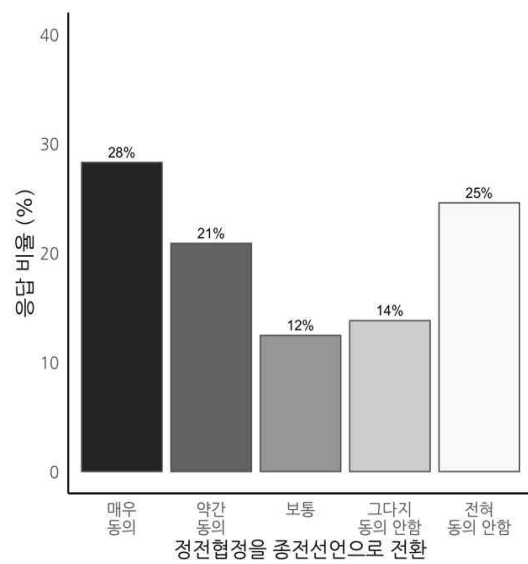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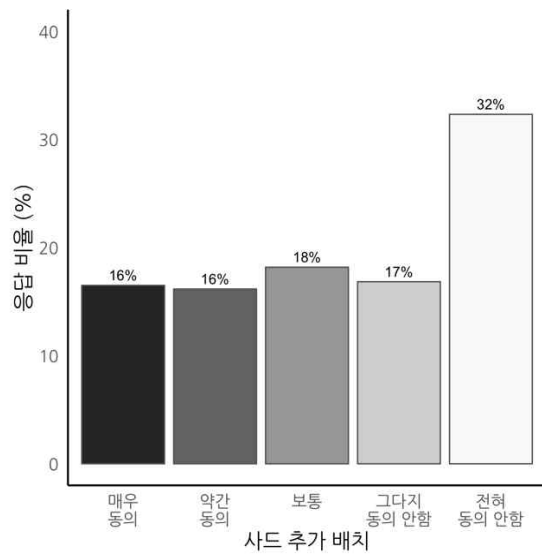
-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58%,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2%, 균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40%
-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 51%. 쿼드 참여에 동의하는 의견 53%
-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47%. 외교 영역에서까지 중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6%





□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는 비율(33%)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49%)이 높게 나타남
-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데에 과반에 가까운 비율(49%)이 찬성한 반면 반대 역시 38%를 차지



끝.

[공통주제 발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윤성이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상국립대학교 정외과 교수(2000. 03 – 2005. 08)
- 한국정치학회 회장(2020)
- 경희대학교 정경대 학장(2016. 02 – 2020. 04)



김진영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전)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 Kuznets Prize 수상



이경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전)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 (전)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최우수논문상 수상



이재열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 (전)한국고등교육재단이사
- (전)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



임진

-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정책자문관
-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이하경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중앙일보 주필•부사장(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한중고위언론인포럼 한국측 단장(현)



홍일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전)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전)청와대 정책실/제도개혁비서관실/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 (전)(재)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윤성이(경희대)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 그런가? 우리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개혁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전환 시대’(transformation era)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200여 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정보사회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일 수는 없다.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광장정치’에서 보듯이 ‘디지털 네트워크 정치’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디지털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가치 및 실천방식 또한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곳곳에서 기존의 정치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설적 현상’들이 관찰된다.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기존 서구 민주주의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시위도 더 많이 발생한다. 크라우치(Crouch 2008)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라 설명한다. 한국 정치에서도 역설적 현상들이 관찰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Freedom House, Economist 등의 기관이 평가한 한국 민주주의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국회 등 대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정체된 데 비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 혹은 정치 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차원에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초연결사회,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등 전환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정치/사회 구조, 권력 작동의 원리, 개인의 의식 등 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 ‘제도 지체’(institutional lag)를 넘어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임을 인지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우선은 전환 시대로 인해 세계 민주주의 전체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매우 높다. 정치/사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면한 문제를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과 출발은 국가/중앙 정치에 있더라도 문제해결의 출발은 기초단체 혹은 생활공동체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의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제도/정책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 그리고 ‘전환시대’라는 환경은 우리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난해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기존의 개념, 가치, 인식, 그리고 실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피드백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기능(function)과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청와대 이전’의 본질적 목적은 소통과 권력 내려놓기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도입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당이 대표(representation)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다당제가 무슨 소용인가. ‘결선 투표제’는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이 더 없이 높은 현실에서 과반수 득표가 무슨 소용인가?

넷째, 국민통합은 ‘열린 사회’로부터 시작한다. ‘내 것’을 내려놓고, 반대 집단의 주장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팬덤 정치의 달콤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에 있으며, 인지적 양극화뿐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열성 지지자들의 팬덤 정치가 뜨거울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전환시대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윤성이 (경희대)

목차

-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III. 20대 대선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
- IV.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탐색
-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정치개혁안' 만들어 정치/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그간의 숱한 개혁안들이 왜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
- 우선은 한국 정치/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이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함
- 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한 처방전(개혁안)이 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었는지 살펴봐야 함
- 개혁 - 즉 헌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안의 개정 그리고 적폐청산 -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음
- 개혁은 우리가 소망하는 민주주의/정치/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임
-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은 통해 얻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은 바가 있는가?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합한 개혁안을 처방하기 위해 '전환시대' (transformation er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0여 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정보사회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이른바 '정상과학' 즉 많은 패러다임 중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 하나가 존재하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기본 가정들이 도전을 받게 되면 기존의 정상과학에 위기가 찾아온다" (Thomas Khun, 과학혁명의 구조, 1962)
 - '광장정치'에서 보듯이 '디지털 네트워크 정치'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 디지털 세대의 정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가치, 실천방식은 아날로그 세대와 다름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아야 함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곳곳에서 기존의 정치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설적 현상'들이 관찰됨
- 2000년 이후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함에 동시에, 기존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민주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높을수록 '정치발전론'에서 후진적 정치참여 행태로 평가하는 '시위' 발생 빈도는 더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0년 이후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득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음
- 크라우치(Crouch 2008)는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기존 민주주의 질이 점차 나빠지는 역설적 현상을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라 표현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은 지속하고 있으나, 기존 민주주의의 질이 하락하는 양상 또한 동시에 나타남

연도	민주화 운동
2003	그루지아(장미혁명)
2004	우크라이나(오렌지혁명),
2005	이라크(퍼플혁명), 레바논(백향목혁명), 키르기스스탄(레몬혁명),
2011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바레인
2014	홍콩(우산혁명)
2019	이라크, 홍콩
2020	벨라루스, 태국
2021	미얀마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현상 (Freedom House)

2020	A Leaderless Struggle for Democracy	2012	The Arab Uprisings and Their Global Repercussions
2019	Democracy in Retreat	2011	The Authoritarian Challenge to Democracy
2018	Democracy in Crisis	2010	Erosion of Freedom Intensifies
2017	The Dual Threat to Global Democracy	2009	Setbacks and Resilience
2016	Anxious Dictators, Wavering Democracies Global Freedom under Pressure	2008	Freedom in Retreat: Is the Tide Turning?
2015	Discarding Democracy a Return to the Iron Fist	2007	Freedom Stagnation amid Pushback against Democracy
2014	The Democratic Leadership Gap	2006	Middle East Progress amid Global Gains
2013	Democratic Breakthroughs in the Balance	2005	Civic Power and Electoral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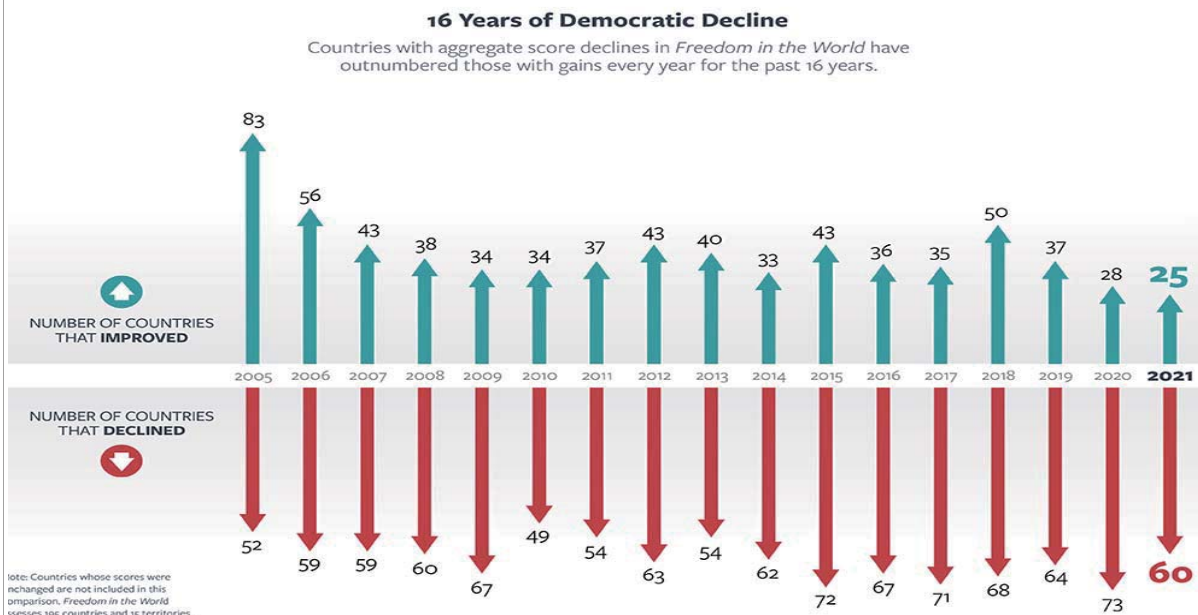
Democracy Index 2021, by regime type

	No. of countries	% of countries	% of world population
Full democracies	21	12.6	6.4
Flawed democracies	53	31.7	39.3
Hybrid regimes	34	20.4	17.2
Authoritarian regimes	59	35.3	37.1

Full democracy (8.01 - 10.0), Flawed (6.01 - 8.0), Hybrid (4.01 - 6.0), Authoritarian (0 - 4.0)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



"The Global Expansion of Authoritarian Rule." *Freedom in the World* 2022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국가 소득 별 시위 발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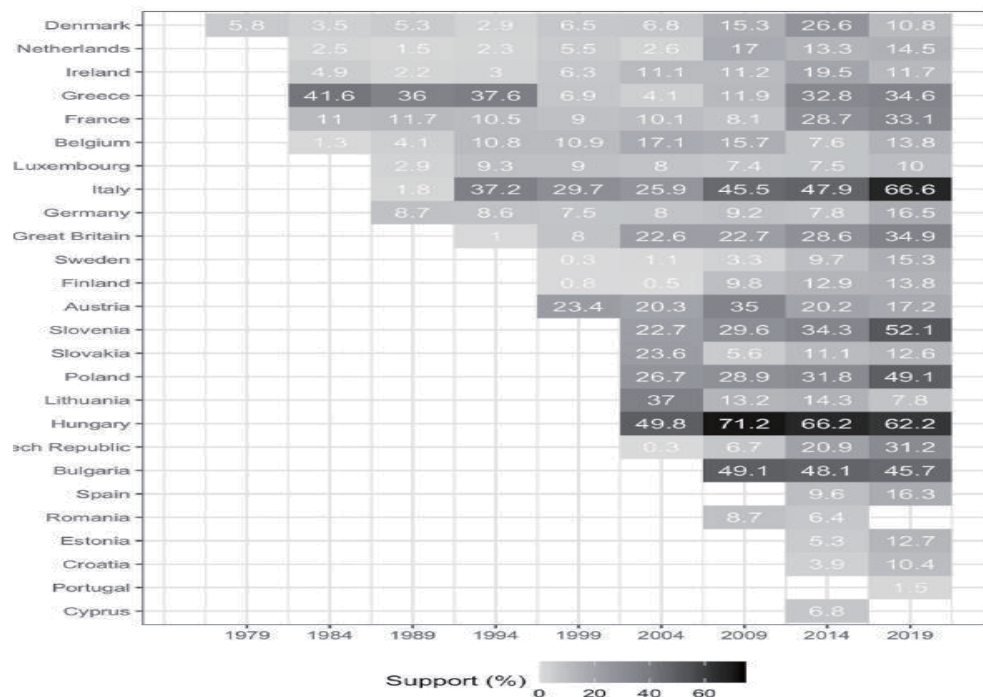
	고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전지구적차원	총합
2006	15	26	20	1	11	73
2007	28	26	33	2	12	101
2008	29	38	32	6	14	119
2009	46	33	24	5	16	124
2010	56	48	35	5	15	159
2011	80	61	49	8	18	216
2012	95	69	50	9	20	243
2013	103	60	46	10	18	237
2014	89	44	35	10	14	192
2015	88	47	34	11	13	193
2016	86	54	39	10	13	202
2017	93	52	45	11	17	218
2018	101	60	46	12	19	238
2019	106	59	51	9	18	243
2020	107	60	51	12	21	251
합계	1122	737	590	121	239	2809

* "전지구적 차원" 은 국가 경계 너머 국제단체에 관한 시위 등이 포함

Ortiz et al. 2022. "World Protests A Study of Key Protest Issues in the 21st Century" . World Protests.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유럽 포퓰리즘 정당 득표율(1979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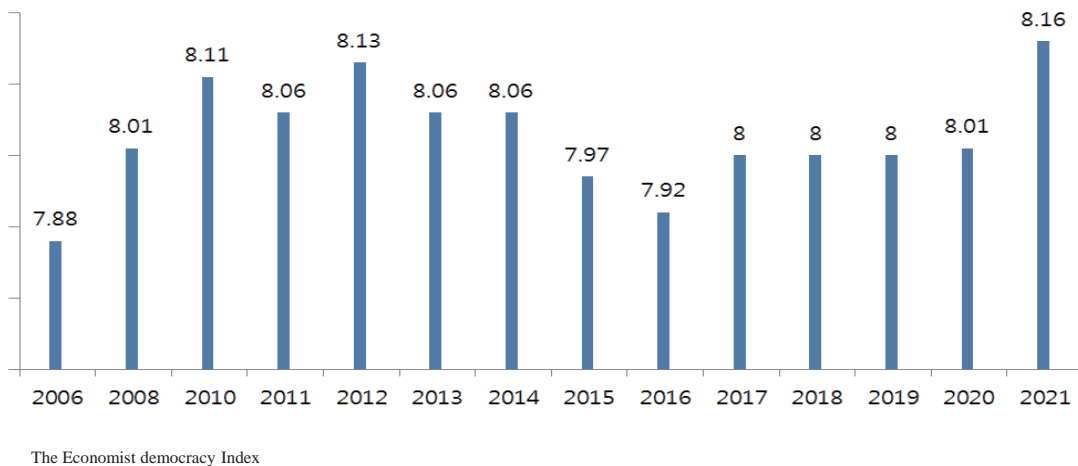
Marttia Zulianello and Erik Gahner Larsen, 2021, "Populist parties i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 new dataset on left, right and valence populism from 1979 to 2019." *Electoral Studies*.

I. 전환시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기존의 정치학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설적 현상들이 발생함
-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와 함께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음
- 외부 평가기관의 민주주의 평가 점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 결핍 지수 또한 높음
- 민주화 이후 외부 평가기관(Freedom House, Economist 등)의 한국 민주주의 평가 점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회 및 정당 등 대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함
- 정당 및 국회에 대한 불신의 증가에서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어, 정치불신→정치 무관심→투표율 하락이라는 기존 정치참여 이론과 맞지 않음
-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정체 현상인데 반해 2030대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함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1987년 민주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됨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 현상 (World Value Survey)

	Values	Performance	Deficit
WAVE7 (2017-2020)	7.9	6.9	-1.0
WAVE6 (2010-2014)	8.4	5.9	-2.5
WAVE5 (2005-2009)	8.6	6.4	-2.2

- Democratic value: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live in a country that is governed democratically?”
- Democratic performance: “And how democratically is this country being governed today?”
- 1 = “not at all” 10 = “absolutely/completely”
-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높으나,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민주주의 결핍 현상이 존재
- Wave 7에서 결핍지수가 이전 시기보다 낮아진 것은 긍정적 현상이나, 민주주의 가치 값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우려됨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역설 1: 높은 민주주의 평가 지표와 낮은 정치제도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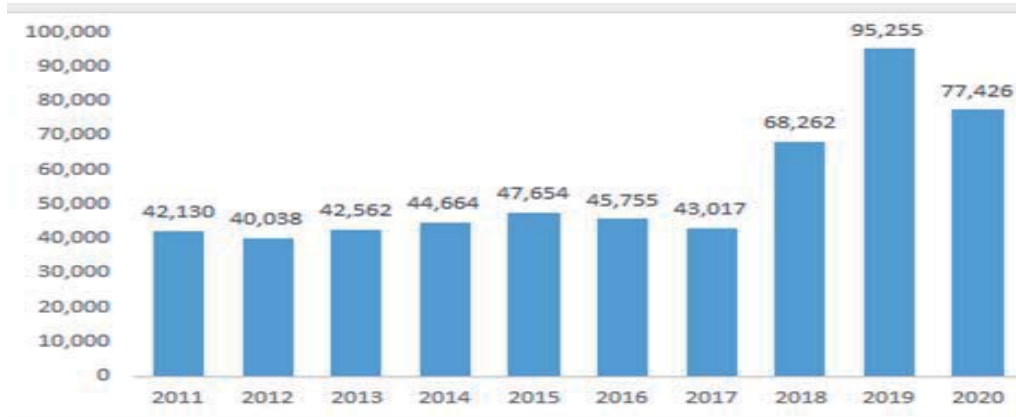
시 기	정당	국회	중앙정부
Wave 7(2017~2020)	75.5%	79.3%	48.7%
Wave 6(2010~2014)	73.4%	74.1%	50.3%
Wave 5(2005~2009)	75.7%	73.8%	54.2%
Wave 4(1999~2004)	83.6%	84.4%	66.4%
Wave 3(1995~1998)	74.8%	68.5%	55.8%
Wave 2(1990~1994)	-	67.2%	-
Wave 1(1981~1984)	-	31%	-

-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핵심 제도인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며, 이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는 현상임
- 민주주의 평가점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나, 핵심적인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역설 2: 정치 불신 및 시위 증가와 투표율 상승 현상의 공존

시위 횟수 증가 (경찰청 백서)



-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의 증가와 함께 시위 횟수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시위 더 많음
- 시위 등 비제도적 참여는 후진국의 정치참여 양식이라는 기존 이론과 상충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정당과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투표율은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 정치불신의 정도가 더 높은 2030 세대 투표율이 상승하는 반면 50대 이상 투표율은 정체

투표율의 증가: 대선

대선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7대 2007	54.2	49.4	54.9	66.3	76.6	76.3	62.9
18대 2012	74	68.5	70%	75.6	82	80.9	75.8
19대 2017	77.7	76.1	74.2	74.9	78.6	79.1	77.2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투표율의 증가: 총선

총선 연도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8대 2008	33.2	32.9	24.2	31.0	39.4	47.9	60.3	65.5	46.1
19대 2012	47.2	45.4	37.9	41.9	49.1	52.6	62.4	68.6	54.2
20대 2016	53.6	55.3	49.8	48.9	52	54.3	60.8	70.6	58.0
21대 2020	68.0	60.9	56.7	56.5	57.6	63.5	71.2	80.0/ 78.5/ 51.0	66.2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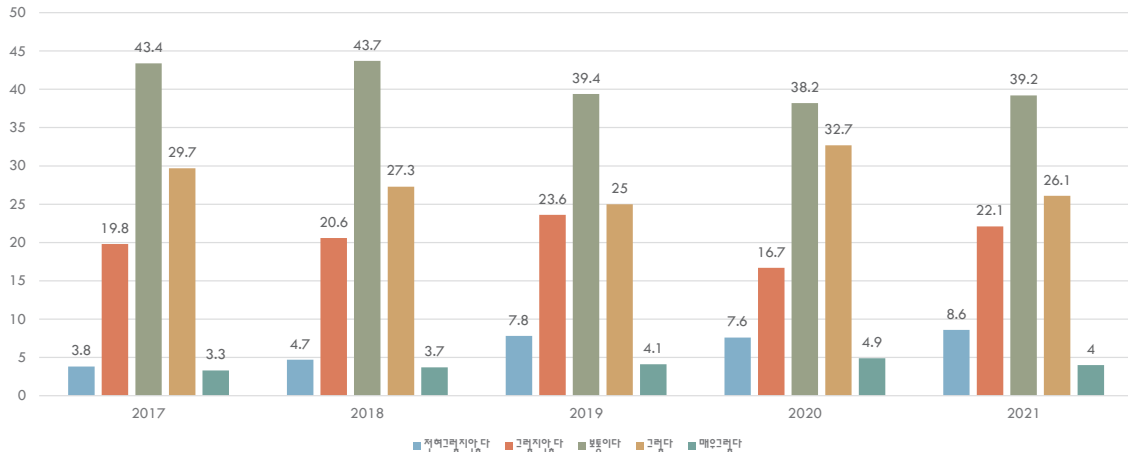
투표율의 증가: 지방선거

지방 선거 연도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06	37.9	38.3	29.6	37	45.6	55.4	68.2	70.9	51.6
2010	47.4	45.8	37.1	41.9	50	55	64.1	69.3	54.5
2014	52.2	51.4	45.1	45.1	49.9	53.3	63.2	70.9	56.8
2018	54.1	52.9	51.0	53.0	55.4	58.6	63.3	72.5/ 74.5/ 50.8	60.2

II.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현상

-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정치 효능감 (political efficacy)의 상승이 투표율 증가를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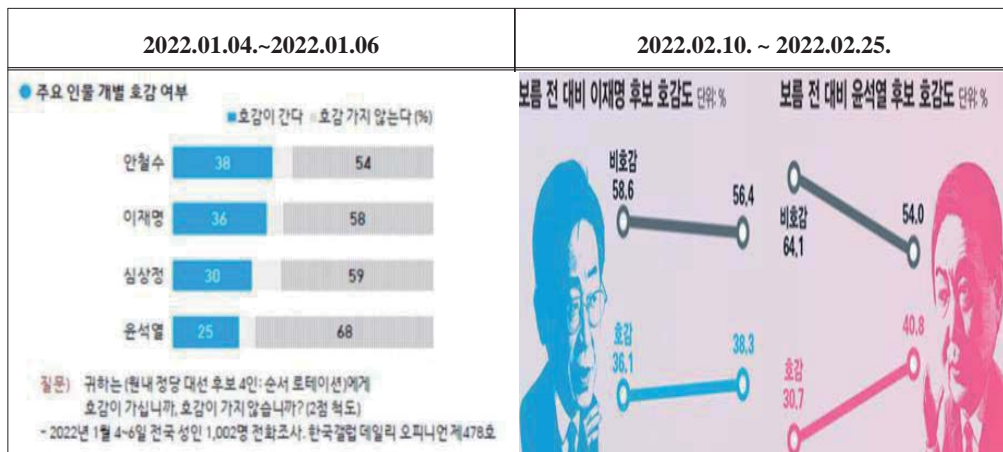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 사회 경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II. 20대 대선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

-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 대표성(representation)에 심각한 결함
 - 정치/사회 양극화를 넘어 적대감 고조
 -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 혹은 민주주의 방식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78호 2022년 1월 1주

출처: 시사저널, 2022. 02. 25

III. 20대 대선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

-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갈등 구도 형성
 - 20대에만 나타나는 남녀 간 지지 성향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연령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40대 투표 성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재 명	윤 석 열
총 득표율	47.83%	48.56%
18-29 남성	36.3%	58.7%
18-29 여성	58.0%	33.8%
30-39 남성	42.6%	52.8%
30-39 여성	49.7%	43.8%
40-49 남성	61.0%	35.2%
40-49 여성	60.0%	35.6%
50-59 남성	55.0%	41.8%
50-59 여성	50.1%	45.8%
60-69 남성	30.2%	67.4%
60-69 여성	31.3%	66.8%
70세 이상 남성	25.6%	72.5%
70세 이상 여성	30.7%	67.8%

출처: 방송3사 출구조사, 연합뉴스, 2022.03.09

IV.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탐색

❖ 전환시대 민주주의 위기 담론

- 그간 민주주의 위기 담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 민주주의 위기의 내용과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 민주주의 위기 연구는 크라우치(Colin Crouch)의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 담론과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비토크라시(vetocracy) 담론이 주목받음
 - 한편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담론이 주를 이루고,
 - 최근에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hybrid) 민주주의 담론이 활발히 진행됨

IV.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탐색

■ 민주주의 위기 담론

- 크라우치(Crouch 2008)는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질이 점차 나빠지는 역설적 현상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을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라 표현
- 포스트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모든 특성, 즉 자유로운 선거, 정당 간의 경쟁, 토론의 자유, 인권, 정부의 투명성 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소수의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이 권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
- 즉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으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 후쿠야마(2014)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vetocracy)라 비판, 이는 어떤 단일 기관(entity)도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을 갖지 못하여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함

IV.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 탐색

- 정부 혹은 다른 제도(institution)들이 과도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
-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담론은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주장
- 기존 거버넌스 논의와 맥을 같이하여 대의민주주의 수직적 권력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혹은 혼합적 거버넌스 모델로의 변화를 주장
-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정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사회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을 추구(Kooiman 2003)
- 공적 행위자와 사적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정부가 홀로 진행하는 전통적 통치방식을 반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원구환 2003)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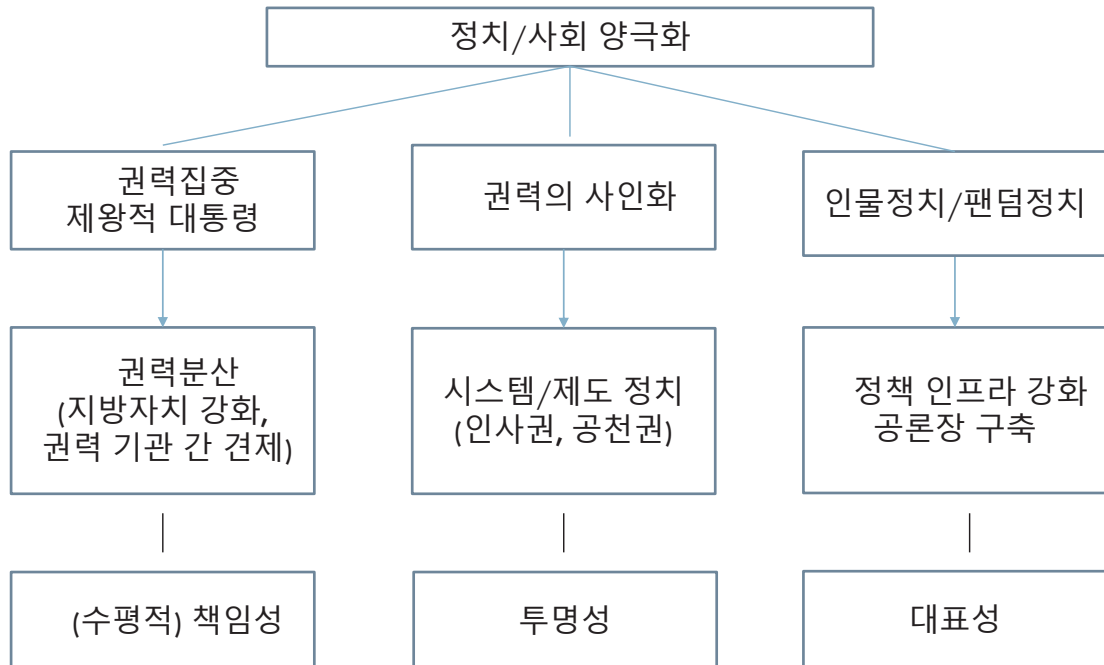
- 전환시대 특성은 초연결사회,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전환 시대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과 일상적인 통치방식 모두에 있어 변화를 요구
 -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전환 시대에 따른 정치/사회 구조의 변화, 권력 작동 원리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 역설적 현상 모두 제도/조직 vs. 시민/개인 간의 부조화 혹은 단절로 인해 발생
 - 제도 및 조직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개인이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짐
 - 민주주의 평가는 제도의 존재 및 작동에 관한 지수가 중심인 반면, 정치불신은 제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 혹은 의식
 - 정치불신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잘못된 제도를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의 자구노력, 혹은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압력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 전환시대에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이 필요함
 -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전환시대의 정치/사회 구조 및 시민의식의 변화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구현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혁은 민주적 제도 작동의 핵심 원칙인 대표성(representation), 반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등의 전환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국정치/사회가 처한 현실적 문제 및 한계, 즉 심각한 사회갈등과 양극화, 높은 정치불신, 무력한 정당정치, 허약한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고안하고 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 따라서 한국 정치/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심각성 및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제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함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 정치개혁을 대하는 기본 원칙

- 다양성, 복잡성에 대한 대응
 - 거대 담론, 포괄적/획일적 제도/정책을 피해야
 - 제도/정책의 적용 범위와 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도/정책을 시행
 - 예) 중앙정부 단위의 시민참여 방식이 기초단체와 같을 수 없으며, 안보 분야 시민참여 방식이 교육 분야와 같을 수 없음
 - 문제의 핵심과 출발은 국가/중앙정치에 있다하더라도 문제해결의 출발은 기초단체 혹은 생활공동체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의 변화와 실천으로 부터 해야
- 불예측성에 대한 대응
 - 제도/정책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 기존의 개념, 가치, 인식, 그리고 실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전환시대'에 있어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피드백이 수시로 이뤄져야 함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기능(function)과 본래적 목적 구현에 집중
 - ‘청와대 이전’의 본래적 목적은 소통과 권력 내려 놓기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도입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기 위함
그러나 정당이 대표(representation)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 ‘결선 투표제’는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더 없이 높은 현실에서는?
 - 개혁의 초점이 대의제 하의 통치체제(대통령제, 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변화에 있음
 -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적 대표를 신뢰하지 않고 정치적 권한을 더 이상 위임하려
하지 않으면?
- 국민통합은 ‘열린 사회’로부터 출발
 - ‘내 것’ (이념과 가치, 팬덤, 열성 지지자)을 내려 놓는 것에서 부터 출발
 - 팬덤 정치는 내 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와 상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쌓아 가는
전형적인 ‘닫힌 정치’

V.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 개혁의 목적과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 ‘개혁’, ‘국민통합’, ‘소통’, ‘공정’, ‘국민의 뜻’ 모두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
 - 추상적 개념 → 편의적 이해 → 정략적 이용 → 정치/사회 양극화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설명하고, 논쟁하고, 합의
- 개혁의 성과에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 50년 넘게 쌓인 문제가 5년 안에 해결될 수는 없다
 - 우리 정치/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에 있으며, 인지적 양극화를 넘어
정서적 양극화의 단계에 이름
 - 불신과 분노 그리고 등돌린 마음을 돌이키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함
 - 4차산업혁명사회 그리고 ‘전환시대’라는 환경은 우리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난해한 문제를 던지고 있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영국의 브렉시트, 남미의 정치 혼란, 미국의 포퓰리즘 등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격동적 정치·경제 변화는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의 정치적 결집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고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들이었다.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답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에 있다. 30년 전 소련 해체 후 동유럽은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공부문 고용이 민간부문 고용으로 전환됐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는 초과고용과 초과임금을 주던 공기업이 해체되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노동성 향상과 투자 증가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 만들어 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새 정부 공약에도 언급된 기업 성장 정책(규제 혁신으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장애물 제거) 등 다양하다. 하지만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다. 고용, 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의 유연성도 확대하여야 한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을 쉽게”이다. 이와 관련해서 파견 가능 업종의 규제를 없애고,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를 완화하여 내부직원이나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블라인드 채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는 “이직, 해고를 용이하게”이다.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가된 부분인데, 다양한 해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성과 부진 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약정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 보장도 필요하다.

셋째는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이다. 52시간 운영에 유연성을 두어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연이나 월 단위로 변경하고, 스타트업은 특례업종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특례업종을 산업별로 하지 말고 직종별로 변경하여 연구개발과 같은 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는 “임금을 유연하게”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므로 피해야 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국회에서 하며, 물가연동제로 5년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취업규칙, 근로조건의 변경 절차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안전망 정책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해고와 고용 사이의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핀셋 정책이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곳곳에 대한 직접적 규제(즉, 유연성 낮추는 정책)가 아니라 실업자 대상으로 한 통합된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계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빈곤 가계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는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업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써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가 있는데 이를 확대,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의 재취업촉진수당 지급을 취업 후 잔여기간 전체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취업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임금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료로 내는데, 실업급여 수혜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은 보험료를 더 내게 하여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루고 실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구노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심각한데, 현재 논의되는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은 가족 내 부양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규모를 크게 할수록 출산이 감소하여 재정문제를 악화시킨다. 대안은 현재 방식이 아닌 싱가포르 같은 개인구좌 적립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복지정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영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

-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큰 변혁 발생
 - 영국의 Brexit, 남미의 정치 혼란, 아시아와 미국의 포퓰리즘 등
- 변혁의 공통점: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이 기존의 정치시스템을 거부하고 과격한 변화를 요구
- 이런 변화는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
 - 폐쇄정책의 경제 손실, 효율성 낮추는 소모적 대립에서 오는 기회비용
-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변화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답한 경제학자 비율이 97%

일자리 만드는 방법: 공공 vs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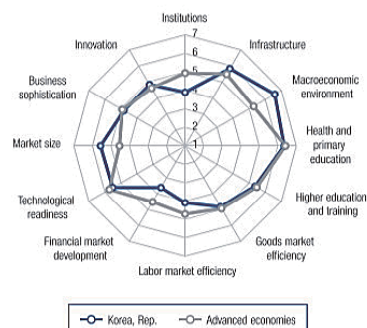
- ❑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 ❑ 공공 일자리로? 아니면 민간 일자리?
- ❑ 30년 전 소련이 해체되고, 그 후 동유럽 국가들 공기업 민영화 실시: 이 결과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
 - ❑ 공기업은 초과고용, 독점력을 바탕으로 초과임금
 - ❑ 따라서 민영화는 고용과 임금을 줄이는 결과 예상
 -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기업 성장과 규모 확대가 가능하였고, 고용과 임금 증가가 발생
 - ❑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

3/31/2022

3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면?

- ❑ 여러 방법: 새 정부 공약에도 언급된 기업 성장 정책 (규제 혁신으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장애물 제거,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등
- ❑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리는 것
 - ❑ 경제학자 설문조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 ❑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쟁력지수 선진국과의 비교



3/31/2022

4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면?

-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 해고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
 - 적어도 둘 중 한가지는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
- 왜 유연성이 중요한가?
 - (1) 기업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 제고하여 고용 증대
 - (2) 새로운 경제 변화에 잘 대응 (Gig경제 발달, 스타트업)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
- 이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확충은 필수
 - 물론 해고와 고용 사이의 실업 발생에 대한 핀셋 정책으로

3/31/2022

5

유연성 정책방향 1: 고용을 쉽게

- 파견과 도급규제 완화
 - 파견법에 32개 업종만 허용
 - 해외 주요국가처럼 전업종으로 확대 필요
 - 파견과 사내도급의 분류가 정확하도록 개정필요
- 기간제 규제 완화
 - 직접고용인 기간제: 현재 2년 제한
 -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 내부직원이나 신규채용을 허용
- 블라인드 채용 규제 완화
 - 블라인드 채용: 기업의 채용비용 상승. 최소한 규제로

3/31/2022

6

유연성 정책방향 2: 이직, 해고를 쉽게

- 경제학자 설문조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 부분 (65%)
- 다양한 해고 관련 규제 완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성과 부진 사유로 통상해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 부당해고에 대한 근거만 존재.
 - 금전보상제도 신청권을 사용자에게도 부여
- 자유로운 이직 보장
 -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약정 완화

3/31/2022

7

유연성 정책방향 3: 노동시간 신축적으로

- 현재 법정근로시간 (40시간), 12시간 초과근로 금지 (52시간)
- 52시간 운영의 유연성
- 새로운 기술 산업(Gig 경제), 스타트업에 큰 장애물
-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단위에서 연이나 월 단위로 변경[†]
- 스타트업은 특례업종(5종)으로 포함시킬 수[†]
- 특례업종을 산업별로 하지 말고 직종별로 변경
 - 한 업종의 사업체에도 다양한 직종 (특히 연구개발)
- 현 공약으로 있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전환은 기업의 선택이지 정책의 부분이 아님

3/31/2022

8

유연성 정책방향 4: 임금을 유연하게

□ 최저임금

- 지난 5년 40% 이상 인상되어 현재 중위임금의 60% 이상
- 이는 프랑스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거의 최고수준 (프랑스의 청년실업률 매우 높은 편)
- 경제학 연구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줄임
- 정책변화 방향: (1)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2)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3) 물가연동제로 5년 동결

□ 호봉급(근속연수에 따른 자동호봉상승) 제도 개혁[†]

-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
- 정년 연장하는데 용이한 환경
- 결국 이는 기업이 결정할 사항. 정부 정책의 역할 최소로
- 하지만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절차를 유연하게 할 필요

3/31/2022

9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 노동시장 유연성은 해고와 고용 사이의 실업 발생

□ 이런 상황에 대한 안전망 정책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정책의 원칙

- (1) 이 실업 상황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핀셋 정책
- (2) 노동시장 곳곳에 대한 직접적 규제(즉, 유연성 낮추는 정책)가 아니라 실업자 대상으로 한 통합된 복지정책
- (3)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계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3/31/2022

10

실업자 대상 복지정책

- ❑ 노동시장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 ❑ 예: 최저임금
 - ❑ 최저임금 정책은 실업 확대라는 부작용
 - ❑ 역사적으로 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는 사회에서 사용
 - ❑ 한국은 이미 실업에 의한 빈곤가게 파악 완벽
 - ❑ 이런 상황에서는 타겟형 복지정책이 효율적
 - ❑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효율적이지 못 함

3/31/2022

11

실업 복지정책 제안 1: 고용보험

- ❑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 ❑ 실업에 처한 노동자의 소득보전
- ❑ 그러나 취업 지연 효과
- ❑ 현재의 재취업촉진수당은 1/2기간 전 취업하면 1/2기간의 구직수당만 지급 → (1) 남은 기간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 (취업을 신속하게 할 유인)
- ❑ 현재 기업은 노동자 당 임금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료로 납입 → (2) 실업자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은 보험료 더 내게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3/31/2022

12

실업 복지정책 제안 2: 근로장려세제 강화

- ❑ 실업자가 처음부터 좋은 임금을 주는 직장 찾을 수 없음
- ❑ 실업에서 원하는 직장으로의 이동은 여러 단계를 거쳐
- ❑ 이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동시에 신속한 이동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적절
- ❑ 일시불로 소득보전을 하면 근로의욕 상실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할 유인 적어짐
- ❑ 실업기간을 줄이면 인적자본 손실 최소화

3/31/2022

13

은퇴 복지정책 제안: 국민연금 개혁

- ❑ 인구노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심각
- ❑ 현재 논의되는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고
- ❑ 경제학 연구 결과: 연금 규모를 크게 할 수록 출산 감소 (연금은 가족 내 부양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
- ❑ 대안은 현재 방식이 아닌 개인구좌 적립방식 (싱가폴)
- ❑ 개인이 적립하고 그 돈은 본인, 또는 정부가 관리
- ❑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이지 복지정책이 아님. 복지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3/31/2022

14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발표 자료 요약)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묵 교수

우리나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여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다. 미국 CIA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구매력을 고려한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뿐이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제는 고도 성장기에 구축한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지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처할 시대적 상황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자유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민간 영역에서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국민의 힘 대선공약은 바람직한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축소, 정부의 사업인허가 권한 축소와 금융시장 자율화는 새 정부가 더 강조해야 할 정책 과제이다.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산업, 기업,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새 정부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과거에도 유사한 공약을 내건 정부들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제도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주체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게 마련인데 그것을 헤쳐나갈 의지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실행에 도움을 줄만한 방법론과 자유시장경제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정부는 2년간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2년 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레임 덕 현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바, 취임 초기에 거대 야당을 제도 개혁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도 개혁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계 개편, 야당과의 공동 정부 구성, K-Voting 시스템이나 공론화 위원회 등을 활용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정교하게 조사하여 야당을 동참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을 적으로 돌릴 적폐 청산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다.

둘째, 자유시장경제 강화를 위해 촘촘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경력 성공을 걸고 규제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개혁

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하고, 기존 정부 부처에도 규제개혁부와 협업할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기관이 쓸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을 줄여야 한다. 물가연동 과세 표준제도 도입하여 물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연도별로 정부 기관별 공무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공헌한 고위 공무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편법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을 설치 및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축소해야 한다. 경제 개발 초기에는 이들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이제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업 영역에 민간 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분할 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과 시장에 대한 관치를 줄이고 시장 자유화를 해야 한다. 면세점, 홈쇼핑, 은행,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아직도 정부 기관이 사업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진입 장벽을 쳐주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야는 모두 자유화를 해야 한다. 특히 관치가 가장 심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분야 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인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기존 산업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신생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국내 기업간의 합병과 협력 유도, 정부의 구매 보장, 의도적인 자국화폐 평가절하 등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Helper로서의 역할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기업들의 열망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도록 자극하고, 국내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높이고, 투입요소의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는 Pusher와 Challen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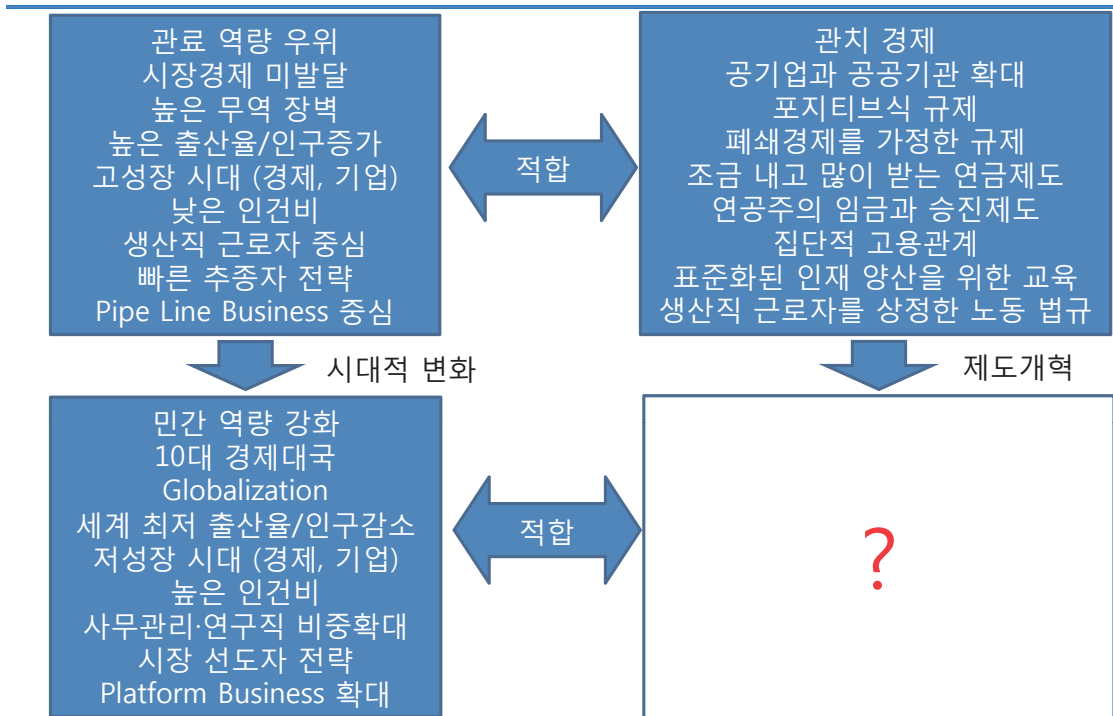
자유시장경제와 제도개혁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묵 교수

제도 지체 문제의 심각성

-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진입
 - 2020년 기준 구매력을 고려한 일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뿐임
 -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여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결과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뀐 나라
 - 196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 산업 구조의 변화: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교육 수준의 상승: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율
 - 합계출산율의 초고속 하락: 1960년 6.16명 → 2021년 0.81명
 - 초고령화 속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26년
- 제도 지체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 가장 빨리 바뀐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적 특성과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제도간의 큰 괴리 발생
 - 결과: 경제 성장 정체,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국민 행복 수준, 높은 청년 실업률, 부모 세대보다 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시대적 변화와 제도개혁



국민의 힘 대선공약에 대한 평가

-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자유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 민간 영역에서의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유연화
- 정책 기조에 맞게 더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축소
 - 정부 사업 인허가 권한 축소와 금융산업 자율화
- 경제, 산업, 기업,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
 - 과거에 유사한 공약을 내건 정부가 실행에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함

최대 실행 장애요인: 여소야대 정국

-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 농후
 - 정계 개편을 하지 않는 한 최소 2년은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국정 운영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
 -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법을 개정할 수 없고 개혁을 할 수가 없는 형국임
 - 2년 후에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레임 덕으로 국정 동력 상실 위험
-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계 개편?
 - 야당과 공동 정부 구성 등 야당과의 협치
 -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론을 정교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의 동참 유도
 - 공론화 위원회를 활용한 여론 조성 and 야당의 동참 유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좋은 이유
 - Barro 교수의 연구 (1990, 1991)
 - 1960년부터 1985년까지 95개 국가 자료 분석
 - GDP 중에서 정부 지출 비중이 올라가면 일인당 국민소득 성장률과 민간 투자가 감소
 - 정부 지출 비중이 0%에서 25%로 올라가면, 일 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3% 정도 떨어짐
 - 왜?
 - 남의 돈(정부 예산, 국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돈만큼 신중하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실행이 어려운 이유
 - 모든 조직은 성장하고자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승진할 자리도 생기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정원을 많이 받아 오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음
 - 관료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정부 업무 관련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는 인센티브가 있음
 - 결과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의 비중은 커져 왔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행 방안

- 자금: 물가연동 과세 표준제도 도입 필요
 - 현재 방식으로 정부는 과세 표준을 올리지 않는 한 물가 인상으로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실질 세율이 올라감: 국민들의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이 비율이 줄어듦
 - 2008년 만들어진 과표 사용: 2021년에는 국민들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으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대폭 줄어듦
 -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과표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싶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더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행 방안

- 인력: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
 -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이 늘어나 116만 명의 공무원: 더 적은 수의 국민이 한 명의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함
 - 기업으로 치면 공무원은 간접인력인데 기업들은 간접인력의 비율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직접인력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함
 - 공무원들은 온갖 이유로 자기 부서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래야 한 명이 해야 할 일거리가 줄어들고 자기 부서의 권력이 커지고 승진할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임
 - 늘어난 인력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데 乙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보다는 甲으로서 국민들을 규제하는 일을 만들고자 함 → 뛰어난 인재들이 부가가치가 마이너스거나 낮은 일을 하여 국가 전체에 손해를 끼침
 - IT가 도입되어 업무효율성은 높아졌는데도 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감
 - 정부 부처별로 연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행 방안

- 고위 공무원 평가 기준의 변경
 - 관료들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에 비해 정부 업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공식 비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저항할 가능성이 큼
 - 차기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력하게 추구하면 자기 부서의 인력을 줄이되 산하 기관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기존 산하 기관을 키워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정부를 만들 가능성도 높음
 - 고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것, 산하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것을 평가 요소로 넣고 이를 승진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산하기관 확대 방지
 - 국가 정책 목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했던 일을 산하 공공기관을 만들어 이전할 수 있는 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확대를 막아야 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

- 시대적 사명을 다한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초고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
 - 이제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시장경제가 잘 발달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가?
 -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 Milton Friedman: 공기업보다는 민간 독점기업이 더 좋다.
 - 정부가 만들어 준 독점 기업으로 혁신 동기가 매우 약하다.
 - 국민과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 운영보다는 임직원들을 위한 기업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의 경우 뛰어난 인재들의 역량을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

- 그런데 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가?
 -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332개 → 350개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1090개 → 1208개
 - 정부 기관이 정책을 직접 집행할 수단으로 공공기관 설치 + 정부부처와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력과 자원 확보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갈만한 자리 만들기 등
 -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핑계로 정부부처들이 공공기관 설치: 예, 사단법인 금융정보원
 -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집권당, 고위공직자들이 줄이려 하지 않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포스코나 KT의 CEO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라.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 방안
 -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존재하는 곳 이외에는 모두 민영화
 -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업 영역에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유도
 -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생길 수 있는 산업영역에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분할 후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4대 학회: 공기업은 새 정부에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가?
 - 전혀 믿지 않는다 12.2%, 거의 믿지 않는다 48.4%, 약간 믿는다 37.8%, 매우 믿는다 1.7%
 - 긍정 평가 비율: 의료기관 (88.1%), 교육기관 (67.1%), 군대 (66.5%), **대기업 (63.4%)**, 중앙정부 부처(60.4%), 금융기관 (55.2%), 대통령 (53.1%), 지방자치단체(49.8%), 청와대 (48.1%), 법원 (42.3%), **공기업 (39.4%)**, 시민단체 (36.9%), 경찰 (36.5%), 종교기관 (35.8%), 검찰 (35.7%), 신문사 (25.9%), 노동조합 (24.2%), TV방송사 (23.0%), 국회 (18.8%), 정당 (15.3%)
- 한국경영학회: 바람직한 정부의 공기업 정책 1순위
 - 공기업 민영화 (36.9%), 공기업 사업 영역에 민간기업 진출 확대 유도 (31.2%), 소비자 대표 사외이사 의무화 (14.0%),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의무화 (9.4%), 공기업 확대 추진 (7.5%), 기타 (1.3%)

시장 자유화

- 정부가 만들어 준 산업 진입 장벽 폐지
 - 면세점, 홈쇼핑, 은행,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아직도 정부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진입 장벽을 쳐주고 있음
 -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야는 모두 시장 자유화
- 금융 시장 자유화
 - 금융 기관 vs. 금융 회사: 금융 산업은 관치가 가장 심각한 산업으로 관치로 인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혁신을 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금융 회사가 없음
 -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인허가권 행사와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제
 - 은행의 BIS비율 규제 등 금융 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규제는 개혁할 필요가 있음
 - 2021년에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 대출 한도 적용

자유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 왜 규제는 계속 증가해 왔는가?
 - 과거의 대통령들도 후보 시절에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규제의 총량을 줄인 대통령은 없었음
 -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환경 보호, 안전 등 새로운 요구 출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신설
 -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몫을 키우기 위해 규제 신설 요구
 - 규제를 만드는 부서와 사람은 많으나 규제를 없애는 부서와 사람은 매우 적음
 - 규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과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이익 집단들의 규제 혁파에 대한 저항
- 촘촘한 포지티브 규제의 결과
 - 기존 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상의 변화에 맞게 변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교체 속도를 보라.
 - 촘촘한 포지티브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사업모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모델이 많고 창업 비용이 많이 듦
 -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분포: 2020년 12월 3일 CBINSIGHTS 자료를 기준으로 전세계 499개 중에서 미국 242개, 중국 118개, 인도 25개, 영국 24개, 독일 12개, **한국 11개**, 이스라엘 8개, 일본 4개

자유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제 역할을 못하는가?
 -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교수/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가
 - 외부에서 규제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위원회에 상정
 -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의 밥그릇을 깨뜨릴까??
-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필요
 - 현재의 포지티브식 규제를 영미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의 근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 설치
 -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자신의 경력 성공 여부를 걸도록 해야 함
 - 기존 부처에도 규제개혁부와 협업할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기업분야 정책 기본방향

- Michael E. Porter (1990)는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라는 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하면서 Diamond Model 제시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제시함
- 정부의 역할
 - 일인당 생산성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을 생산성이 낮거나 증가하지 않는 곳에서 생산성이 높거나 높아지는 영역으로 재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기존 산업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두 가지 상반된 역할
 - Helper로서의 역할: 보조금 지급, 국내 기업간의 합병과 협력 유도, 정부의 구매 보장, 의도적인 자국화페 평가절하 등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Pusher and Challenger로서의 역할: 기업들의 열망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도록 자극하고, 국내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높이고, 투입요소의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는 Pusher와 Challen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37.5%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업분야 정책 기본방향

-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인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
-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기대 (2022년 2월 여론조사)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빈도	비율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	203	36.91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134	24.36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104	18.91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	68	12.36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추구	38	6.91
기타	3	0.55

4대 학회회원 설문조사: 기업분야정책

정책 과제	중요	잘할 것	잘못할 것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7.3	11.8(6)	10.0(8)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93.6	1.7(14)	7.3(9)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정책	93.3	4.3(8)	16.1(4)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92.2	29.2(3)	0.3(13)
중소·벤처기업 지원	90.0	6.2(7)	3.8(12)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활성화	88.9	19.9(4)	0.0(14)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비	88.8	29.9(2)	5.7(10)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88.7	2.3(11)	27.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87.7	2.3(12)	11.8(6)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84.5	1.7(15)	36.2(1)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82.3	13.3(5)	0.0(14)
사회적 경제 활성화	77.1	2.4(13)	13.8(5)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75.0	3.9(9)	5.3(11)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72.8	2.8(10)	23.4(3)
노동시장 유연화	71.0	40.3(1)	10.4(7)

4대 학회회원 설문조사: 기업분야정책

-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의 비율
 - 7점 척도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의 비율
 - 설문에서 제시한 15개 기업분야 정책 과제 중에서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2개를 선정하도록 요청했음
 - 해당 정책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의 비율
 - 설문에서 제시한 15개 기업분야 정책 과제 중에서 새 정부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2개를 선정하도록 요청했음
 - 해당 정책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 중요한 과제인데 새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정책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 중요하지만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정책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창출
-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기업정책

경영학회회원 설문조사: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정책 과제	응답자 비율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지원	62.3
넓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46.1
기초 기반 연구지원 확대	39.3
산업의 디지털 촉진 지원	31.2
장기 정책자금 지원	13.3
기타	0.3

경영학회회원 설문조사: 중소·벤처기업지원

-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정책 과제	응답자 비율
벤처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53.9
창업 및 기술 지원	52.9
실패 후 재도전 기반 마련	37.7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규제 완화	28.2
수출 및 물류 유통 지원	19.2
기타	1.0

경영학회회원 설문조사: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1+2순위)

정책 과제	응답자 비율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유도	43.5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37.3
통상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34.4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정책	25.0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16.6
파업시 대체인력 활용 허용 등 노사관계 정상화	15.9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10.4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6.5
기타	2.3

경영학회회원 설문조사: 노동 정책

- 노동 관련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정책 과제	응답자 비율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	49.0
직무와 성과에 비례하는 임금체계 구축	35.4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	29.9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8.9
직장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22.4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허용	10.7
파업 시 대체 인력 활용 허용	8.4
노동이사제 도입	8.4
기타	1.0

경영학회회원 설문조사: 공기업 정책

- 공기업 관련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1+2순위)

정책 과제	응답자 비율
공기업 사업영역에 민간기업 진출 확대 유도	64.3
공기업 민영화	53.9
소비자 대표 사외이사 의무화	32.8
노동자 대표 사외이사 의무화	17.5
공기업 확대 추진	12.0
기타	3.9

Q&A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역설 공화국 (republic of paradox)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20대 대선 당선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이 만든 문제에 대한 답안지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본격적 산업화로 물질적 풍요의 기반을 만든지 60여년, 직선제로 민주화를 이룬 후 35년이 흘렀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선진경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다. 그런데 국민 삶은 불만, 불신, 불안이 넘쳐나는 3불사회다. 눈높이에 비해 경제·정치 현실은 ‘불만’의 대상이고,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중 정치권은 가장 ‘불신’의 대상이다. 노년층은 노후를, 장년층은 자녀교육의 부담을, 청년층은 취업과 내집마련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일인당 소득(GDP)은 계속 성장했지만, 국민 행복감은 계속 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풍요의 역설’(paradox of affluence)을 겪고 있다. 2013년 세계행복지수 세계 41위에서, 2021년 62위로 떨어졌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28.6명으로서 OECD 국가 1위다. 심각한 노인 빈곤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노인자살로, 과도한 입시경쟁은 청소년 자살로 이어졌다.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이 더 불행해졌다면, 그간의 성장이라는 목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화는 중요한 성취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냉소는 위험 수준까지 왔다. 과거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부하에서 오히려 제도 신뢰, 일반 신뢰가 높았는데, 이는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신뢰 적자’가 심화됐다. 가장 큰 적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만들었다. 규칙을 제정·집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심판역할 기관을 가장 믿지 못하니,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신 비용을 치루게 되었다.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민주화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zation)이다. 치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만, 공유할 해법이나 믿을만한 규칙이 없다 보니, 모래알처럼 흩어진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산업화 세력을 대변한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 민주화 세력을 대변한다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빼놓은 듯 닮아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출산율이다. 1970년대 초 100만 명을 넘나들던 연간 출생자 수는 2002년에 처음 40만 명대로 진입했고, 2021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4는 통계작성 후 최저치이자 세계 신기록이다. 인구 ‘보너스’로 인해 성장의 덕을 보던 나라가 인구 ‘오너스’로 고통받게 될 미래가 두렵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예산은 총 200조에 달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진단도 처방도 먹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다.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은 없다. 사회적 지원과 복지의 중요한 축이 된 가족과 공동체는 사라졌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통한 복지 안전망은 제대로 짜지지 않았다. 넓어진 구멍이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함정이 됐다. 현재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데, 그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합주택에 산다. 세계적으로 가장 집단화된 주거지만, 가장 익명화되고 개인화된 공동체에 산다. 사회적 고립자는 원래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서양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다.

2. 심각한 제도 지체

문제가 심각해도 해결 방법이 분명하면 희망이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에 관한 다양한 평가들은 한국이 해결할 제도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2017년에는 137개국 중에 26위까지 떨어졌다. 1위 스위스는 물론, 아시아권의 싱가포르(3위), 홍콩(6위), 일본(9위), 대만(15위), 말레이시아(23위)에도 뒤진다. 2018년부터는 WEF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 직접적인 추세분석은 어려워졌다. 다만, 국가별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세계경제포럼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간접자본(2위), 대학진학률(3위), 특허 수(5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5위) 등은 양호한데, 노사관계 협력(130위), 기업이사회 역할(109위), 정부 정책 결정 투명성(98위), 정부규제 품질(95위), 은행 건전성(91위), 정치인 신뢰(90위) 등은 낙제수준이었다.

2021년 IMD 보고서는 64개국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그중 28위를 차지했다. 특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기술자양성(12위), 건강 인프라(12위) 인재 육성(6위), 첨단분야대졸자(12위) 중학생 학업성취도(6위) 등이지만, 생활물가(55위), 국제화 노출(52위), 유능한 경영진(53위), 대학 교육의 질(47위) 등에선 최하위였다.

한마디로 ‘고투입·저효율’ 국가다. 국가경쟁력 구성 요소 중 인프라 투자와 하드웨어, 양적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제도 운용 관련 소프트웨어는 최하위다. 과거 발전국가의 정부주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제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큰 변화 없이 그 골격이 유지됐다.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모두 승자독식형 경직적 다수제(rigid majoritarian model)인 까닭에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통합을 촉진하기보다, 선거때마다 극단적 혐오와 진영 양극화를 촉진해 갈등을 부추긴다.

4차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제도 운용 능력’이다. 1998년 외환위기 충격 속에서 졸속으로 도입한 IMF 처방에 따른 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머리라면, 급격한 정리해고 이후 고착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조선시대 신분차별과도 같은 이중노동시장구조가 몸통, 그리고 유럽식 조합주의를 긴급 결합한 노사정협의체가 다리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따로 논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도 산업혁신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학 교육 공급을 늘려도 구직도, 훈련도, 교육도 관심 없는 켄거루족(NEET)만 늘어난다. 급속히 변화한 정치와 경제현실에 걸맞지 않은 제도의 지체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20대 대선은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치뤄졌다. 한국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는 대부분 구조적, 고질적, 포괄적인데, 역대 정부의 정책 대응은 단편적, 부분적이었고, 정치적 결정은 단기적, 대중적이었다.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난 30여 년 동안 문제는 더욱 깊어진 반면, 단기적 처방만 이어졌다. 20대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 건 공약집은 거의 모든 영역, 지역, 세대에 대한 장밋빛 약속하는 내용으로 넘쳐났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골라내고, 앞으로 5년간의 방향을 정해야 할 터인데 이 과정에서만큼은 멀리 보고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3. 역대 정부의 실패가 주는 교훈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다 침몰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적 선거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제에서 실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면,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전제를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설계하는 이중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이 필요하다. 그간 역대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다음 몇가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역효과를 낳았다. ‘포용사회’는 긍정적 가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단기간에 밀어붙인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다. 문재인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졌는데, 시간제 일자리가 229만개 늘어나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의 증가로 귀결됐다. 포용성을 지향한 정책이 사회를 더 차별적이고 배제적으로 만들어낸 역설이다. 혁신형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창출형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장기적 안목과 인내심 없이 좋은 일자리를 단박에 만들 수 없다.

둘째, 지방 분권화나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는 훌륭한 명분이지만, 중앙권력에 의존해 성취하려는 방법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분권’을 위해 지방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중앙의존형 지방분산’ 경쟁을 격화시켰다. 수도권이나 일본의 간사이권,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권과 경쟁하려면, 자율적인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 산업정책을 세우며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할 교육기관을 갖춘 광역클러스터를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된 분권은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 권력의 개입은 또 다른 줄세우기를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입은 정권교체이후 신권력에 의한 개입을 부를 것이다. 권력기관의 분권과 독립은 정권교체에 따른 줄세우기식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제도화 없이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이념적 포장지를 바꾼다 해도, 새 정부가 이어받아야 할 전임 정부의 정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과도한 차별화를 시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했고, 결국 자신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를 시도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책임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녹색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탈원전을 선언했다. 지속가능의 문제를 국내의 정파적 이해관계로 환원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룬 한·일 합의를 뒤집었다. 내부의 반대 진영을 토착왜구라 공격하고 한·일 역사갈등을 확대한 결과,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일본의 통상문제 도발로 비화됐고, 결국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GISOMIA)의 폐기라는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단기적이고 국내적인 정치적 편가르기가 가져온 심각한 국익피해다.

넷째, 지나친 이념지향성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상적이지만 경륜 없는 진보와 유능하나 부패한 보수 간 경쟁이 반복됐다. 문재인 정부는 선명한 이념성을 앞세워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결과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외교정책 등에서 온갖 악수를 두었고, 몰락을 재촉했다. 과거 보수정부에서는 보수의 이념성을 앞세웠으나 청렴하지 않은 전문가를 등용하여 임기 말 부패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념 과잉에서 벗어나 청렴하고 경륜 있는 전문가집단을 등용하여 부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정부-시장 이분법의 공허함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부역할을 확대했느

나의 문제이지, 무조건 시장에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공무원 수와 정부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예산과 정보의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은 퇴행했다. 발전국가의 일사불란함이 사라진 자리에, 부처이기주의와 부처간 예산과 인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됐다. 인기 있는 이슈에는 부처간 정책 중복이 늘어난 반면, 정작 기존 부처 소관을 벗어나 새롭게 부각되는 중요한 이슈는 관심의 사각지대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거리상권과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 부처와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로 남았다. 글로벌하게 이를 조율할 통상기능은 어느 부처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는 동네 조폭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장남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야단치는 가장과 같은 꼴이 됐다. 결혼이주여성이 늘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정책은 모든 부서의 우선 과제가 됐지만, 대체로 문제가 불거진 후의 사후 대책에 집중됐다. 입국 이전에 사전 언어 교육과 문화적 적응기간을 거친 이들을 선별해 입국시킨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결혼이주 여성의 입국 전 사전 관리에는 어느 부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새 정부의 과제: 딜레마 해소를 위한 역동적 균형전략

윤석열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다른 유력 후보자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거의 모든 이슈, 지역, 세대의 문제에 대한 장밋빛 해법을 약속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포퓰리즘이라 부를 만큼 너그럽고 풍성하다. 대표적인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의 10대 정책으로 집약된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그러나 이 정책은 솔직히 중요성의 정도나 시급성의 측면에서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이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다고보다는 급조된 인상을 준다. 민주적 선거 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보다 단기적이고 대중적이며 즉각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강·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감히 걸러내고 다듬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딜레마를 장기적인 선순환으로 풀어나가는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ing)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

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경쟁자의 공약이나 전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감히 취하고, 또 이를 계기로 협력을 구하는 협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19 와중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도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손실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그래서 확장정책과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부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야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응집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을 높여야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사회적 통합성**이다. 과도한 이념지향으로 편가르기가 심해졌고, 국민분열이 심화됐다. 넘쳐나는 사회갈등은 세대, 젠더, 계층 등을 넘어 다극화됐다. 해법은 공정성을 회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공정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측가능한 규칙이 작동한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는 도덕성이 사라진 도덕주의 정치판의 비난과 편가르기가 심각하게 공정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특히 20대가 매우 예민하게 공정성에 반응하였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상이한 지지율 교차로 드러난 성별 감수성의 차이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방 공약이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결혼 후 출산과 육아가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IMF 총재 라가르드는 한국의 저출산을 두고 ‘집단적 자살현상’(collective suicide)이라고 했다.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라는 것이다. 출산률이 높은 나라들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한국은 뚜렷한 M자형 그래프를 그린다. 결혼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은 심각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넘어선 장기적 비전이 분명해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경제-사회-환경의 주요 지향 가치는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 관계에 있다. 새 정부 성패도 제시한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의 딜레마를 인정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역동적 균형을 통해 이를 창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 해답은 경제-사회-환경 간 중첩 영역의 핵심 가치를 늘리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단기적으로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좋은 일자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리다.

1) 개인이 역량을 배양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연동형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졸자의 절반만이 취업하고 NEET족은 늘어나는데, 정작 중소기업 생산직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계속 외국인 연수생으로 채워야 하는 심각한 불일치를 어떻게 줄이느냐이다.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과 작업조건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2) 지금처럼 심하게 분절된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신분적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숨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해고를 금지하면, 기업의 고용 리스크를 늘려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과하게 줄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줄이되, 실업보험 등의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여 고용절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복지지출이 필수적이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복지지출보다 사전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투자적인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의 개혁을 미루어서는 곤란하다.

4)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되려면 혁신형 스타트업 창업을 광범하게 촉진하고, 이들의 노력이 ‘혁신지대’의 형태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젊은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도 키우는 방안인데,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담보 대출 중심에서 기술역량 평가 기반 대출로 바꾸지 않고는 이런 노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환경적 책임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도 단기적으로는 서로 충돌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영역을 교차하는 키워드는 ‘에너지’와 ‘자원/폐기물’이다. 지속가능하려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 한정된 자원과 가용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재생과 순환을 늘려야 한다.

1) 단박에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다. 우선 이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원전은 한편으로는 위험성 논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클린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탈원전 선언 이전 낮은 전기료가 산업구조를 왜곡했고 에너지 과소비를 촉진했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한 녹색성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전략 마련은 필수적이다. 탄소제로 기준에 대비하려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저장, 이동을 위한 새로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재 소비를 극대화하면 미래 가용자원은 급속히 고갈되고, 후속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이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현재와 미래, 비용과 효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특정 시점의 일회성 최적화(static optimization)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한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와 환경의 교차 영역에서는 **사회적 통합성과 환경적 책임성**이라는 가치가 단기적으로 충돌한다. 사회와 환경 간 중첩 영역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인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가 환경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구 역량이나 회복력(resilience)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환경 재난에 취약하다.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뒤지는 노약자나 심신미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기후 정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세대 간 정의’를 해소할 수 있다.

5. 우물 파는 리더십

세계는 급속하게 신냉전체제로 진입하고 있는데, G2 디지털 경제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술과 산업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도 국내적 관

점을 넘어 글로벌한 지경학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신냉전은 군사적 대결 못지않은 경제전쟁이자 산업전쟁임이 드러났다. 빅테크와 플랫폼, 그리고 앞서가는 원천기술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은 단기적으로는 서로 갈등하는 딜레마를 낳는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는 이 딜레마를 장기적 관점에서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급해서는 안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도록 설득하고 소통하며, 핵심적 과제에 집중하여 임팩트를 늘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웰빙을 높여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파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의 종합성적표 역시 얼마나 출산률을 높이느냐에 의해 갈릴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예산, 프로그램을 스마트하게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다. 문제는 플랫폼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이다. 정책 소비자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민화 이후 역대정부는 모두 취임 직후에는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새정부에서는 GDP를 넘어 제대로 국민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플랫폼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분산된 통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통계청을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승격하고, 전 부처에서 생산되는 통계를 제대로 수집하고 공유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을 산출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책임성이 어울려 선순환하는 사회가 되어야 국민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부정하는 것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딜레마 상황에 있는 종합적인 가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풀어나가는 역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역동적 균형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과제
4대학회 공동학술대회
2022. 3. 31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전략

이 재 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목차

1. 역설 공화국 (republic of paradox)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2. 심각한 제도 지체
3. 역대 정부의 실패가 주는 교훈
4. 새 정부의 과제: 딜레마 해소를 위한 역동적 균형전략
5. 우물 파는 리더십

2

3불사회와 역설

- 3불사회:
 -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 취업과 내집 마련 (청년), 자녀교육 (중년) 노후 (노년)를 생각하면 '불안'
- 풍요의 역설
 - 일인당 소득(GDP)은 계속 성장했지만, 국민 행복감은 하락 (세계행복지수 62위)
 - 10만명당 자살 OECD 1위
 -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 민주화의 역설
 - 민주화 이후 신뢰적자 심화
 -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불신
 - 심판불신으로 승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3

고투입 저효율 국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 2위 - 사회간접자본
- 3위 - 대학진학률
- 5위 - 특허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 90위 - 정치인 신뢰
- 91위 - 은행 건전성
- 95위 - 정부규제
- 98위 - 경제정책 결정 투명성
- 109위 - 기업 이사회역할
- 130위 - 노사관계 협력

고투입-저효율 국가

4

심각한 제도지체

- 승자독식형 경직적 다수제 선거제도
 - 유권자 선호와 다른 극단적 혐오와 진영 양극화 초래
- 외환위기 이후 지체된 경제제도
 - IMF 처방에 따른 자유주의 모델
 - 분단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
 - 작동하지 않는 조합주의적 노사정위원회
- 제도간 기능적 호환성 해체
 - 늘어나는 연구개발투자에도 산업혁신은 지체
 - 대학교육문호 확대에도 NEET족이 증가와 비어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
- 문제의 성격: 구조적, 고질적, 포괄적
- 정치적 대응: 단편적, 부분적, 단기적, 대중적

5

역대 정부의 실패가 주는 교훈

1.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위한 단기적 처방의 역효과
 -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최저임금인상' 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낳은 사회적 배제 심화
 - 문재인 정부 4년 풀타임 일자리 185만개 감소, 시간제 일자리만 229개 증가
 - 늘어난 일자리는 고령층,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증가
2.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분권과 권력기관 독립의 역효과
 - '중앙의존형 지방분산' 경쟁이 낳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 검찰개혁을 위한 권력개입이 낳은 출세우기
3. 역대정부와의 차별화가 낳은 정책 지속성 파괴
 -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정책을 폐기한 박근혜정부,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 박근혜정부의 한일합의를 뒤집은 문재인정부가 만든 갈등의 스파이어럴
 - 한일 역사갈등 심화 - 일본발 소부장산업 통제 -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 파기
4. 지나친 이념지향성이 낳은 정책실패
 - 선명한 이념성을 내세워 전문가집단을 배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외교정책의 실패
5. 정부-시장 이분법의 문제
 - 정부나 시장이나를 진보-보수와 등치시키는 시각에서 탈피. 제대로 된 정부 역할이 관건
 -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와 예산은 크게 늘었으나, 예산과 데이터의 '공유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역할은 후퇴
 - 중복 규제와 정책사각지대 (플랫폼 규제, 다문화정책)
 - 규제포획에 기여하는 부처는 과감히 줄이고, 사각지대 정책을 풀어갈 공유플랫폼형 운영이 절실

6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본 새정부의 과제

- 민주적 선거를 거친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중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이 필요
-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 거의 모든 이슈, 지역, 세대의 문제를 포괄하는 방대한 내용
 - 중요성의 정도, 시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새롭게 국정과제로 정리해야
- 역동적 균형전략(dynamic balancing)이 필요
 - 정태적 기계적 균형을 넘어
-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사외교적 안보 +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책임성을 구현해야 함
 - 경제적 효율성의 핵심은 혁신적 산업과 안정적 경제운영
 - 사회적 통합성 핵심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응집성과 질서를 높이는 것
 - 환경적 책임성 핵심은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
- 근본적 과제는 효율성-통합성-책임성 간 단기적인 갈등과 딜레마를 장기적인 선순환으로 만드는 것

7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의 선순환

- 좋은 일자리가 핵심. 혁신적 경제를 이루려면 우수인력이 혁신적 중소기업에 모여야 가능
 - 개인이 역량을 배양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연동형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함
 - 문제는 대졸자의 절반만이 취업하고 NEET족은 늘어나는데, 정작 중소기업 생산직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계속 외국인 연수생으로 채워야 하는 심각한 불일치를 줄이는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과 작업조건의 격차를 줄여야 해결.
- 원천기술 선도국가가 되려면 혁신형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해야 함
 - 혁신 기업의 노력이 '혁신지대'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함
 - 담보중심 금융대출을 기술역량 평가기반으로 바꾸어야 가능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분절된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신분적 차별을 해결해야 가능
 -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특정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해고를 금지하면 기업 고용리스크를 늘려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과도하게 줄이는 악순환 발생
 -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줄이되, 실업 보험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유연성'을 발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에 대한 복지지출이 시급.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노인빈곤층 지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
 - 사전적으로 위험가능성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투자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장기적 대비
 -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투명성과 감시역량 강화를 전제함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북유럽의 혁신경제)
-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개혁도 절실

8

환경적 책임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선순환

-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간 갈등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과 가용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 재생과 순환을 늘려야 함
- 급속한 탈원전 선언으로 파괴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이 시급
 - 원전의 위험성과 클린에너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균형적 평가
 - 일본 원전보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이 한국에는 훨씬 치명적 위험임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 (경계가 사라진 위험사회)
 - 탈원전 이전 왜곡된 전기요금체계가 만든 기형적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로의 회귀는 곤란
-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전환 전략 – 특정 시점의 일회성 최적화가 아닌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최적화가 필요
 - 탄소제로 기준에 대비한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시장을 만들어야

9

사회적 통합성과 환경적 책임성의 선순환

-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인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가 환경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한 대책에 참여
-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구 역량이나 회복력(resilience)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환경 재난에 취약
- 제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뒤지는 노약자나 심신미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기후 정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 가능
-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세대 간 정의’를 해결 가능

10

우물파는 리더십

- G2 디지털 경제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술과 산업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커짐
 - 국내적 관점을 넘어 글로벌한 지경학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검토.
 - 빅테크와 플랫폼, 그리고 앞서가는 원천기술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축
- 저출산 문제가 시금석, 이를 풀여가는 통계, 데이터, 정책의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역할
 - 사회적 웰빙을 높여야 해결 가능한 문제 (저출산은 ‘집단지살’이라는 라가르드의 경고)
 -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사회적 웰빙을 정확히 측정하고, 국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가 시급
 - 정책공급자인 각 부처공급형 극단적 분산형 통계를 객관적 통계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으로 강화
 - 통계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 (청와대 혹은 총리실 직속으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는 단기적 딜레마를 장기적 관점에서 선순환시키는 역동적 균형
 - 장기적 안목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도록 설득하고 소통하며, 핵심적 과제에 집중하여 임팩트를 늘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
 -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

[학회별 주제 발표]

- ◆ **통합과 공존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 **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 기본방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 **초광역권 협력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신진교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섭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 ◆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학회별 주제발표



손병권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전)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전)한국정당학회 회장
- (전)한국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박기백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재정학회 회장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신진교

-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사)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역임
- (사)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역임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단장 역임



정진철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겸 대학원장
- (현)한국경영학회 및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전)현대경제연구원 전략컨설팅 실장(연구위원)
- (전)교육부파견 군산기독교학원 관선이사



정동섭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회별 주제발표



이철승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 교수(종신)
- (전)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
- 한국정치학회(2019), 한국사회학회(2020), 한국사회복지학회(2021) 등 논문상 수상



김남국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정치학회 회장 (2021)
- 한국유럽학회 회장 (2017)
-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 국무조정실 제2차장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김선배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평가위원
- (전)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센터장
- (전)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현)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TF 위원

요약문

이 발표문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에서 파생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발표문은 크게 한국 대통령제와 양극화된 의회정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었고, 각 주제별로 문제점과 함께 개혁방안도 생각해 보았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이러한 권력이 국회, 정당, 여론 등에 의해 견제받지 않고 사용되는 양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 정부가 위력을 발휘하는 기형적 현상, 정당 양극화 속의 대통령제가 보이는 팬덤화 현상 및 진영정치,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인한 소거와 단절의 정치, 여당 지도부의 자율성 상실 등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대통령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 헌법 제86조 및 87조에 규정된 총리의 행정통할권, 장관제청권, 장관해임건의권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헌법의 개정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당연합, 정책연합, 정책협력 등 연합정치가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정치나 공동정부 등은 다당제를 구현해 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구현되면 ‘연합형 대통령제’를 통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논의를 위해 여야 간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4대학회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대통령제가 지니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이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보다는 정당간 연합정치를 유도하며 당선된 대통령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비율(54.3%)이 반대한다는 비율(33.0%)보다 대체로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거의 70%에 육박하여(매우 중요 23.9%, 중요 25.8%, 대체로 중요 20.2%) 현행 대통령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국회의 정당 양극화와 고질적 대결정치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정책결정 기능이 약화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개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7% 정도(매우 중요 42.4%, 중요 27.1%, 대체로 중요 17.4%)에 이르러 국회의 극단적 대치현상과 비생산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국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대야 협상에 임하는 여당 지도부 자율성 존중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물론 더 나아가 여여정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국회지도부를 대통령 집무실에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제도가 촉발하는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완화하는 연합정치를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이 더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형편이다.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비례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35.3%,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으나 연동의식 상한선을 설정하고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23.3%, 그리고 현재와 같은 병립형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의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

하는 비율이 22.7%로 나타나,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인 18.7%에 모두 앞서고 있다. 따라서 비례제의 확대를 통한 다당제 실현을 토대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합과 공존을 위한 새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

정치국제학과
중앙대학교

손 병 권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 III 국회 내 정당 대결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 IV 나가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제도하에 정치
는 곧 사생결단의 「전쟁」이 되기 쉽고 이번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절대권력
을 쟁취하려는 험악한 전쟁 아닌 전쟁이 6개월 이상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치
악의 근원은 권력 독점,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데 우
리는 과연 이렇듯 소모적이고 분열지향적인 대통령제에 연연할 것인지, 아니
면 권력을 분산하여 협조지향적인 다른 체제를 진지하게 모색할 것인지 결단
의 시기에 왔다...우리의 경우 현행 헌법을 책임총리제로 운영하든, 아니면 독
일식 내각제로 가든 성패의 열쇠는 사람이요, 운영의 묘다.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기사가 좋고 또한 길이 좋아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은가. 당리당락을
떠난 이성적 국민적 토론이 전개되어 선거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출처: “권력구조개편, 국민적 토론을.” 제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1월 7일 『동아일보』
‘동아시론’의 박권상 동아일보 고문의 글 가운데에서 일부



I

들어가면서



I. 들어가면서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개혁의 과제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모두 그다지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음
 - 대체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경제불황 문제가 이번 대선을 주도한 양대 후보의 최우선 관심사였음
- 한편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제안되기 시작했음
 -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정부 구성을 제창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치교체를 주장함
 - 그 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제안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치개혁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등장함



I. 들어가면서

- 그리고 야권의 경우 후보단일화 발표 이후 안철수 후보가 기자와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정치개혁에 대해 일부 언급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 정치개혁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음
- 그리고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극단적 네거티브 공방과 진영논리의 총출동 속에서 선동적 언사와 상호비방의 구호가 난무한 선거로 기록되어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 4대학회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여론조사(4대학회 공통조사: 이하 공통조사)를 보면 한국이 정치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2.5%(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49.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3.0%)에 이르고 있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고 보임



I. 들어가면서

- **한편 대통령 선거 당시 양대 후보는 모두 자신이 당선되면 국민통합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음**
 -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세력 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를 주창함
 - 윤석열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국회와의 협치를 이루겠다고 약속함
- **통합의 정치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맞이할 정치상황에서 보아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
 - 향후 전개될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과 양대 후보간 득표율 격차가 0.73%에 불과한 상황이 이러한 통합을 요구함



I. 들어가면서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발표문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에서 파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정치적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진영논리와 이에 따른 대결정치는 한국정치의 거의 전영역에 배회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음
 - 통합과 공존의 정치, 양당 과점보다는 다당 공유의 정치, 승자독식보다는 연합의 정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민주주의가 실존적 수준에서 요구됨





I. 들어가면서

- 논의의 편의상 이 발표문은 크게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와 양극화된 의회정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음
 - 물론 하나의 영역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서도 부수적인 개혁방안이 연동되어 실행되어야 함
 - 이러한 개혁과제 가운데에는 대통령 등 정치행위자의 개별적 결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개혁과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선거법이나 헌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도 있음




II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Ⅱ.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박권상 고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드러내는 권력구조로 비판받아 왔음.
 -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이러한 권력이 국회, 정당, 여론 등에 의해서 견제 받지 않고 사용되는 양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대통령제에 고유한 승자독식의 결과 대륙형 의회제 국가들에서 보이는 정당간 연합정치, 즉 권력 공유를 구현하는 연립정부는 본원적으로 출현하기 어려움
 - 남미 여러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제도와 연결된 연합형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함
 - 이는 매우 분절적 사회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낮은 정치제도화 수준으로 인해 대통령 1인 지배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president-centered system)적 경향,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속성을 보여 왔음
 - 대통령에게 1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행사의 양태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한 인치(人治)적 면모를 보여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중앙정부의 중심의 ‘소용돌이 정치’(politics of vortex)로 특징되는 정치적 토양 속에서 대통령 중심의 비제도적 권력행사가 일상화되어 대통령제의 특징인 견제와 균형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이러한 대통령 1인 지배의 이러한 비정상적 현상은 특히 법률적 기반이 없이 만들어지는 청와대 내 보좌조직의 권력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남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국정운영은 국무회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경향을 보여 왔음
 - 청와대 중심의 정치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보좌진을 중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이 약함
 - 청와대 보좌진과 행정부의 주무부서 및 여당 사이에는 대등한 의견교류보다는 청와대 보좌진의 지시를 주무장관과 여당지도부가 수용해야 하는 일종의 주종관계가 형성됨 -> 장관의 재량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청와대 중심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또한 한국 대통령제의 부정적 측면은 정당 및 이념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의 비리와 부정적 행각의 폭로에 주력함
 - 대통령에 대한 팬덤(fandom) 정치의 심화로 여야 갈등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대화 불가능한 상대로 치부하는 지경까지 치닫게 됨
 - 그 결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여야갈등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정치권의 국정현안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함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이어서 '5년 단임'의 한국 대통령제는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가 신속하게 입법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함
 - 대통령은 5년 임기 안에 정책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집권 초반부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함
 -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정(司正)기관을 동원하여 이전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공개적으로 수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여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려 함 -> 축적하기보다는 단절의 정치, 소거(消去)의 정치라는 악순환이 반복됨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5년 단임의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조속한 입법화에 치우쳐 의회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여야 간 대결과 대치와 대결의 정치로 바뀌는 데에도 기여함
 - 대통령은 많은 경우 공존과 협력의 정치를 포기하고 여당 지도부와 여당 내 친위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국정 어젠다 입법화를 압박함
 - 단점정부의 경우 국회 내 소수당의 입지는 매우 위축되고, 분점정부의 경우 여야 간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은 장기적 교착국면으로 변화됨



Ⅱ-1.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 마지막으로 5년 임기의 한국 대통령제는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과 선거주기가 달라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만들어 여야 교착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인위적인 3당합당, DJP 연합에 의한 의원 빌주기 등 부작용이 나타남
 - 협치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는 만성적인 교착상태를 만들어 냄





Ⅱ.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2. 정치개혁의 과제

- 청와대 중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주무장관과 논의를 통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국무회의 중심의 대통령제로 변화되어야 함
 -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참석하는 정부 최고의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로 옮겨오고 청와대 보좌진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능에 그쳐야 함



Ⅱ-2. 정치개혁의 과제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장관추천권을 보장되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실현 가능함
 - 우리 헌법 제86조 ②항에서 ‘국무총리는...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제87조 ①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하며, ③항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 장관제청권, 장관해임건의권 등이 활성화되면 헌법의 변화 없이도 상당 부분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고 분산될 수 있음



Ⅱ-2. 정치개혁의 과제

- 대통령은 또한 연합정치(정당연합, 정책연합, 정책협력)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지니는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는 방법임
 - 연합정치의 출현에는 헌법개정 없이 현행 헌법 하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됨
 - 실제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DJP 공동정부가 실현된 바도 있음



Ⅱ-2. 정치개혁의 과제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협력하여 공동정부를 출범시켜도 공동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연합정치의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문제 등 가능한 영역에서 정책협력을 시도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이유일 것으로 보임



Ⅱ-2. 정치개혁의 과제

- 한편 대통령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국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합정치나 공동정부 등은 다당제를 구현해 내는 비례성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사실 헌법개정이 없이도 연합형 대통령제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

Ⅱ-2. 정치개혁의 과제

- 마지막으로 여야 협력으로 정치개혁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개헌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음
 -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처하기 위한 개헌안 등은 이미 국회 주도로 여러 차례 만들어진 바도 있음(4년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
 -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정치학회 전용조사: 이하 전용조사)에서도 한국 대통령제가 지니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줄이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보다는 정당간 연합정치를 유도하며 당선된 대통령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54.3%)이 반대한다는 비율(33.0%)보다 대체로 10% 정도 높고 나타나고 있음
 -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는 응답(공통조사)은 거의 70%에 육박하여 (69.9%)(매우 중요 23.9%, 중요 25.8%, 대체로 중요 20.2%) 현행 대통령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임

Ⅲ

국회 내 정당 대결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Ⅲ. 국회 내 정당 대결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1. 국회의 정당 양극화와 고질적 대결 정치의 문제점

- 민주화 이후 '여의도 정치'로 통칭되는 한국의 의회정치는 '동물국회' 혹은 '식물국회'의 국면을 반복하면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됨

- 이러한 부정적 국회인식은 국회의원 정수조정이나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부정적 반응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됨
-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전용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28.7%에 불과하고, 현재 정수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2.7%, 그리고 현재 인원(3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8.7%를 차지하고 있음
-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82.6%(매우 찬성 49.3%, 대체로 찬성 33.3%)로 나타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인 10.7%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 형편임(전용조사)

Ⅲ-1. 국회의 정당 양극화와 고질적 대결정치의 문제점

-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와 누적된 정당 대결의 후유증이 심화되면서 국회는 민주화 이후 이룩한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변적 의회'(marginal legislature)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현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공통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국회개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6.9%(매우 중요 42.4%, 중요 27.1%, 대체로 중요 17.4%)에 이르러 국회 내의 이러한 극단적 대치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매우 시급한 형편임

Ⅲ-1. 국회의 정당 양극화와 고질적 대결정치의 문제점

- 이러한 정당 대결의 문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소위 '386세대'가 다수 국회로 입성하면서 여야 간 이념대결이 더욱 강화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이후 제20대 국회 말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 통과과정에서 거대 양당 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음
- 문제는 여야 정당 간의 극단적 대치의 후유증이 누적되는 상황은 국회가 적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임

Ⅲ-1. 국회의 정당 양극화와 고질적 대결정치의 문제점

- 또한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정치가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제안은 모두 정파적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그리고 여야 간의 극단적 대립은 결국 여야 개별 정당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 역시 매우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게 유도함
 - 대결정치의 의회정치에서 여야 정당 내부의 온건성향 의원들의 목소리 보다는 강경성향 의원들의 목소리가 압도함 -> 당내 민주주의의 퇴조
 - 강경파 의원들이 장악한 의원총회 내에서 여당 지도부의 자율적 입지가 위축되면서 야당 지도부와 적절히 타협을 통한 의사일정의 원만한 진행도 매우 어렵게 됨

Ⅲ. 국회 내 정당 대결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

2. 정치개혁의 과제

-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지니고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에 전념하고자 한다’ 혹은 ‘일하는 정부가 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통해 국회와 거리를 둠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을 총괄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일과 함께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국정 어젠다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 지도부의 협력을 구해야 함
 - 대통령은 권력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의회를 ‘권력을 공유한 별개의 기관’(separate institutions sharing power)임
 -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상의 명문화된 권력보다는 정책결정의 핵심적 행위자들에 대한 ‘설득의 능력’(persuading power)에서 나온다고 말한 뉴스탯(Richard Neustadt)의 경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정기적으로 혹은 사안마다 총리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혹은 여야정협 의회를 개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정치문화와 여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집무실에 초치하여 국정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국정 어젠다의 입법화에 대한 협조를 직접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재량권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의 논리가 행정의 편의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의원 자율성의 제고를 위해 공천제도 역시 tap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민주화될 필요가 있음**
 - 3김 퇴진 이후 정당 외부의 인사를 포함한 정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정당 공천과정에는 여당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의 의중이 깊이 반영되어 왔음
 - 이러한 tap다운 방식의 공천제도는 의원의 줄서기를 유도하여 결국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기율정당을 만들고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해쳐 정당 간 유연한 의사운영과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함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전용조사)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의 공천방식으로 당원 및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결합하는 일종의 개방형 경선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46.3%), 당원 대의원 투표에 의한 경선(일종의 폐쇄형 경선)과 당원 대의원 투표와 정당 지도부의 공천을 결합하는 방식(폐쇄형 경선과 지도부 공천의 혼합방식)은 각각 22.3%와 23.7%,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한 공천은 2% 정도의 지지율을 보임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정당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회 내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양대 후보는 모두 ‘국민통합정부’를 외친 바 있음
 -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공통조사)의 결과에 여야간 타협과 대화의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38.3%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여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9.6%에 이르고 있음
 - 사회적 소수세력의 국회 진출을 촉진하여 다원주의와 공존의 정치를 구현해야 함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거대 양당제도가 유도하는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완화하는 연합정치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보다 대표선발의 비례성이 상당히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따라서 국회 내에 여야 간 선거제도의 개혁을 논의하여 다당제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Ⅲ-2. 정치개혁의 과제

- 4대학회 전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비율(공통조사)이 81.0% 정도이고,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 역시 3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같은 조사에서 비례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35.3%,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으나 연동의석 상한선을 설정하고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23.3%, 그리고 현재와 같은 병립형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의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22.7%로 나타나, 모두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 18.7%에 모두 앞서고 있음(전용조사)

IV

나가면서

IV. 나가면서

-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조금씩 증대하고 다원주의와 포용성의 확대를 향해 달려왔음
- 그러나 여전히 거대 양당 중심의 진영논리가 한국정치를 지배하면서 선거모드의 정치와 정당간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확증편향, 반향실 효과 등 SNS 매체의 부정적 효과와 결합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할 발전을 위해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극단적 정당대결의 여의도 정치를 일신하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적 태도가 사라져야 함

IV. 나가면서

- 선거전략상의 이유였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양대 후보는 국민통합정치를 외치면서 공동정부와 협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정치개혁은 대통령과 여야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적 행위자의 태도 변화, 선거법 등 각종 법제도의 변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헌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법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항부터 실천하면서 여야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을 통해 필요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 도출과정은 권력구조와 각 제도와의 정합성, 제도변화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함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도 아울러 고려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함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재정정책

박기백(서울시립대)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예산을 보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2022년 예산기준으로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94.1조원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 대책, 병사 급여 인상 등 새로 들어설 정부가 공약한 항목들을 다 실천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부동산 세금 완화 등의 공약은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일시적인 지출이며, 시급한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기보다는 초과세입이나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조세 부담을, 특히 투기 성격이 없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증세를 통하여 공약의 재원을 조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중부담-중복지 형태로 나아간다는 전제하에서 자본이득(주식,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에 해당 재원을 복지(병사 급여 포함)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 수의 감소를 감안하면 교육교부금도 사용처를 아동수당이나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될 국민연금도 점진적으로 수지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정안정과 제도 개혁을 위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거나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다만 실효성이 낮은 준칙이 되거나 우리나라 체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조세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주로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위원회는 의결기구보다는 재정적자, 부채 규모, 증세 건의, 세수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자문 역할로 시작하고, 여야에 중립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2022. 3.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 목차

I. 재정현황과 여건 진단

1. 재정현황
2. 재정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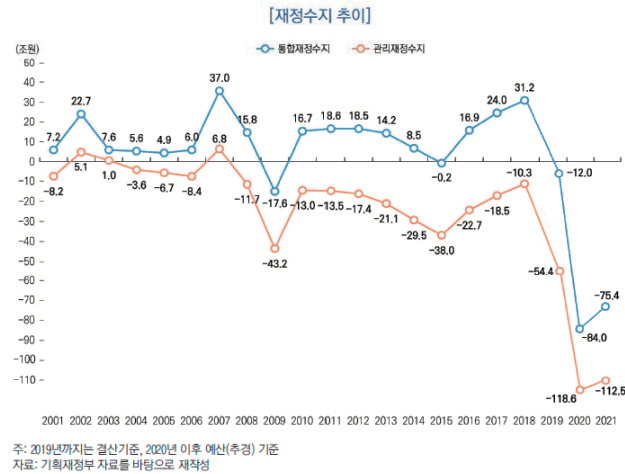
II. 단기적 재정 이슈 및 대책

1. 기본방향
2. 코로나 지원 및 재원
3. 부동산 등 자산과세

III. 중기적 재정과제

1. 중부담 - 중복지
2. 연금재정
3. 교부금 조정
4. 재정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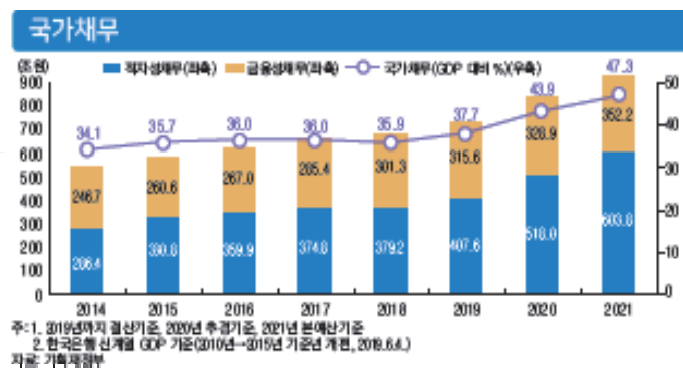
● 재정 현황_재정수지



- 2022년 예산: 재정적자 94.1조원
- 2021년도 세수 증가로 실제 재정적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 재정 현황_국가부채



-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최근 급증
- 주로 적자성 채무가 증가
- 2022년도 예산: 국가채무 1.064조원 (GDP 대비 50.0%)

3

● 재정 현황_재정 악화 원인

코로나 지원

- 재난지원금, 방역비용, 실업예방 등
- 다른 나라도 코로나 재정 지원으로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

확장적 재정기조

- 코로나 이전에도 지출 증가율 > 세입 증가율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 추이
(IMF 2020 Fiscal Monitor)

- '20. 4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8조 달러 재정**이 투입될 것 집계
- 5월 기준: 9조 달러 재정 투입 집계, 한달 새 1조 달러 증가
- 6월 기준: 약 11조 달러 (\$5.4조: 직접지원, \$5.4조: 간접지원)
- **9월 기준: 약 11.7조 달러**, 세계 GDP의 11.9%
\$5.8조: 직접(재정)지원 지출증대, 감세
\$5.9조: 간접(금융)지원 대출, 보증 등

4

● 재정 여건_재정 전망

2021-2025년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2차추경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 대비, %)	-3.7	-4.4	-2.6	-2.9	-3.0	-3.0
○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7	-111.0	-108.4	-109.2
(GDP 대비, %)	-5.6	-6.2	-4.4	-4.7	-4.7	-4.6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 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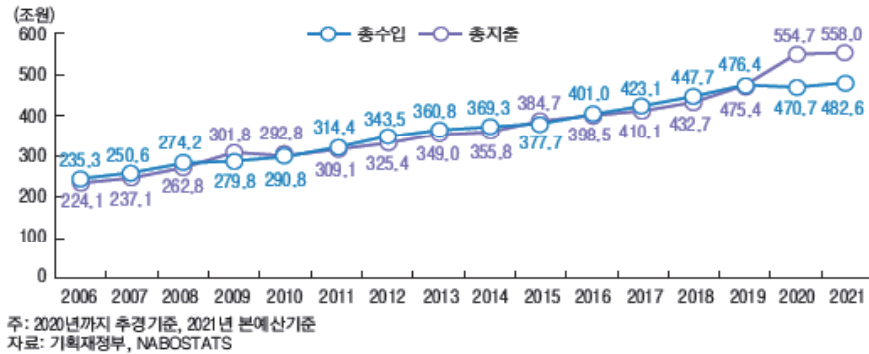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지난해 예상했던 수준보다 모두 감소

- (관리재정수지) '21년 **6.2% 적자** → '22~'25년 4%대로 적자폭 축소
- (국가채무) 지속 증가하여 '21년 47.3% → '**25년 58.8%** 전망

5

● 재정여건_총수입과 총지출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 주로 2020년부터 발생

- 지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 코로나 시대 이후에 수입 증가율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
- 반면 지출은 증가율을 약간 통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 재정여건_경제 환경

낮은 수준의 이자율

- 최근 물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이자율: 2022년 2월 기준: 국고채(3년) 금리 2.285%

경상수지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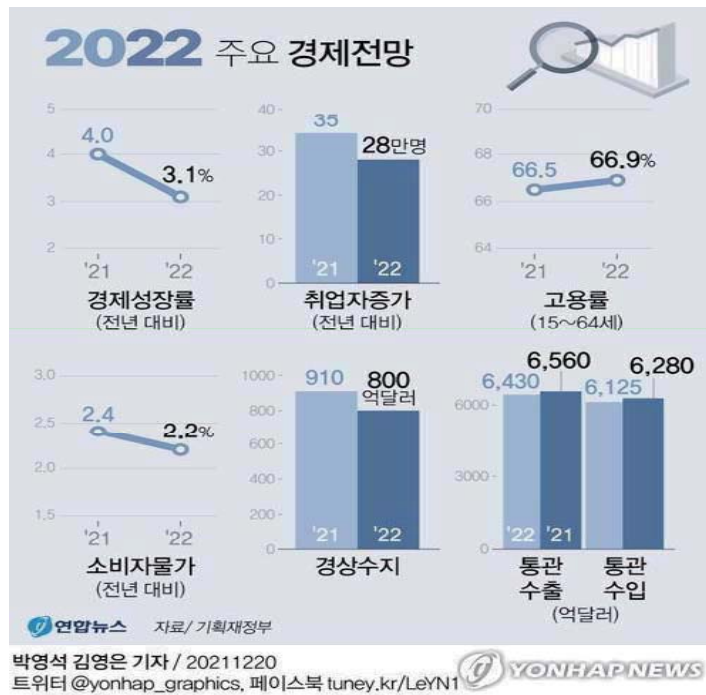
- 최근 석유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흑자 가능성이 높음

안정적 경제성장

- GDP 성장률 전망 : 3.1% (2022 경제정책방향)
-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험 요인 상존

7

● 재정여건_경제전망



8

● 재정여건_불평등

분배지표	소득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니계수 ¹⁾	시장소득	0.396	0.402	0.406	0.402	0.404
	처분가능소득	0.352	0.355	0.354	0.345	0.339

시장소득 기준 분배는 등락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는 개선

- 2020년 지니계수: 0.405 (가계금융복지조사)
- 코로나로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소득보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변화가 심각하게 발생
 - 이러한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
 -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임

9

● 단기 과제_재정 운영 기본방향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자에 증세는 부적절

- 경기 불황에 따른 일시적 지출 급증 및 세입 감소에는 재정적자로 대응(조세평준화)하는 것이 불황시의 당연한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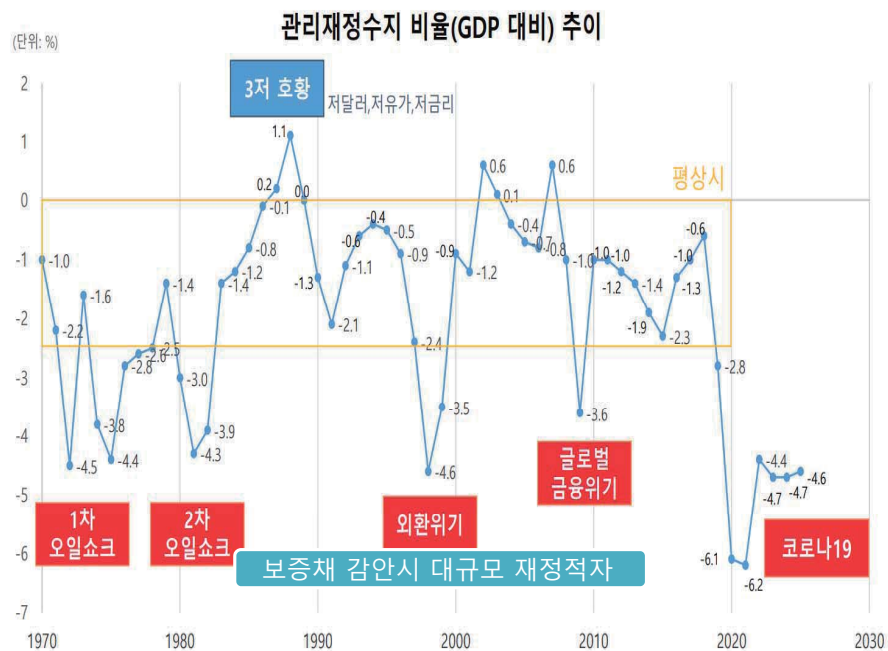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이 취약
- 외환, 원자재시장의 커다란 변동성
- 평시에는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

재정규율이 악화되어 재정적자의 감축이 늦어지면 향후 세율인상으로 인한 왜곡이 커지게 됨

10

● 단기 과제_재정 운영 기본방향_재정수지



11

● 단기 과제_Blanchard(2019)

성장률과 이자율의 문제

- Debt Dynamics : $\Delta b = d + (r - g)b$
- Δ :증가분, b:부채, d: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지출 - 수입 - 이자지출), r:이자율, g:성장률 (모두 GDP 대비 비율)

소규모 적자 및 (성장률>이자율) 조건 필요

-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경우라면 재정적자로 과다한 자본 축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대규모 재정적자를 찬성하기 보다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특수 상황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

기축통화 논의와는 무관

- 부채비율 추이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

12

● 단기 과제_코로나 대응 및 재원

팬데믹 전후 일반정부 국가채무(D2) 변화(2019-2020)

채무증가	한국	선진경제국	독일	신흥경제국	세계 평균
변화폭(%p)	6.2	17.9	10.4	9.0	14.1
변화율(%)	14.8	17.1	17.5	16.6	16.9
변화율 배율 (한국 대비)	-	1.15	1.18	1.12	1.14

주: Fiscal Monitor(2021.1)

- 윤석열 당선인은 50조원(GDP 대비 2.5%) 규모의 코로나 지원을 약속
- 외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고, 일시적 지출이므로 부채로 대응이 적절
- 단기간에 실질적인 지출조정이 어려움
- 전년도 및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초과세수도 일부 사용

13

● 단기 과제_부동산 과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 문제

- 재산세는 지방세 vs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 세수 조정 및 누진구조 결정 등 복잡성 보유

기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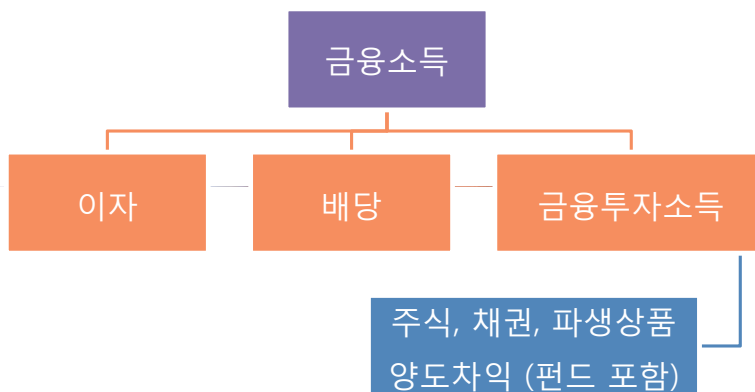
- 재산세는 지방정부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운영 자원
-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억제 및 자산과세 성격

종합부동산세를 투기 억제 목적으로만 사용

- 투기 성격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을 대폭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합리적 조정

14

● 단기 과제_주식 양도차익 과세



-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폐지를 약속
- 현실적으로는 2023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별도의 양도차익 과세가 적절

15

● 중기 과제_소규모 증세

<그림>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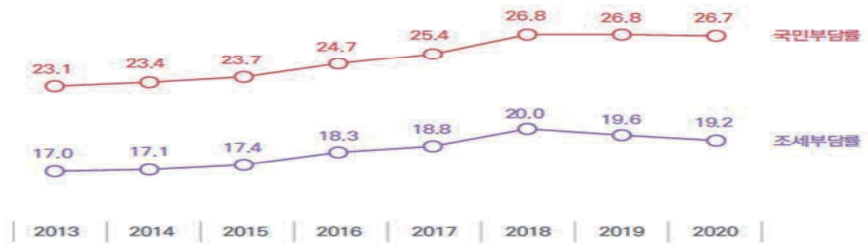


주 1. 대부분의 국가들의 데이터가 가용한 시점인 1990년 자료부터 사용
주 2. 호주, 일본은 2017년,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2018년 데이터
주 3.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는 자료 부재로 2009년 대신 각각 2010년과 2011년 데이터 사용
출처: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과 2019년의 데이터는 잠정치임
출처: 이윤경(2021)

-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
-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
 -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일부 증세가 필요

16

● 중기 과제_소규모 증세



- 2019년 2020년 GDP 대비 세수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한 효과로 판단
- 2021년의 국세를 보면 초과세수가 사실상 70조원 수준으로 발생
 - 초과세수 61.4조원, 유류세 인하, 코로나 세정지원 등
- 전반적으로 5년 기준 세수가 GDP 대비 1~2%p 증가하는 경향

17

● 중기과제_증세 대상



소득세, 그 중에서도 양도차익이 핵심적 대상

-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최근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 급등
- 별도의 증세가 필요하지 않고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소득세 감면 축소

-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보유한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등

18

● 중기과제_증세 대상

환경 관련 소비세

- 기후 및 환경 관련 관심도가 증가
 - 탄소국경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
-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편이 불가피
- 전기요금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

법인세 논의?

- 다단계 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감한 문제
- 필요하다면 일부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사실상 2단계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19

● 중기과제_교부금 조정

지방교부세

-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
- 2006년 부동산교부세,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인상

교육교부금

- 2020년에 내국세의 20.79%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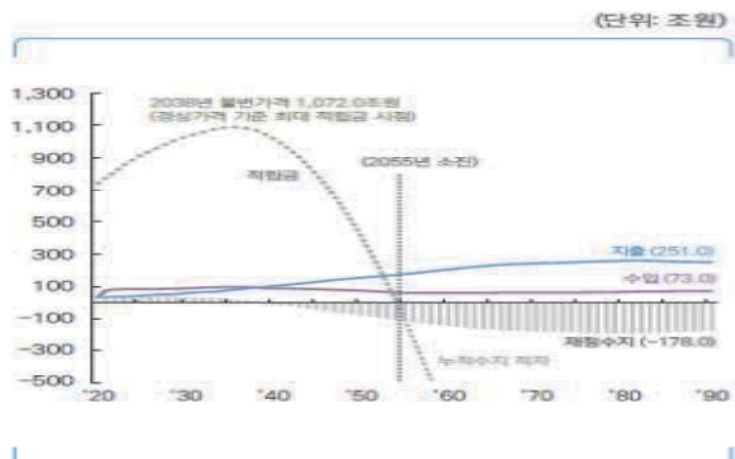
조정 필요성

-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
 - 추가적인 지방세 재원 증가의 당위성 감소
- 학생 수의 감소
 - 초중등 교육 이외에 취학 이전 및 평생 교육 등에 사용할 필요

20

● 중기과제_연금재정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 중기과제_연금재정

예산정책처 재정 전망

-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 국민연금: 2055년 소진
- 사학연금: 2048년 소진

기본 방향 및 문제점

- 수지 균형이 되도록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
- 합의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

현실적인 방안

- 보험료 및 급여에 대한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재계산(5년 기준)에서 나타난 수지 균형 부족분의 일부(예: 50%)를 강제 할당하도록 법률 제정
- 예시: 보험료 인상 및 급여 감축 각각 25%
-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므로 합의가 손쉬울 것임
- 노후 소득 부족의 일부는 기초연금으로 충당

22

● 중기 과제_재정준칙

기재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 '25년 재정준칙 도입: 채무비율 60% + 통합재정수지 3%
- 현재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시행령으로 격상
- 국회 복지지출 법안 발의 시에도 Pay-Go 원칙 적용 희망

찬성 및 강화 논의

- 재정준칙에 준헌법적 지위 부여
-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반대 논의

- 코로나와 같은 긴급 상황 대처에 곤란 (국회의 여야 대립)
-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편성권 보유
 - 기재부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
- 국회가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음

23

● 중기 과제_독립적 재정기구

역할

- 국회의 재정협의회사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구
 - -미국 CBO, 네덜란드 CPB, 영국 OBR 등
- 정부 및 국회에 자문 역할

담당 분야

- 재정총량: 세출 및 재정수지
- 세수 추계의 적정성 검토
- 증세 건의

효과

- 여야의 정파적 대립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정책분석에 근거하여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고 재정정책을 논의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증세 가능성 제고

24

감사합니다.

25

초광역권 지원협력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1. 연구목적

■ 연구의 질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지원협력의 방안’은 무엇인가?

2. 광역권 협력체제의 현황

■ 부울경 메가시티의 현황

○ 권역별 공간적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협력체의 첫 시도로서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응할 광역경제권 한 지역협력체의 시도

- 산업, 인재, 교육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다극화 체계의 첫시도

- 대구 경북권, 호남권도 광역경제권을 통한 권역별 다극화 추진

■ 초광역협력지원정책에 대한 4대 학회 학자들의 인식도 조사결과

○ 새정부의 정책 중 초광역권 협력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낮고 잘할 것이라는 순위에서도 뒤쳐져 있음

○ 경영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초광역 협력지원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높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 초광역권 지역산업 생태계의 장애요인도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인재유출과 우수인재의 어려움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함

3. 지역산업 생태계의 진단

■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 지역혁신지수(산업연구원,2021): 대전을 제외한 부산 경남 및 대구 경북 등은 혁신성장 취약형으로 분류되고 울산 광주 등은 혁신기반 의존형으로 분류됨 (대전의 경우 혁신성장 선도형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함)

○ 지역별 성장잠재력 지수(KISTEP,2021): 2020년 권역별 잠재력 지수에서도 동남권(부울경)은 광역권에서 전체 6위 대경권은 5위 호남권은 4위로 취약성을 드러냄

4. 지역산업생태계의 발전방안

■ 지역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개척

○ 지역은 고유의 특화산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R&D를 활성화하여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함

○ 지역기업의 자생적인 노력에 중앙정부는 협력과 지원정책을 하고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계획하에 작동되는 시스템 구축이 구축

■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탄력성 전략

○ 지역의 산업이 선순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자본, 기술, 인력 및 교육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가능한데, 현재의 지역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함

○ 한국경영학회가 추구하는 K-기업가 센터(진주)를 전 광역시 중심으로 확대하여 학생인 직장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정부차원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정책

○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 초광역권 공간지정은 주로 특정 공간 내에서 규제의 특례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둠. 최근 부울경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전계획간의 정합성 제고

-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역량강화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생태적 환경을 분석하고 정교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 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전략

○ 지역내 다양한 혁신의 주체를 연결하는 지자체의 융합(예: 지역대학, 대기업, TP, 진흥기관)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지역내 혁신 생태계 및 산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중앙정부의 협력지원 하에서 초광역 특별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통계 기반 및 핵심 산업정보를 구축하여 DB화하는 노력

■ 초광역권내 핵심도시(허브도시)들의 리더십 강화

○ 초광역권내 핵심지자체(예: 부울경의 부산 대경권의 경우 대구, 호남권의 경우 광주) 중심으로 지역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함

한국경영학회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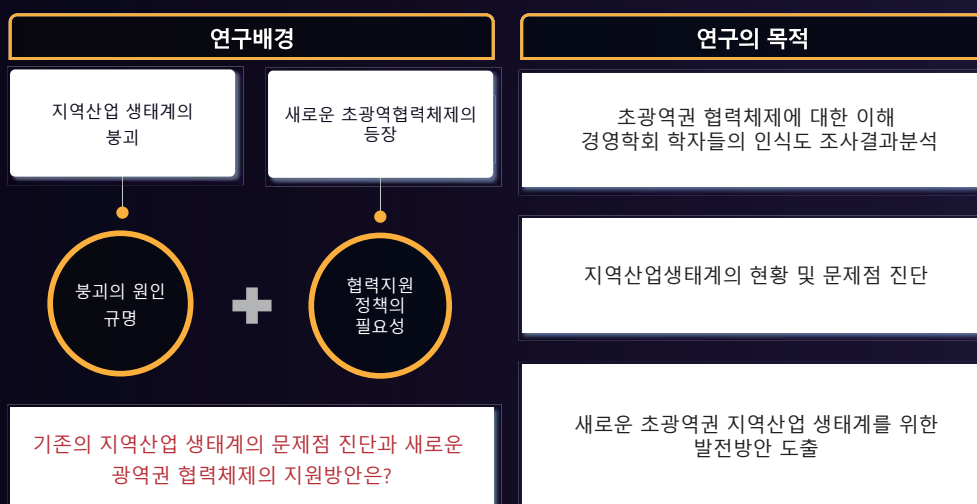
초광역권 지원 협력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연구

발표: 정동섭(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진교(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진철(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1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및 목적



02

초광역협력체제의 현황

2.1 부울경 메가시티

2.2 차기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부·울·경 메가시티란?

- ✓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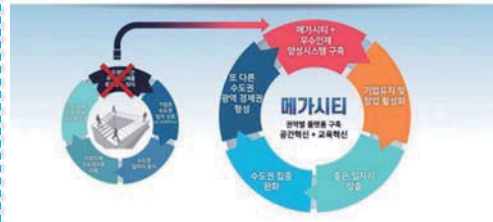
-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 해결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전략



역할 및 기능

-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힘의 역전



3

02

초광역협력체제의 현황

2.1 부울경 메가시티

2.2 차기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부·울·경 메가시티란?

평가

-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모니터그룹의 세계 20대 메가시티리전(MCR·광역경제권) 평가: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의 거버넌스(지역 간 의사결정체제)는 중위권 그룹(7.0 만점에 4.0점),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하위권 그룹(3.0점)으로 분류



- ✓ 특히 부울경권은 권역내 거점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취약함
- ✓ 부울경의 연계성 종합력은 16위
- ✓ 광연교통인프라 19위
- ✓ 산업클러스터 연계성 10위

4

02

초광역협력체제의 현황

2.1 부울경 메가시티

2.2 차기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부·울·경 메가시티란?

- ✓ 전세계 20대 메가시티에 포함될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 높음

전세계 메가시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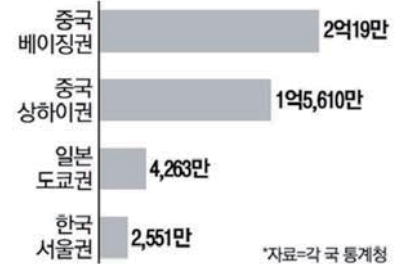
- ✓ 선진국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 전환을 위하여 메가시티의 육성 및 발전
(예: 세계 20대 메가시티 육성)



아시아권 메가시티 현황

- ✓ 중국은 베이징권과 상하이권의 메가시티를 일본은 도쿄권의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도 2500만의 메가시티를 충족함
- ✓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850만의 인구를 통해 새로운 메가시티의 발족 및 육성을 하고자 함

동북아 메가시티 인구(단위=명)



5

02

초광역협력체제의 현황

2.1 부울경 메가시티

2.2 차기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의 활동 장애요인

- ✓ 장애요인의 5가지 문항 중 전체적으로 경영학자들은 초광역 협력 산업정책의 활동장애요인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영학자들이 장애요인의 심각성의 정도가 높음
- ✓ 항목 지역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경상권과 전라권의 심각성이 뚜렷하며, 관련기업 연구소의 폐쇄성과 인식부족은 전라권의 심각성이 높음

역량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지원기관 부족 (D1-2-1)

- ✓ 경영학회 회원(308명): 68.2% 심각하다고 인식
- ✓ 수도권: 67.8% 경상권: 68.3% 전라권: 81.8%

충청권: 63.6%로 수도권에 비해 특히 전라권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함

중개기관 부족 및 역량미흡 (D1-2-2)

- ✓ 경영학회 회원(308명): 69.2% 심각하다고 인식
- ✓ 수도권: 67.3% 경상권: 73.3% 전라권: 72.7%

충청권: 69.1%로 수도권에 비해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

지역내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 우려 (D1-2-3)

- ✓ 경영학회 회원(308명): 68.8% 심각하다고 인식
- ✓ 수도권: 63.2% 경상권: 83.3% 전라권: 81.8% 충청권: 65.5%로 수도권에 비해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

부품소재 공급업체나 수요기업의 부족 (D1-2-4)

- ✓ 경영학회 회원(308명): 72.4% 심각하다고 인식

- ✓ 수도권: 69% 경상권: 78.3% 전라권: 81.8%

충청권: 72.7%로 수도권에 비해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더 심각하다고 인식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의 폐쇄성과 협력인식부족 (D1-2-5)

- ✓ 경영학회 회원(308명): 71.8% 중요하다고 인식

- ✓ 수도권: 69.3% 경상권: 70% 전라권: 86.4%

충청권: 74.5%로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 특히 전라권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함

6

02

초광역협력체제의 현황

2.1 부울경 매가시티

2.2 차기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초광역협력지원 산업정책: 공공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

- ✓ 공공부분의 우선정책과제에서 초광역권 연구개발 기능의 클러스터화 및 대기업의 지역이전과 플랫폼 기능 강화에 우선추진과제로 인식함
- ✓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영학자들은 연구개발 기능의 클러스터화보다는 대기업의 지역이전 및 플랫폼 기능제공에 우선과제로 선택함



공공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1순위 (D1-3-1)

전체순위

- ✓ 1위: 초광역권 연구개발의 기능의 클러스터화(28.9%)
- ✓ 2위: 초광역권 핵심산업의 대기업 지역이전 및 대기업의 플랫폼 기능제공(24.4%)
- ✓ 3위: 초광역권내 저렴한 주거환경 우수한 교육여건, 문화기능 강화등 정주환경조성(20.1%)

수도권과 지역의 비교

- ✓ 수도권은 전체 순위에 변동이 없으나 지역의 학자들은 1순위를 초광역권 핵심산업의 대기업 지역이전 및 대기업의 플랫폼 기능제공으로 응답
- ✓ 정주환경의 조성도 우선과제로 많이 선택함



공공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1+2 순위 (D1-3-2)

전체순위

- ✓ 1위: 초광역권 연구개발의 기능의 클러스터화(45.8%)
- ✓ 2위: 초광역권내 저렴한 주거환경 우수한 교육여건, 문화기능 강화등 정주환경조성 (39.0%)
- ✓ 3위: 초광역권 핵심산업의 대기업 지역이전 및 대기업의 플랫폼 기능제공 (34.4%)

수도권과 지역의 비교: 수도권과 유사하나 대기업 지역 이전에 대한 과제에 대해 필요한 우선과제 인식

7

03

지역산업생태계의 진단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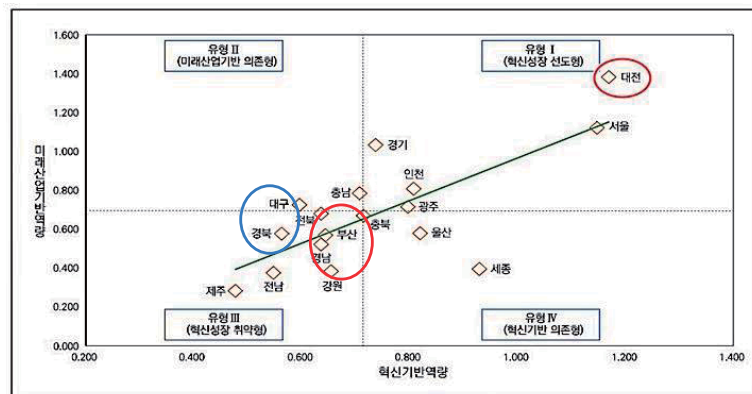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산업연구원(2021)의 지역혁신지수에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은 혁신성장 취약형



지역혁신지수 산출(산업연구원 2021)



남부 경제권(부울경 및 대구 경북, 전남 전북)의 지역 혁신지수가 매우 취약

8

03

지역산업생태계의 진단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현황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1)결과에서도 동남권은 전체 6위, 대경권, 5위 호남권 4위 기록

지역별 성장 잠재력 지수(KISTEP, 2021)

<표1> 권역별 성장잠재력지수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수도권	1.062	2	1.073	2	1.199	1
충청권	1.080	1	1.092	1	1.177	2
호남권	0.891	5	0.863	6	0.951	4
대경권	0.921	3	0.908	4	0.871	5
동남권	0.916	4	0.887	5	0.867	6
강원제주권	0.854	6	0.923	3	0.991	3

권역별 성장 잠재력이 남부 경제권(부울경, 대경권, 호남권)이 쇠퇴하고 있음

9

03

지역산업생태계의 진단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현황 지역인재들이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사유가 우 상향하고 있음

통계청 2019년 인구이동 통계자료(통계청, 2019)

청년인구의 연령별 수도권 유입 규모와 전입 사유



지역의 인재들이 비전을 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지역 정주환경 여건의 붕괴

10

03

지역산업생태계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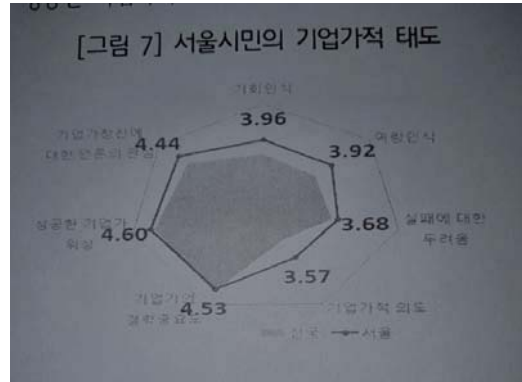
3.1 지역산업 생태계의 현황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3.2. 지역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현황 서울은 대부분 측정항목에서 우수하여 잘 구축된 창업과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지역별 기업가적 태도조사(KISTEP, 2019)



- 1.영남권은 기업가적 활동과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회 인식과 역량인식수준이 낮음
2. 지역의 창업과 혁신생태계의 문제점 (태도 인식)

11

04

지역산업생태계 발전방안

4.1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 산업의 개척

4.2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탄력성

4.3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4.4 지역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4.5 초광역권내 핵심도시의 리더십 강화

4.2 지역 성장 잠재력의 회복탄력성

전략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생태계와 지역 생태계가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 지역의 산업이 선순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자본, 기술, 인력 및 교육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가능한데, 현재의 지역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함
- ✓ 한국경영학회가 추구하는 K-기업가 센터(진주)를 전 광역시 중심으로 확대하여 학생인 직장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K-기업가 센터를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직장인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학습해야 함

12

04

지역산업생태계 발전방안

- 4.1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 산업의 개척
- 4.2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탄력성
- 4.3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4.4 지역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 4.5 초광역권내 핵심도시의 리더십 강화

4.3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정책

전략

정부의 법적 행정적 지원과 지자체와의 정합성 확보



- ✓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 초광역권 공간지정은 주로 특정 공간 내에서 규제의 특례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 최근 부울경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전계획간의 정합성 제고
 -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 산업의 생태적 환경을 분석하고 정교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합성을 통해 초광역권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마중물 전략이 필요함

13

04

지역산업생태계 발전방안

- 4.1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 산업의 개척
- 4.2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탄력성
- 4.3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4.4 지역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 4.5 초광역권내 핵심도시의 리더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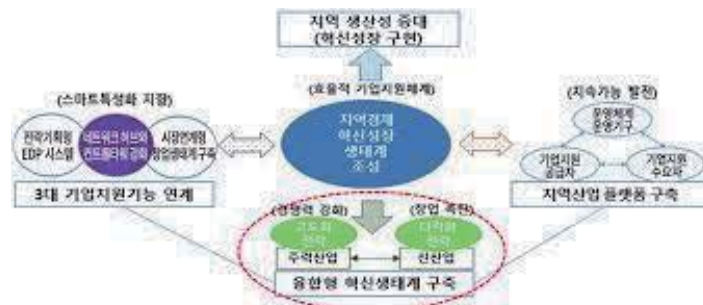
4.4 지역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전략

지역혁신 성장과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협업 구축



- ✓ 지역내 다양한 혁신의 주체를 연결하는 지자체의 융합(예: 지역대학, 대기업, TP, 진흥기관)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지역내 혁신 생태계 및 산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중앙정부의 협력지원 하에서 초광역 특별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통계 기반 및 핵심 산업정보를 구축하여 DB화하는 노력



연구 클러스터와 융합을 통해 산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전략이 필요함

14

05

지역산업생태계 발전방안

- 4.1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 산업의 개척
- 4.2 지역 성장잠재력의 회복탄력성
- 4.3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4.4 지역주도의 연계 및 융합 활성화
- 4.5 초광역권내 핵심도시의 리더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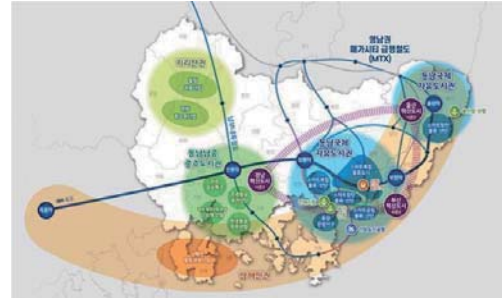
4.5 초광역권내 핵심 도시의 리더십 강화

전략

광역권내 허브도시의 선도적인 원심력 기능(탐험)과 주변 지역도시의 구심력 기능(활용)의 기능이 요구됨



- ✓ 초광역권내 핵심지자체(예: 부울경의 부산 대경권의 경우 대구, 호남권의 경우 광주) 중심으로 지역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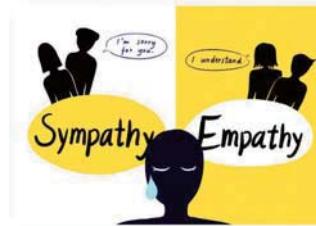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핵심적인 허브 도시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됨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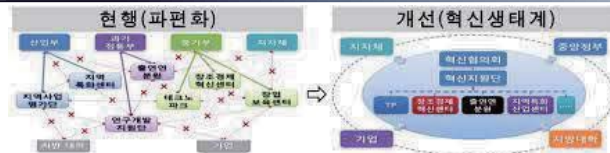
05

결론

1. 연민에서 공감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



2. 지역산업의 생태계의 주체인 기업들이 내생적 성장이 가능한 역량 구축



3. 초광역권 경제체제의 첫 시도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자!



16

감사합니다

4대 학회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발표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

이철승, 서강대학교

본 발표는 2010년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고용 증대,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탐구한다. 우리는 세 수준의 구조적 변동 — 첫째, 인구구조의 변동, 둘째 연공제의 구조화, 셋째 세대 네트워크의 강화 — 에 주목한다. 본 발표는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세대 네트워크가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해 2000년대에 연공제의 임금상승률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2010년대 인구구조 상 최대 다수인 베이비 부머(1958-63년생) 혹은 386 코어 세대(1960-64년생)가 연공제 사다리의 최상층에 다다르면서 기업의 비용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50대 고임금 수령 노동자의 과잉으로 더 큰 비용압박을 받는 기업일수록 청년고용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비용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 추정한다. 분석 결과, 50(55)세 이상 고령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공제 임금테이블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 간의 ‘착종’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청년 고용을 줄이고, 외주를 많이 주며,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2010년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은 이러한 기업 수준의 인구학적, 제도적, 조직적 요인들의 맞물림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실증한다.

필자는 또한 이러한 세대-연공-인구의 착종이 청년층 내 좋은 일자리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 동안 증대된 청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경쟁력 상승과 맞물려 청년 층 내 남녀 간 젠더 갈등의 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인구-연공-세대의 착종 현상이 사회적 수준에서 청년 실업과 청년 비정규직 증대를 야기함과 동시에, 청년 층 내 경쟁의 격화와 그로 인한 공정성 논쟁, 젠더 갈등, 능력주의 논쟁을 촉발시키는 근거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세대 불평등과 젠더 갈등 ———

세대-연공-인구 착종에서 세대-젠더 착종으로

이철승
서강대학교

연구질문

오늘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청년 실업 증대, 비정규직 증대, 여성 차별)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대 간 불평등은 계급/계층 불평등을 가린다?

대표적인 세대 간 불평등

- (1) 기후 위기 (not my specialty)
- (2) 복지(연금): e.g. 국민연금 수혜와 부담의 불공정/소진가능성
- (3) 주거: e.g. 청년 주거의 불평등 (no need to discuss further)
- (4) 일자리: e.g. KBS, 현대차(전기차 산업 성장 정체), 대기업 신규 채용 동결 등

세대 개념에 대한 다층적 오해

- 분단 기득권세력 앞잡이론(H신문)과
- 자본의 이데올로그론(M노동조합)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입장
- 계급, 위계와 함께 사고해야 (기존 세대론의 한계)
- 세대와 세대 엘리트 구분해야
- 세대의 기회와 세대 네트워크 구분해야
- 필자의 세대론은 특정 세대의 노동시장 상층 과잉, 장기 점유론
-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청년 실업 문제
- 자본 대 노동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 메시지: “좀 나누자”: 세대-계급-위계론은 동아시아적 사민주의론 (사회적 자유주의)

● 주장1.

동시대 노동시장 불평등은 연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세대 네트워크와 인구구조가 작용된 결과(쌀, 재난, 국가 5장)

● 주장 2.

386 세대의 지식인 네트워크 및 노동조합의 ‘전투적 조합주의’, ‘한국형 패턴교섭’, 그리고 ‘연공제 고수 전략’이 한국 노동시장의 각종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임.

● 주장 3.

이로 인해 현 중장년층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 세대 간 불평등이 악화되었으며 청년 층 내부의 불평등 또한 증대됨 (불평등의 세대 4, 5장).

●

그림 1. 제도(연공)-주체(세대)-구조(인구)의 작용 메커니즘 (『쌀, 재난, 국가』 2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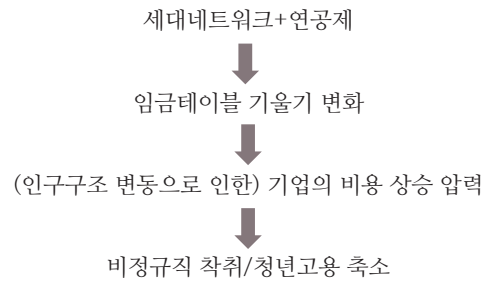
세대 네트워크의 성장: Definitions

- 강한 세대 네트워크: 특정 세대(386 세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및 정당, 시민단체) 내부와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식-비공식적 코호트(cohort) 기반 네트워크의 총체.
- 약한 세대 네트워크: 공식 이익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일상의 동문, 동향, 종교 및 문화 단체의, 동년배 중심의 소규모 네트워크들 (이철승 2019a). Eg. “서오남” 네트워크
- 세대 네트워크는 특정한 자연 혹은 정치-경제적 격변(시기 효과)을 동일 연령대에 함께 겪으며 사회화된 코호트 집단.
- ‘세대의 기회’ 와 ‘인식된 기회(perceived opportunities)’.
- 인식된 객관적 기회를 선취하기 위해 또래 집단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전위집단’ - 세대 네트워크의 중심

세대 네트워크의 성장: 한국형 패턴교섭

- ‘전투적 경제주의’와 ‘(한국형) 경쟁적 패턴교섭’에 기반하여 높은 임금상승률을 지역과 산업을 넘어 확산시킴.
e.g. 울산 태화강 북쪽과 남쪽
- 이로 인해 연공제 하의 임금테이블의 상승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조정
(블루칼라에서 시작 → 공기업, 공무원, 화이트 칼라 전체로 확산/ 단,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Summary: Casual Process



- by-product: 청년층 내부 경쟁과 갈등 증대 (e.g. 젠더 갈등)

Competing Hypothe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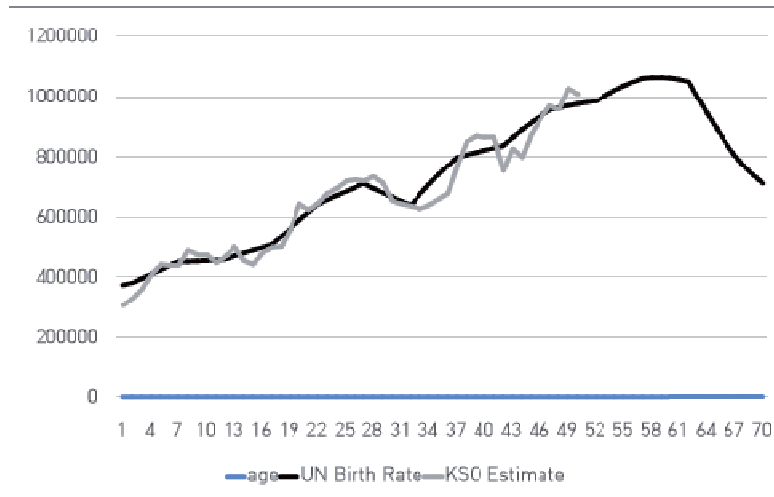
- 비정규직 증가: 자본의 전지구적 재구조화/유연화 전략 (e.g. Fissured Workplaces)

→ 반론: 그렇다면 모든 선진국에서 세대 불평등 문제 불거져야.

- 청년고용 감소: (1) 세계화 및 탈산업화/자동화
(2) 교육 수준 상승 → 유보임금의 상승

→ 반론: 남유럽형 모델(및 한국)에서만 청년실업률 높음.

그림 2. 인구구조의 변동



Y axis unit: Number of person; X axis unit: age

Note: Built based on 「Survey of Population trends」 of Korean Statistical Office (KSO), 1981~2019. United Nations -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50-2020.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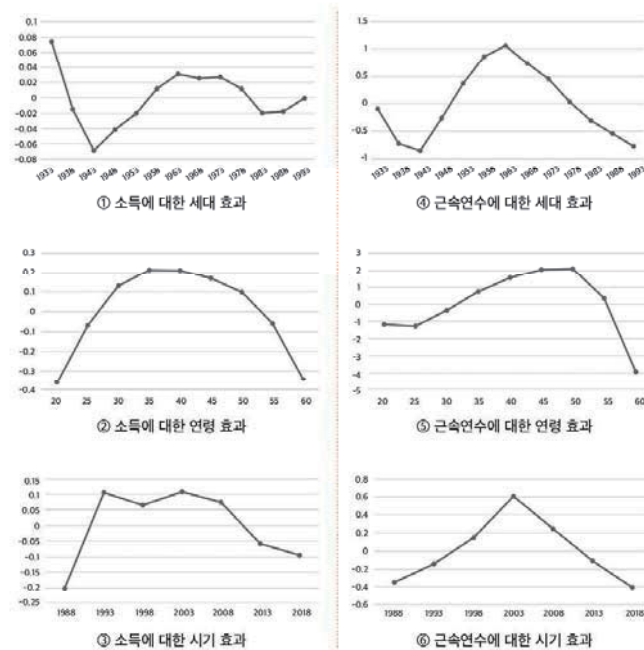


그림 4.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층 연령별 분포(%) (『불평등의 세대』 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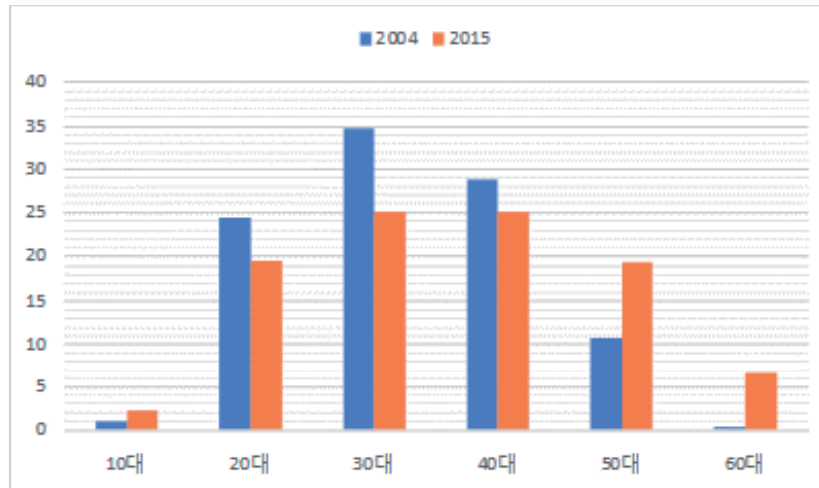


그림 5. Trends of Firm-level Proportions of Workers over 50 and Workers under 30, 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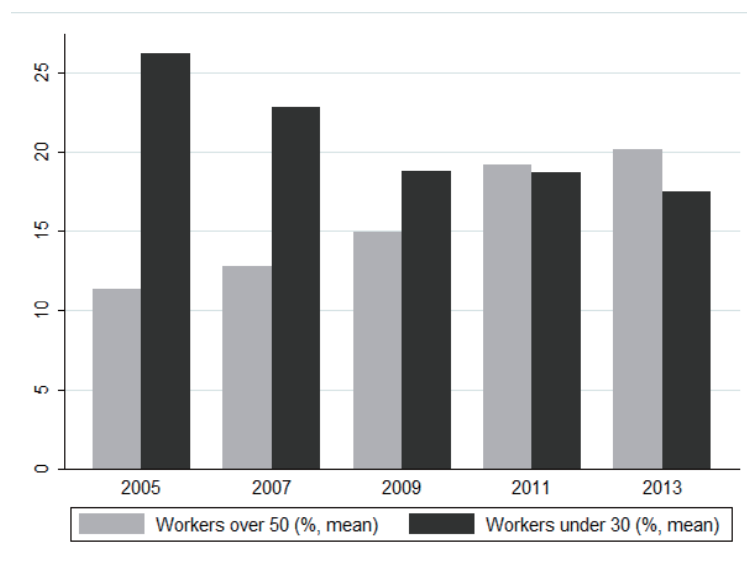


그림 6. Trends in Union Density and Strike Activities (199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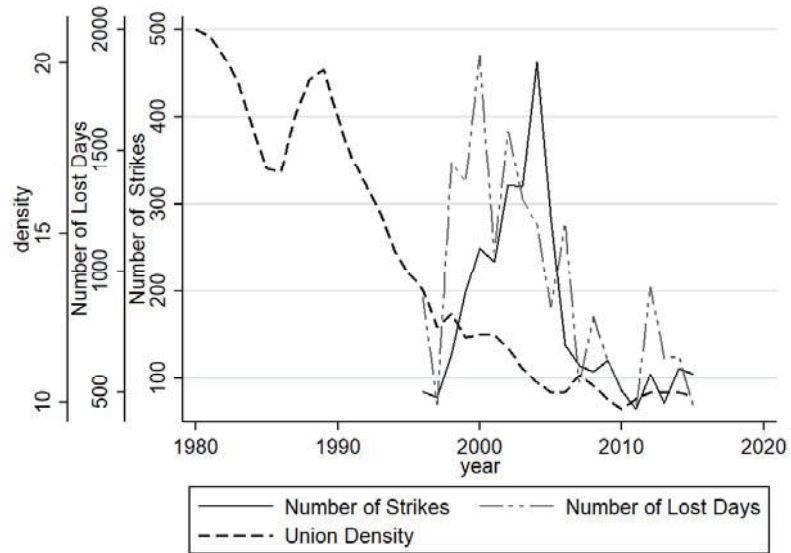


그림 7. Firm-level Wage Cost Trends (over Total Sales) (2005-2017)

7-1. Small to Medium Size Firms (500 Workers↓)

7-2. Large Size Firms (500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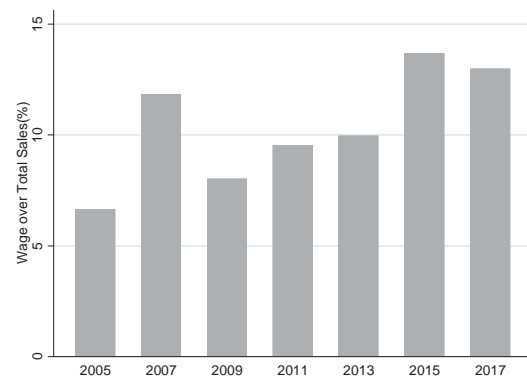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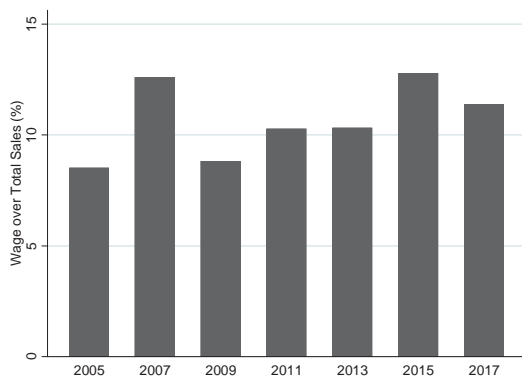


그림 8. Visualization of the Effects of Proportion of Workers over Age 50(55) on Wage Costs (over Sales), Conditioned by Average Wage Level. (Based on Table 3 Fixed Effects Mod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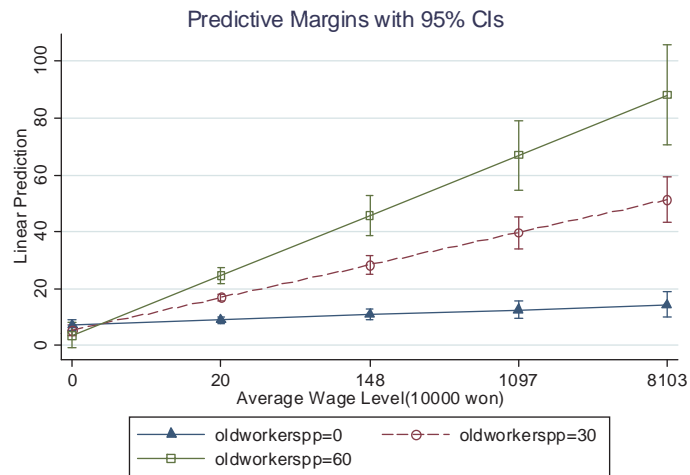


그림 9. Visualization of the Effects of Seniority Wage Table Slope on the Proportion of Young Workers (under 35), Conditioned by the Share of Old Workers (over 55) (Based on Table 6 Mode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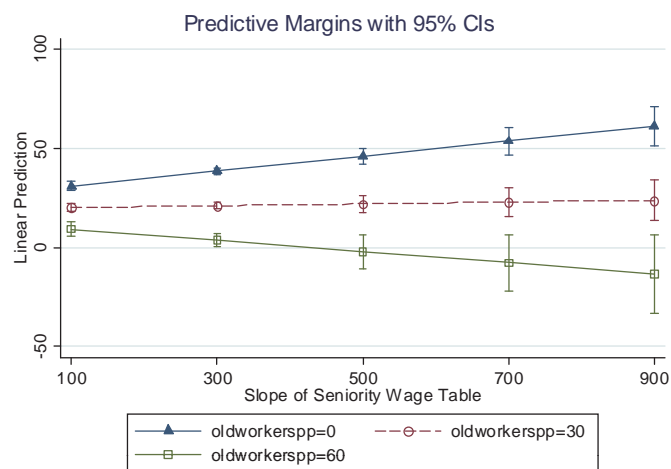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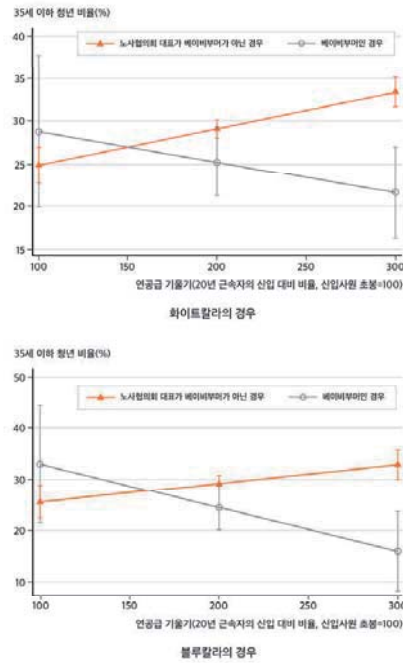


그림 10.



연공제와 젠더 불평등

연공제는 어떻게 여성을 소외시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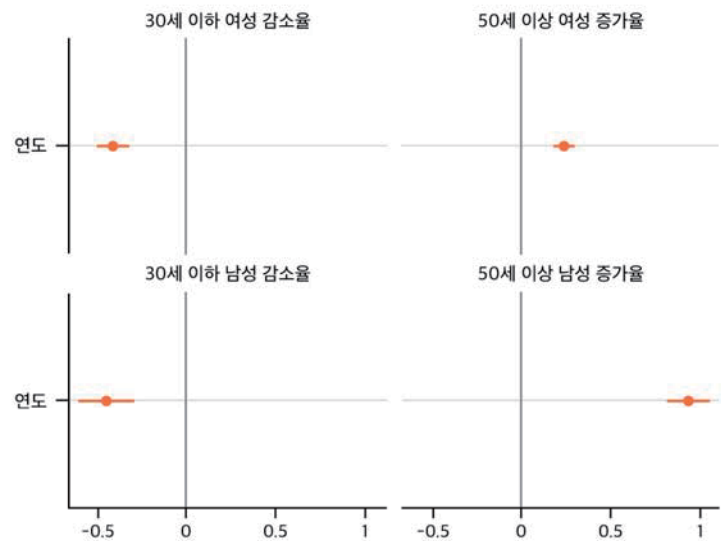


그림 13. 기업내 노동자 비중의
연령별 증감률(회귀계수)의 성별 비교

그림 15. 50대 성별비중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성별증대 규모(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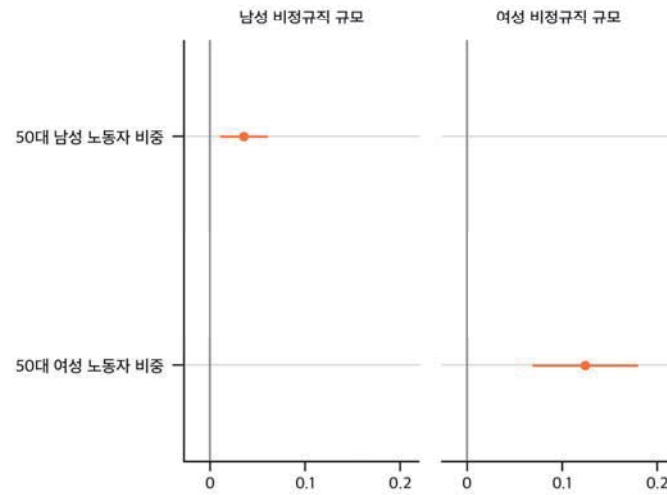


그림 14. 여성 임원 및 간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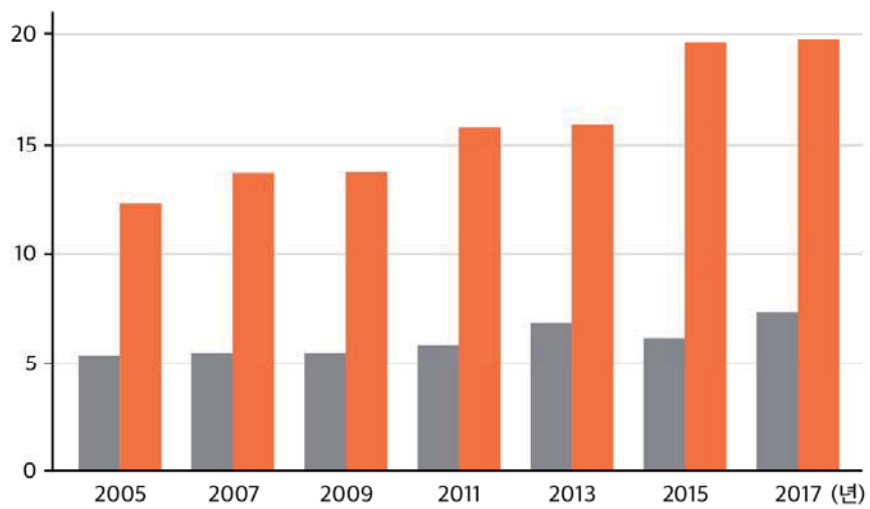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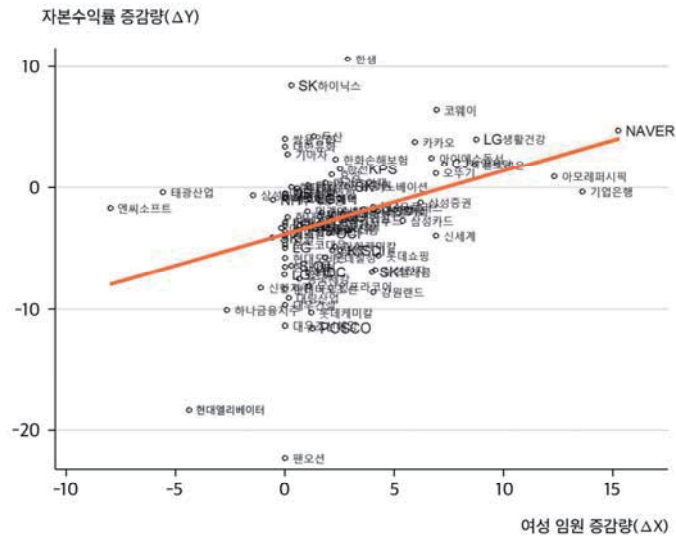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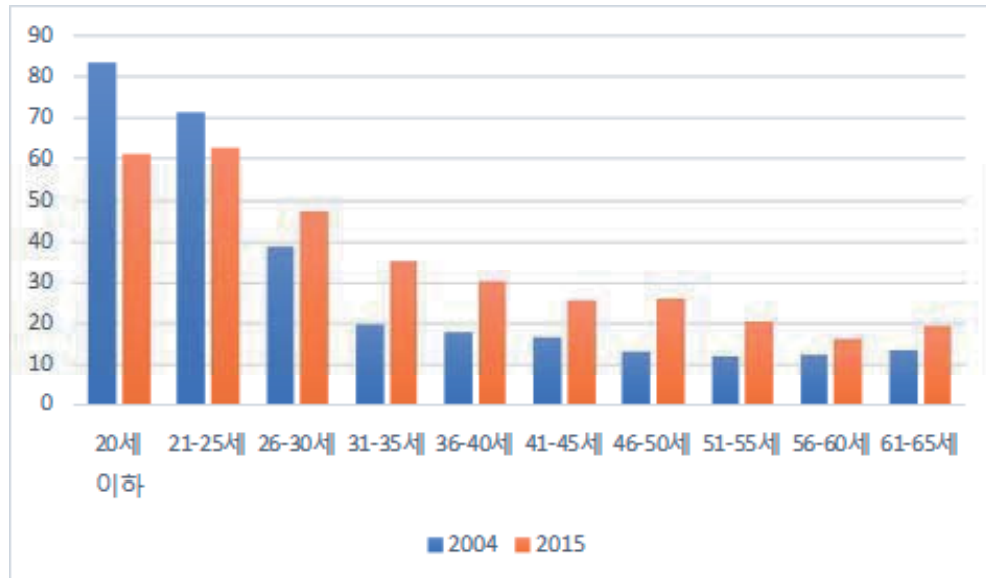
그림 16. 여성 임원 증감량과 자본수익률 증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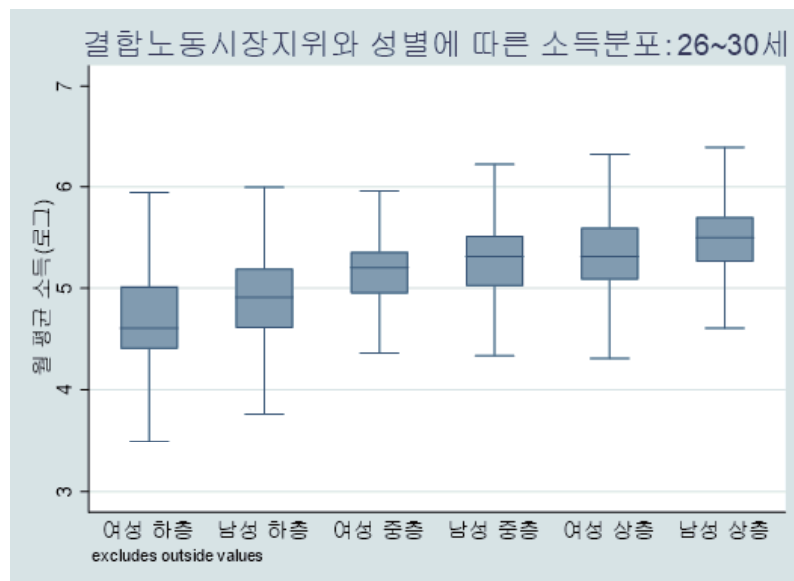
비판들

- 인구-연공-세대의 착종현상으로 인한 청년고용위기와 비정규직의 만연 문제가(일본의 예를 들며) 베이비부머 및 386 세대의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예측
- 반비판: 상층 386 세대(네트워크)가 (200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극도로 가팔라진 연공 임금제의 기울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의 영속화 간과
- 반비판: 이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도, 이들이 구축한 정규직 위주의 연공제 시스템과 이중노동시장은 그대로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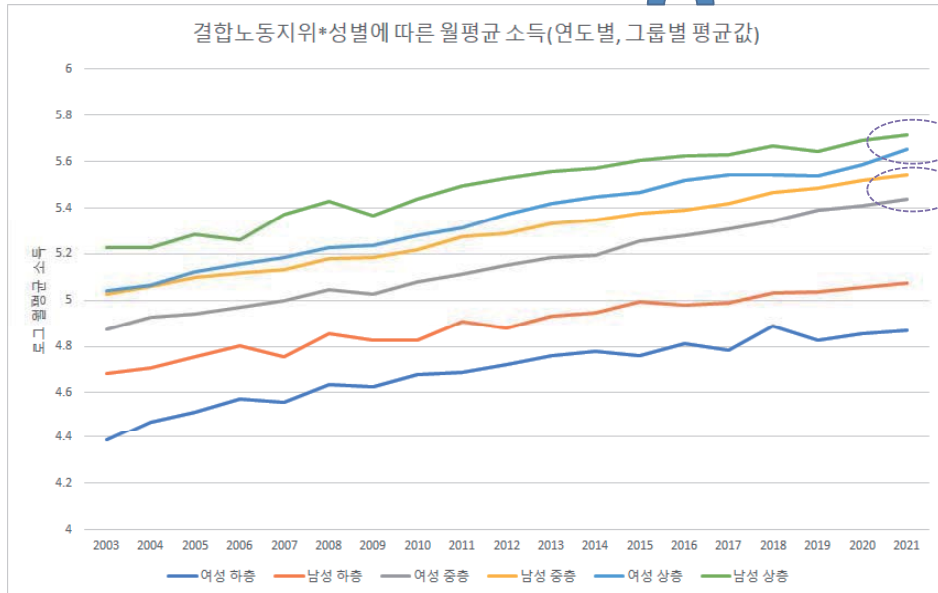
그림 20. 노동시장 지위 상층(20%) 내 연령대 별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 (자료: 경찰부가 2004 & 2015)



3가지 노동시장 지위 (상, 중, 하)*성별에 따른 월임금 비교 (26~30세)
(자료: 경찰부가 2003~2021), Y축은 log(monthly average wage)



3가지 노동시장 지위 (상, 중, 하)*성별에 따른 월임금 시계열 추이 (26~30세)
(자료: 경찰부가 2003~2021), Y축은 $\log(\text{monthly average wage})$



두 개의 균열과 착종/교차성

세대-연공-인구 착종

- 운동: 세대 네트워크
- 제도: 연공급제
- 구조: 인구구조
- 노동시장의 구조로부터 유래하는 균열:
2030 vs. 4050
- 발화점: 2019년 8월 조국사태와 함께 '세대 불평등' 즉 '공정'과 '기회 불평등' '능력주의'의 문제 제기

세대-젠더 교차성

- 젠더 문제의 두 기원: 동아시아 비농사체제에서부터 유래하는 깊은 차별의 구조
(의사결정권에서 여성의 배제) +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구조적 차별)
- 20대 노동시장 진입을 둘러싼 젠더 경쟁과 청년여성들의 경쟁력 상승이 남녀 사이 적대와 갈등으로 변모
- 비경제적 요인: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화한 뉴페미니즘과 청년남성과의 SNS상의 갈등 (←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 vs. overgeneralization)

공정성과 불평등을 보는 5가지 프레임

1. **Setter (Owner) vs. Player** (자본 vs. 노동)
2. **Winner vs. Loser** (능력주의와 일자리의 질)
3. **Umpire's Fairness** (법과 제도의 공정성)
4. **Stars vs. Supporting Casts** (조직 내 player 간의 분배)
5. **Outsiders and Training Opportunities** (조직 내외 분배와 교육기회의 평등)

세대 균열에서 젠더 균열로

세대 균열의 정치화

- 2030: 노동시장 미진입 혹은 연공제 하층
- 의제: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공제 철폐, 일자리 수 증대
- 4050: 노동시장 상층 (고연봉자) + 고용주
- 의제: 정년연장
- 제로섬 게임. 인구구조의 불균등성으로 정치화 제한
- 현 4050이 은퇴하거나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연화될 때까지 세대균열 구조는 온존할 것

젠더 균열의 정치화

- 20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가장 격화, 30대 중반 이후 이완 가능성 vs. 진입 시 격화된 경쟁과 갈등의 장기화 (세대 특성 > 연령 특성)
- 경제적 균열과 갈등이 문화적 정체성 운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Voting Block 창출 가능성

Dilemmas

국민의 힘

-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자본의 압력 + 2030 세대의 압력)
but 4050 정규직 이탈 위험
- 노조의 반대 (협의 채널 전무)
- 젠더 갈라치기의 장기적 효과 0 or minus
- 새로운 갈라치기(예를 들어 외국인 차별)는 서구에서
(하층 노동자 계층에 호소하기 위한) 우파 파퓰리즘의 단골
소재,
하지만 사회갈등 심화, 중도층 및 자본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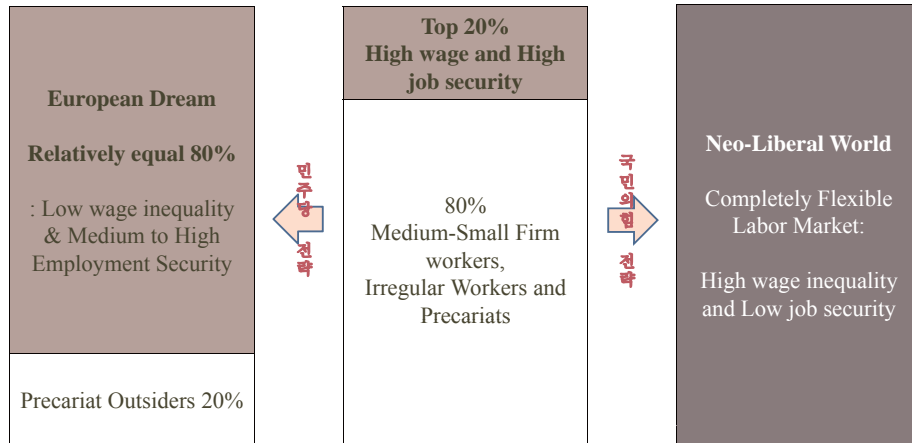
민주당

- 노조와 4050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정년연장 요구
(청년세대 이반 심화)
- 2030 페미니즘과 4050 세대 사이 젠더 감수성 문제를
둘러싼 균열

왜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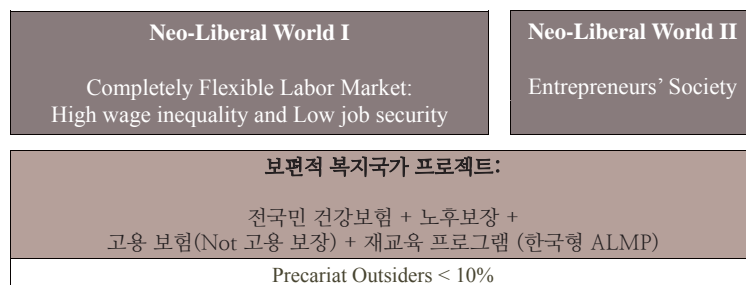
1.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와 유리된 한국의 주요 정치 정당 간 당파적 진영 대립
2. 정당-노조-시민사회를 관통하여 건설된 세대 네트워크의 불평등에 대한 무관심 (혹은 정규직 이해 보호 욕구)과 낮은 정책역량
3.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하는) 한국민들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심리적 장벽이 불평등을 온존시키는 또 다른 간접적인, 문화적인 기제.

Three Ideal-Type Societies



사회적 자유주의

(『불평등의 세대』, 결론 요약)



- 정규직 특권(연공제) 해체 통한 임금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
- 세대 불평등 완화 (청년실업 해소). 50대 이상 재취업 모델 통한 장년-노년 빈곤 완화.
- 직무급제와 공정한 평가제 도입 → 유리천장과 젠더 갈등 완화
- 입직에서 젠더 차별 어느 정도 완화 → 입직시 쿼터 축소 & 조직 내 경력단절 방지와 유리천장 개선

감사합니다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전)한국정치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임성학

- 한국정치학회 회장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한국정당학회 (전)회장
-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 (전)원장



이종화

- 한국경제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겸 G20 셰르파 (2011-2013)



한상만

- 한국경영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하나투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전)한국마케팅학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복잡계학회 회장



이호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초청연설



김병준

-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대통령 정책실장